

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 Ⅲ

韓日無形文化遺產研究

발간사

한국의 국립문화재연구소(현 국립문화재연구원)와 일본의 동경문화재연구소 간 체결된 <2008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한·일 연구교류 합의서>를 시작으로 한·일 무형유산 연구교류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립무형유산원이 2014년에 개원하면서 한·일 무형유산 연구교류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전세계에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한·일 무형유산 연구교류 사업 또한 난항을 겪었지만, 양 기관 간 신뢰와 열정을 통해 팬데믹 국면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이 보고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양 기관에서 연구교류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작성한 연구결과물로, 향후 무형유산 분야 연구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양 기관 연구자들이 다년간 이룩한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무형유산 분야 연구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국립무형유산원장 안형순

発刊にあたって

2008年に日本の東京文化財研究所と韓国の国立文化財研究所(現、国立文化財研究院)との間で締結された「無形文化遺産の保護に関する日韓研究交流合意書」を皮切りに、日韓無形遺産の研究交流がこれまでに続いています。

2014年に韓国の国立無形遺産院が開院し、日韓無形遺産研究交流事業を担当することになって、無形遺産の保存および伝承活性化のための様々な事業を進めています。

2020年から全世界に広がっ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より、日韓無形遺産研究交流事業も難航しましたが、両機関の間で築いてきた信頼と情熱によりパンデミック局面を賢明に乗り越えて、本報告書を発刊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

本報告書は、2016年から2023年にかけて、両機関の研究者が研究交流に参加することで得られた研究結果であり、今後の無形遺産分野における研究発展の基盤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最期に改めて、両機関の研究者が長年にわたって成し遂げた成果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るとともに、これからも無形遺産分野の研究交流がさらに活発になるよう積極的にご支援します。

2023年11月

国立無形遺産院 院長 安馨淳

刊行にあたって

日韓無形文化遺産研究交流事業は、2008年に日本の東京文化財研究所と大韓民国の国立文化財研究所との間で締結された「無形文化遺産の保護に関する日韓研究交流合意書」によって開始され、現在では東京文化財研究所無形文化遺産部と大韓民国国立無形遺産院との間で事業が継続されています。

日本と韓国は古来より文化交流が盛んに行われた国同士ですが、伝統芸能や工芸技術、風俗慣習などには類似点や相違点があり、無形文化遺産の保護のあり方についても類似点や相違点があります。そうした類似点や相違点を互いに確認し合い、両者が共有する問題や課題について情報を交換し議論を深めることで、今後の両国における互いの無形文化遺産の保護に役立てようというのが、この研究交流の目的です。

本研究交流の特色は、毎年双方の研究者が相手国において無形文化遺産に関する在外研究を行い、双方の無形文化遺産保護の現状や課題への理解を深めようとする点にあります。これまでも、双方の研究者が独自の問題意識のもと現地調査を行い、それぞれの課題を相互比較することによって、自国の無形文化遺産の更なる理解と、その保存と活用に向けた研究に関する貴重なヒントを得る機会となってきました。

研究交流事業の成果はこれまで『日韓無形文化遺産研究Ⅰ』(2011年)、『日韓無形文化遺産研究Ⅱ』(2017年)の二冊の報告書にまとめられました。そして本報告書は、2016年10月から2023年3月にかけて実施された第三次研究交流事業の成果をまとめたものです。この間、あいにく新型コロナ禍の影響で在外研究を行う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困難もありましたが、2022年11月にはようやく在外研究を再開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して2023年4月には新しい合意書を調印し、2030年3月まで継続する第四次研究交流事業を開始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今後ますます両国の研究交流が盛んになるとともに、日韓双方において無形文化遺産の保存と活用に資する研究成果が蓄積されていく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本報告書が日韓両国において幅広く活用されることを願ってやみません。

2023年11月

国立文化財機構 東京文化財研究所 所長 齊藤 孝正

간행사

한·일 무형유산 연구교류 사업은 2008년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간에 체결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한·일 연구교류 합의서」를 시작으로, 현재는 대한민국 국립무형유산원과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부간의 교류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활발하게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 한국과 일본은 전통 예능과 공예 기술, 풍속 관습 등에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방식에서도 유사점과 상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과 상이점을 서로 확인하고 양자가 공유하는 문제와 과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논의를 심화함으로써 향후 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 교류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 교류의 특징은 매년 양국의 연구자들이 상대국에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재외 연구를 수행하여 양측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황과 과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도 양국 연구자들이 독자적인 문제의식 하에 현장 조사를 하여 각각의 과제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자국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연구에 귀중한 단서를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구교류사업 성과는 『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Ⅰ』(2011년), 『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Ⅱ』(2017년) 두 권의 보고서로 정리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제3차 연구교류사업의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재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2022년 11월에야 재외 연구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 새로운 합의서를 조인하여 2030년 3월까지 지속되는 제4차 연구교류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양국의 연구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한·일 양국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기여하는 연구 성과가 축적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가 한·일 양국에서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11월

국립문화재기구 동경문화재연구소 소장 사이토 타카마사

목차

발간사 안형순	002
발간에아たって 安馨淳	003
발행에아たって 齊藤孝正	004
간행사 사이트 타카마사	005
일러두기	009
例言	010

한국 전통지식과 생활관습 개념과 지원체계 윤수경 - 일본 민속기술과 비교하여 -	
1. 들어가며	012
2. 한국의 전통지식과 생활관습 그리고 일본의 민속기술	013
3. 민속기술의 보호와 전통지식·생활관습의 활용	017
4. 나오면서	021

韓國의傳統知識·生活習慣의概念と支援体系 尹秀京 - 日本の民俗技術との比較 -	
1.はじめに	022
2. 韓國の傳統知識·生活習慣、日本の民俗技術	023
3. 民俗技術の保護と傳統知識·生活習慣の活用	027
4. 結論に代えて	031

韓國の國家無形文化財(樂器匠)にかかる保存·活用とその周辺 前原惠美	
1. 課題の背景 - 日本の傳統芸能が直面する2つの課題 -	034
2. 樂器製作者の現状調査	035
3. 教育機關等の現状調査	039
4. まとめ	040

韓國의 국가무형문화재(악기장)에 관한 보존 및 활용과 그 주변 마에하라 메구미	
1. 과제의 배경 - 일본의 전통예능이 직면한 두 가지 과제 -	042
2. 악기제작가 현황 조사	043
3. 교육기관 등의 현상조사	047
4. 결론	048

한국과 일본의 화전기술 비교와 일본 사례 연구 강경혜	
1. 들어가며	052
2. 한국의 화전과 화전의 정리	054
3. 한국과 일본의 화전기술 비교	055
4. 일본 화전 사례연구	059
5. 맺음말	062

韓國と日本の焼畑技術の比較と日本の事例研究 姜敬惠	
1.はじめに	064
2. 韓國の焼畑および焼畑の整理	066
3. 韓國と日本の焼畑技術の比較	068
4. 日本の焼畑事例についての研究	071
5. まとめ	074

人類学者·泉靖一と濟州島 石村智	
1.はじめに	078
2. 泉靖一の濟州島調査(1936-1937)	078
3. 泉靖一のアイヌ民族調査(1951-1953)	081
4. 泉靖一と日本の人類学黎明期のポストコロナル的状况	083

인류학자 이즈미 세이치와 제주도 이시무라 도모 - 포스트 콜로니얼적 비판 -	
1. 시작하며	085
2.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 조사(1936~1937)	085
3. 이즈미 세이치의 아이누 민족 조사(1951~1953)	088
4. 이즈미 세이치와 일본 인류학 여명기의 포스트 콜로니얼적 상황	090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발효 후 한일 무형유산보호 노력 최숙경 - 공동체 종목 및 등록무형(민속) 문화재 제도를 중심으로 -	
1. 들어가면서	094
2. 한국의 무형유산보호 사례	095
3. 일본의 무형유산보호 사례	097
4. 나오면서	105

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発効後の韓日の無形遺産保護に向けた取り組み 崔淑慶 - 共同体種目及び登録無形(民俗)文化財制度を中心に -	
1.はじめに	109
2. 韓国における無形遺産保護の事例	110
3. 日本における無形遺産保護の事例	112
4. おわりに	120

新型コロナ禍の日本の無形文化財・無形民俗文化財 | 久保田裕道・前原恵美

I. 新型コロナ禍における日本の無形民俗文化財(久保田裕道)

- 1.はじめに 124
- 2. 無形民俗文化財の中止 125
- 3. 無形民俗文化財の変容 126
- 4. 継承のための取り組み 128
- 5. むすび 130

II. 新型コロナ禍における日本の無形文化財(前原恵美)

- 1.はじめに 131
- 2. 公演数に表れたコロナ禍の影響 132
- 3. 関係業界への影響と支援 134
- 4. withコロナの今後 135

코로나19 범유행 시대 일본의 무형문화재·무형민속문화재 | 구보타 히로미치·마에하라 메구미

I. 코로나19 범유행 시대의 일본 무형민속문화재(구보타 히로미치)

- 1. 시작하며 139
- 2. 무형민속문화재의 중지 140
- 3. 무형민속문화재의 변용 141
- 4. 계승을 위한 노력 144
- 5. 마치며 145

II. 코로나19 범유행 시대의 일본 무형문화재(마에하라 메구미)

- 1. 시작하며 146
- 2. 공연 횟수에 나타난 코로나19 범유행의 영향 147
- 3. 관련업계에 미친 영향과 지원 149
- 4. with 코로나 이후 150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무형유산 관련 대응과 변화 | 강경혜·류한선

- 1. 들어가며 156
- 2.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관련 대응과 변화 157
- 3. 코로나19에 따른 무형유산 조사현장 현황 162
- 4. 맺음말 164

新型コロナによる韓国無形文化遺産に関する対応と変化 | 姜敬恵・柳漢仙

- 1.はじめに 165
- 2. 新型コロナによる国家無形文化財に関する対応と変化 166
- 3. 新型コロナによる無形遺産の調査現場の現状 171
- 4. まとめ 173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국립무형유산원과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간의 제3차(2016년 10월~2023년 3월) 무형문화유산 분야 연구교류 성과를 담은 보고서이다. 본 무형유산 연구교류는 2008년 대한민국 국립문화재연구소(현 국립문화재연구원) 무형문화재연구실과 일본 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부의 교류로 시작되었으며, 제1차 연구교류(2008년~2010년)의 성과는 『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I』(2011)로, 그리고 제2차 연구교류(2011년~2015년)의 성과는 『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II』(2017)로 발간하였다.

제3차(2016년 10월~2023년 3월) 연구교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 교류(상대국 파견)]

2017년

임채석 「일본 소재 한반도 관련 무형문화유산 문헌·자료 조사」(10월23일~11월1일)

2018년

이시무라 도모 「인류학자 이즈미 세이치(泉靖一)에 의한 제주도 조사의 재검토」(4월 23일~5월 7일)

윤수경 「일본의 민속기술 기록과 전승 현황 조사 연구」(10월15일~11월3일)

2019년

마에하라 메구미 「전통악기의 제작·수리 기술 조사 및 전통음악의 보급·계승에 관한 조사」(7월 1일~19일)

강경혜 「일본의 무형민속문화재 조사 및 전승 현황에 관한 연구-특히 농경(화전) 관련 민속기술 분야에 대해서-」(9월 16일~10월 5일)

2022년

최숙경 「일본의 무형문화재 등록제도에 대해서」(11월 24일~12월 12일)

[성과발표회]

2023년 5월 24일

<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교류 성과 발표회> (도쿄: 동경문화재연구소)

- 윤수경 「한국 전통지식과 생활관습 개념과 지원체계: 일본 민속기술과 비교하여」
- 마에하라 메구미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악기장)에 관한 보존 및 활용과 그 주변」
- 강경혜 「한국과 일본의 화전기술 비교와 일본 사례 연구」
- 이시무라 도모 「인류학자 이즈미 세이치와 제주도: 포스트 콜로니얼적 비판」
- 최숙경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협약의 발효 후 한일 무형유산보호 노력: 공동체 종목 및 등록무형(민속) 문화재 제도를 중심으로」
- 마에하라 메구미·구보타 히로미치 「코로나19 범유행 시대의 무형문화재·무형민속문화재」
- 강경혜·류한선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무형문화유산 관련 대응과 변화」

본 보고서는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양진조 과장)에서 총괄·편집했다. 그리고 일본 연구진 논문정리는 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부(이시무라 도모 부장)에서 담당했다. 또한 원고 번역은 주식회사 텐나인커뮤니케이션과 김소현(와세다대학교 연극박물관)이 담당했다.

例言

本書は文化財庁国立無形遺産院(大韓民国)と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東京文化財研究所(日本)との第3次無形文化遺産研究交流(2016年~2023年)の成果報告書である。本研究交流は、2008年より大韓民国国立文化財研究所(現 国立文化財研究院)無形文化財研究室と東京文化財研究所無形文化遺産部との研究交流として開始され、第1次研究交流(2008年~2010年)の成果については2011年に刊行された『日韓無形文化遺産研究I』としてまとめられた。および第2次研究交流(2011年~2015年)の成果については2017年に刊行された『日韓無形文化遺産研究II』としてまとめられた。

なお本研究交流の第3フェーズの活動内容は下記の通りである。

【研究交流(相手国派遣)】

2017年

林采石「日本所在の朝鮮半島関連無形文化遺産の文献・資料の調査」(10月23日~11月1日)

2018年

石村智「人類学者・泉靖一による済州島調査の再検討」(4月23日~5月7日)

尹秀京「日本の民俗技術の記録と伝承の現況調査研究」(10月15日~11月3日)

2019年

前原恵美「伝統楽器製作・修理技術の調査および伝統音楽の普及・継承に関する調査」(7月1日~19日)

姜敬恵「日本の無形民俗文化財の調査および伝承の現況に関する研究―特に農耕(焼畑)関連の民俗技術の分野について―」(9月16日~10月5日)

2022年

崔淑慶「日本の無形文化財の登録制度について」(11月24日~12月12日)

【成果発表会】

2023年 5月 24日

<日韓無形文化遺産 研究交流成果発表会> (東京: 東京文化財研究所)

- ・ 尹秀京「韓国の伝統知識・生活習慣の概念と支援体系：日本の民俗技術との比較」
- ・ 前原恵美「韓国の国家無形文化財(楽器匠)にかかる保存・活用とその周辺」
- ・ 姜敬恵「韓国と日本の焼畑技術の比較と日本の事例研究」
- ・ 石村智「人類学者・泉靖一と済州島」
- ・ 崔淑慶「ユネスコ無形遺産保護条約発効後の韓日の無形遺産保護に向けた取り組み：共同体種目及び登録無形(民俗)文化財制度を中心に」
- ・ 前原恵美・久保田裕道「新型コロナ禍の無形文化財・無形民俗文化財」
- ・ 姜敬恵・柳漢仙「新型コロナによる韓国無形文化遺産に関する対応と変化」

なお本書は国立無形遺産院調査研究記録課(梁鎮潮 課長)の指導の下、編集を行った。また日本側の論文のとりまとめについては東京文化財研究所の石村智(無形文化遺産部 部長)があたった。また原稿の翻訳は株式会社テンナインコミュニケーションおよび金昭賢(早稲田演劇博物館)が行なった。

한국 전통지식과 생활관습 개념과 지원체계

- 일본 민속기술과 비교하여 -

韓国韓の伝統知識・生活慣習の概念と支援体系

- 日本の民俗技術との比較 -

윤수경(尹秀京)
문화재청(文化財廳)

한국 전통지식과 생활관습 개념과 지원체계

- 일본 민속기술과 비교하여 -

윤수경(문화재청)

1. 들어가며

한국의 무형유산 제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선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무형유산 전승 여건을 반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제도 개선 중 가장 큰 전환을 초래한 것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로, 이 법은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무형유산법은 2003년 10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하 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이 협약을 반영하여 한국의 무형유산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로이 정비한 법률이다. 무형유산 원형 유지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고, 무형유산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 정책 등이 마련되었으나,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무형유산 범주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무형유산법 시행 이전 한국의 무형유산 범주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로 한정되었으나, 2016년 이후 ① 전통적 공연·예술 ②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③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④ 구전 전통 및 표현 ⑤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⑥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⑦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7개 범주로 확대되었다.

위 7개 범주 중에서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과 “구전 전통 및 표현” 그리고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등은 새롭게 추가된 무형유산 범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신규로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은 위의 범주에 해당되는 종목이 대부분이며, 현재도 이와 관련된 여러 조사·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 무형유산이 공연이나 공예품 등 일정한 형태로 구체화가 가능한 종목인

것에 반해, 전통지식이나 생활관습 등은 사람들의 사고체계와 생활양식에 근거하여 오히려 구체적인 형태가 불분명하고 해당 범위를 설정하기가 매우 불분명한 종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무형유산 지원 정책과는 차별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해졌다.

2018년 조사를 진행할 당시 “제다” 등 5개의 전통지식이 신규로 지정되었으나 기존 무형유산과 달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종목으로 지정되어, 기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중심의 지원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일본에서는 전통지식 등을 어떤 식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지를 파악해 보고 이를 한국 제도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다만 짧은 조사기간과 현지여건 등으로 당초 계획했었던 제도의 수립과 운영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웠다. 또한 조사 당시에서 5년여가 흐른 지금 한국에서는 전통지식 등의 종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 중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의 전통지식과 생활관습이 일본의 민속기술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이는 가와 그에 따라 어떠한 지원체계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아울러 살펴보고자 하겠다.

2. 한국의 전통지식과 생활관습 그리고 일본의 민속기술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2004년 6월 9일 일부 개정(2005년 4월 1일 시행)되었는데, 이 개정으로 무형민속문화재에 민속기술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첨가됨에 동시에 민속문화재는 풍속·관습, 민속예능, 민속기술의 세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지정·선택·등록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해 민속문화재 보호를 도모하게 되었다.

한국과 달리 무형유산 관련 제도의 변화가 크게 없는 일본의 제도에서, 2004년 개정으로 제도에 포함된 민속기술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분야이다. 이는 한국과 유사하게 2003년 협약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¹⁾

민속기술이 제도로 정립되기 이전에도 모내기 풍습이나 어로 습속 등이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기록 작성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할 민속문화재로 선택되어 왔다. 또한 농경기술이나 어로기술과 관련된 도구들은 유형민속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기도

1) IWAMOTO MICHIIYA, 「Comparative study of the strategic acceptance and management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of Japan and Koewa」, 2012.

하였다. 다만 그 도구를 만드는 기술은 보호되지 않고,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도구의 쓰임새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그 판로 또한 사라지고 있어 제도적으로 기술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지는 것이 민속기술이라고 이해된다.

“기술”이라는 용어로 인해 민속기술은 한국의 전통기술에 대응된다고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민속기술은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생활과 생산에 대한 기술로 정의되며, 그 범주가 다시 크게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해 온 산업에 관한 “생산기술”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온 의식주에 관한 “생활기술”로 구분되기에, 이는 한국의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또는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분야와 유사하다고 여겨진다. 실제 지정된 민속기술을 살펴보면 유사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2023년 현재 민속기술은 총 19건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생산기술이 16건, 의식주 관련이 3건이다.

구분	명칭	지정연도	소재지
생산 생업	쓰가루 해협 및 주변 지역의 일본식 목조선 제작기술	2006	아오모리현 쓰가루 해협 주변 지역
	가즈사 굴삭 기술	2006	지바현 가즈사 지방
	벳부 묘반 온천 유노하나(입욕제) 제조기술	2006	오이타현 벳부시
	오기 다라이부네(나무통 배) 제작기술	2007	나카타현 사도시
	노토 아게하마시 제염기술	2008	이시카와현 스즈시
	요시노 다루마루(나무통) 제작기술	2008	나라현 요시노 지방
	아키타 이타야미(키) 제작기술	2009	아키타현 아키타시, 센보쿠시
	기즈미 후지미(키) 제작기술	2009	지바현 소사시
	고노스 아카모노(인형) 제작기술	2009	사이타마현 고노스시
	론덴·구마나시 후지미(키) 제작 기술	2013	도야마현 히미시
	나가라가와강 가마우지 은어잡이 기술	2015	기후현 기후시, 세키시
	아와의 타후(배) 제조기술	2017	도쿠시마현
	도바와 시마의 해녀 기술	2017	마에현
	와지마 해녀 기술	2018	이시카와현
	아와 반차의 제조기술	2021	도쿠시마현
	이시즈치 흥차의 제조기술	2023	에히메
의식주	에나코 반도리(도롱이) 제작기술	2007	기후현 다카야마시
	옛추 후쿠오카 스게가사(삿갓) 제작기술	2009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요론섬 바쇼후(천) 제작기술	2020	가고시마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의 전통지식과 생활관습은 유네스코 협약에 의해 새롭게 추가된 분야이다. 이는 전통사회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던 지식과 관습이 제도의 제약으로 무형유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제도 안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후 2022년까지 총 12건(전통지식 5건, 생활관습 7건)을 지정하였는데, 이는 연간 평균 2건을 신규 지정한 것으로 한국이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식과 관습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구분	명칭	지정연도	소재지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해녀	2017	제주도 및 동해안 등 전역
	제염	2018	
	전통어로방식-어살	2019	어촌 지역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2020	한반도 전역
	갯벌어로	2021	서·남해안 전역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제다	2016	한반도 남부 지역
	김치담그기	2017	한반도 전역
	온돌문화	2018	한반도 전역
	장 담그기	2018	한반도 전역
	막걸리 빚기	2021	한반도 전역
	떡 만들기	2021	한반도 전역
	한복생활	2022	한반도 전역

두 나라의 지정 종목을 살펴보면, 일본의 민속기술로 지정된 해녀 기술이나 차 관련 제조기술, 제염기술 등은 한국의 제염, 제다, 해녀 등과 유사 종목임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한국에서는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또는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분야로 지정되어 있다.²⁾

이처럼 민속기술과 전통지식·생활관습이 유사한 분야로 생각되나 그 지정 조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일 양국이 위 분야를 인식하고 지정한 목적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일본의 배 제조기술 등과 유사 종목인 한국의 삼베짜기 또는 명주짜기 등은 현재 한국에서는 전통기술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16년 무형유산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종목들이다.

우선 일본의 민속기술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적 소산이며 생활의 추이를 관찰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일단 사라지면 그 기술을 복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생업구조와 생활의 변화 등으로 현재 단절 위기에 처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정 시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1. 생업에 관한 기술 중 전통적인 제작 기술 등으로 제작된 것이 지역주민의 전통적인 생활에 쓰이고 있는 것. 전통의 제작 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으로 하는 일로 속한 것. 제품이 전통적 소재를 이용한 것
2. 의식주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특색을 보여주는 전통적이면서도 긴급성이 높은 것
3. 보호단체(보존회 등)가 조직되어 있는 등 지역의 전승의욕이 높고 기술의 전승이 기대되는 상황에 있는 것
4. 계절 한정적인 기술 등 그 의 소멸의 위기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기술

정리하자면 “전통적이면서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는 생업·의식주 관련 기술 중 현재 소멸의 위기가 있으나 향후 전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민속기술로 검토한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지정 명칭도 한국에 비해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의 특정 기술로 명명되고 있으며, 각 종목별로 보존단체가 형성되어 전승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의 전통지식 및 생활관습은 현재까지 특정한 전승지역과 보존단체를 설정하여 지정한 사례가 없다. 이들은 모두 공동체종목으로 지정되었는데, 공동체종목이란 한반도 전역에서 많은 국민들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로 특정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을 말한다. 즉, 한국에서는 전통기술과 생활관습을 지정할 때 소멸의 가능성보다는 현재도 지속가능한 종목이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적 가치를 주요한 지정 조건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에 지정된 ‘한복생활’을 예로 살펴보면, 지정의 주요 사유로 “역사·미학·디자인·패션·기술·경영(마케팅)·산업·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학술연구가 왕성하고 앞으로도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이 큰 점”이나 “현재에도 생산 주체, 연구기관, 가족 공동체 등 다양한 전승 공동체를 통하여 한복을 착용하는 등 한복생활 관련 전통지식이 전승·유지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전통과 지역성을 강조하는 일본 민속기술과 한국문화의 대표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한국의 전통지식·생활관습은 지원 제도의 차이와도 연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민속기술의 보호와 전통지식·생활관습의 활용

일본의 민속기술은 기존의 무형민속문화재와 동일한 방식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의무적 지원보다는 지역의 전승자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가가 실시하는 주요 보조로는 무형의 민속문화재 조사사업에 대한 보조, 보존 및 전승사업과 활용사업 등에 대한 조성이 있다.³⁾

이러한 체계에서 한국보다 전승자들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 또는 지방단체는 그 지원에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다. 풍속관습과 민속예능과 동일하게 기술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지정하지는 않으며, 기술 보유자를 포함한 전승을 지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보호단체를 특정하여 전승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속기술 보호제도 실재를 노토 아게하마식 제염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소금은 대체적으로 바닷물을 활용한 자염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자염 생산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 그중 스즈시에서는 모래를 기반으로 만든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아게하마식 제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은 평지가 적은 지역으로 농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아 일찍부터 농산물을 대신하여 소금을 생업의 기반으로 삼아 왔는데, 노동의 양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일찍부터 주민들의 협력이 강조되어 온 지역이었다.

소금 생산 방식을 간략히 살펴보면 20cm 정도 두께의 점토를 깔고 그 위에 바닷물을 부어 단단하게 만든 후, 그 위에 모래를 편다. 이 모래 위에 바닷물을 붓고 모래를 가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하여 모래에 소금기가 배게 만든 후, 소금기가 모인 모래를 모아 다시 바닷물을 부어 거기에 모인 소금물을 끓여 소금을 얻어내는 방식이다.

1959년을 기점으로 전통염전이 사라졌다가 1960년대부터 다시 이를 보존해 오고 있는데, 일반 산업으로서의 보호는 아니고 스즈시 관광자원으로서 제염을 염두에 두고 지정·보호를 시도했었다. 현재는 관광과 체험교육을 주목으로 소규모 염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생산물인 소금은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정도의 수량이다.

아게하마식 제염을 주로 보전해 나가고 있는 사람은 스즈시의 카쿠하나 유타가 상이었는데, 그는 중요무형민속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어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민속기술은

3) 이마이시 미기와, 「무형의 민속문화재로서의 ‘민속기술’과 그 보호」, 『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 II』(동경: 동경문화재단연구소, 2017), 163쪽.

개인이 아닌 보호단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카쿠하나 유타가 상은 개인이 인정된 사례적인 사례였다.

카쿠하나 상은 대대로 스즈시에서 제염에 종사했던 집안으로 1959년 근방 염전 대부분이 폐쇄될 때, 당시 근방 100여 개의 염전 가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염전 운영을 지속했었다. 그러나 1968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어 염전을 비롯한 기반 시설이 모두 사라졌으나, 시의 지원으로 복구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8년 당시 카쿠하나 상과 그 아들이 염전 운영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태풍으로 개인 염전이 사라진 관계로 현재 스즈시에서 약 100평 정도의 염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다. 카쿠하나 상의 경우, 시지정 문화재 보유자에서 현지정 문화재 보유자로,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점차 변경이 된 사례이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된 이후 비교적 보조 상황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대표적인 지원 사례로 소금을 굽는 가마와 가마가 위치한 염옥을 약 1억 원의 지원을 받아 마련하였으며, 그 외 도구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별도로 스즈시의 제염 관련 지원에서 주요한 것은 소금기념관 엔데무라라고 할 수 있다. 본래는 시에서 건립한 기념관으로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발전하였다. 주로 소금생산에 대한 체험과 관광, 관련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데, 실생활에서 멀어진 기술을 관광과 교육용으로 보존하면서 자체적인 경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의 민속기술은 중앙정부의 일정한 지원은 없지만 지방정부 또는 공공단체 그리고 보존회(제염의 경우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민속기술을 기록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문화재 기록은 국가를 비롯하여 여러 주체에서 기록이 진행되고 있으나, 2018년 당시 민속기술에 대한 기록화는 미진한 상태였다. 동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당시 기즈미 후지미(키) 제작기술 기록을 완료된 상태였다.

2019년도에는 민속기술 기록화 사례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고민하는 『민속기술의 동태기록 작성에 관한 보고』를 편찬하였다. 이 책에 따르면 일본의 민속기술 기록화의 목표는 “민속기술을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후대에 전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민속기술을 포함한 무형유산은 사회 및 자연의 환경과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특정한 재해의 발생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소실의 위기가 항상 발생할 수 있기에 그만큼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기즈미 후지미(키) 제작기술을 비롯하여 조선 기술 및 제다 기술 등 유형이 다른 3건의 민속기술 기록화를 중심으로 기술의 전승이 중단되었을 때 어떠한 기록이 있으면 기술의 복원이 가능할지를 점검하고 있다.

기즈미 후지미(키) 기록화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키는 곡물의 선별이나 운반 등에 사용되는 도구로 1960년대 중반까지 연간 8만 개가 생산되며 관동 지방에서 제분이나 제다 등의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로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장인의 고령화와 후계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2009년 민속기술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보존회가 결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매월 1회 교육을 통해 후계자 육성을 꾀하고 있으나, 강사와 학생의 노령화로 전승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기즈미 후지미(키) 기록화는 전승 교실에서 기술습득에 도움이 되는 기록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조사와 기록을 진행하였다. 또한 전체 공정 중 가장 기술을 요하는 재료의 채집과 가공부터 키 만들기까지 전 과정을 영상에 담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영상을 검수할 때 장인에게 확인을 하는 것은 물론, 기술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기술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부를 검토하였다. 일례로 장인의 정면이나 측면에서 촬영하는 일반적인 카메라 각도로는 장인의 움직임이 거울처럼 좌우 반전되어 기술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전승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장인과 같은 눈 높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어깨너머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고, 복잡하고 빠른 손기술을 동시에 포착하기 위해 촬영자가 화면에 나오는 것을 감수하고 여러 대의 카메라를 근접하여 촬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촬영 후 영상은 최소한으로 편집을 거쳐 400여 분의 완성본을 동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절제된 자막과 작업자의 설명을 중심으로 현장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기록화 사업과 유사하다. 다만 복원의 가능성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영상기록을 제작하고 있으며 교육생의 시각을 중심에 놓는 것은 한국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의 전통지식·생활관습은 단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무형유산이 아니라 현재도 지속가능하고 대표성을 지닌 무형유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무형문화재와는 달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중심으로 보전을 위한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다만 2016년 제다 지정 이후 근간까지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기념행사 관련 사업 등이 행해졌다.

그러나 종목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전통지식·생활관습 종목을 전승·향유하는 주체들의

4) 한국의 기록화도 전승 교재로 사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고 있기는 하나, 교육생의 입장에서 영상을 점검하는 등의 절차를 볼 때 일본이 전승자의 입장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가마우지 배 제작 기술 기록화는 장인이 지도나 시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승자가 직접 제작을 하는 형태로 기록영상이 제작되었다.

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과 새로운 지원방식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지식·생활관습 등 공동체종목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무형유산법을 개정하여 “전승공동체” 개념을 신설하였다. 전승공동체란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로 정의된다. 즉, 공동체종목을 향유하고 있는 모든 단체는 전승공동체가 될 수 있다.

전승공동체 개념 법제화를 계기로 2023년부터는 전승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되기도 하였다. 각 종목에 대한 조사·연구, 교육 운영,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각종 활용 사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주된 내용으로, 전승공동체-시·도-국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① 조사·연구	①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기록화·목록화 작업 ② 지역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기록화·목록화 작업(전승자 구술채록 등)
② 교육프로그램	③ 상시·정기 교육(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 ④ 비정기 교육(일반인 대상 단기 체험 프로그램 등)
③ 공간 마련	⑤ 신규 네트워크 구축·기존 네트워크 활성화 * 예산 특성상 물리적 공간 마련은 지원 제외
④ 행사 개최	⑥ 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행사(축제, 경연대회, 국제회의 등)
⑤ 무형유산의 창의적 활용	⑦ 무형유산의 현재적 역할 모색·창의적 활용 시도(지역사회 기여 등)

이 사업은 시행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업으로 그 결과와 효용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그러나 그동안 홍보 등의 간접지원 중심에서, 전국에 산재한 전승공동체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무형유산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통지식·생활관습을 제외한 한국의 무형문화재 정책의 방향은 현재까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해당 종목을 전형대로 잘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반면 전승공동체에 대한 정책은 전형의 유지나 보전 등과는 그 궤를 달리하여, 해당 종목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향유하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나오면서

한국의 전통지식 및 생활관습 그리고 일본의 민속기술은 무형유산 중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유사한 성격의 무형유산이 한일 양국에서 비교적 최근 제도 안으로 흡수되었다. 시기적으로 판단하건데 양국 모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국내 무형유산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양국 모두 일상에 소소하게 퍼져있는 것들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제도로서 선언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무형유산 제도의 장을 열었다고도 판단된다.

그러한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양국이 각 종목을 정의하는 개념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을 하는 세부 요건 및 지원 방식에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민속기술이 기존의 무형문화재 제도 연장선에서 확대된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전통지식 및 생활관습은 그 시작부터 유네스코 협약으로 인한 새로운 흐름에서 생성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기존 것과 다른 제도를 만들어 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한국의 실정이다. ‘보전’과 ‘활성화’라는 간략히 표현될 수 있는 각 국의 정책이 향후 전승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며, 서로의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韓国の伝統知識・生活習慣の概念と支援体系

- 日本の民俗技術との比較 -

尹秀京(文化財廳)

1. はじめに

韓国の無形文化財制度は、1962年に「文化財保護法」が制定されて以来、変化する社会環境や無形文化財の伝承条件を反映して、何度も改正が進められてきた。これまでの改正の中で最も大きな転換をもたらした法律が、「無形文化財の保全および振興に関する法律」(以下、無形文化財法)である。無形文化財法は、2015年に制定され、2016年3月から施行されている。

無形文化財法は、2003年10月にユネスコ総会で採択された「無形文化遺産の保護に関する条約」(以下、ユネスコ条約)を反映して、韓国の無形文化財保護制度と政策の枠組みを新たに整備した法律である。無形文化財の原型維持原則を伝統と現代の調和を図る方向に変更し、無形文化財の社会的需要を促す多様な振興政策などがもうけられ、その主な変換の一つとして無形文化財の範疇が拡大されたことが確認できる。

無形文化財法施行前の韓国における無形文化財の範疇は「演劇、音楽、舞踊、遊戯、儀式、工芸技術」に限られていたが、2016年以降は①伝統的公演・芸術、②工芸、美術等に関する伝統技術、③韓医学、農耕・漁撈等に関する伝統知識、④口伝伝統および表現、⑤衣食住等の伝統的生活習慣、⑥民間信仰等の社会的儀式、⑦伝統的遊戯・祝祭および技芸・武芸という7つの範疇に拡大された。

7つのうち、「韓医学、農耕・漁撈等に関する伝統知識」と「口伝伝統および表現」、「衣食住等の伝統的生活習慣」などが新たに追加された無形文化財の範疇である。そして2016年から新規に指定された国家無形文化財は、上記の範疇に該当する種目が大半であり、現在もこれと関連する様々な調査・研究が行われている。

しかし、既存の無形文化財が公演や工芸品など一定の形で具体化される種目であるのに対して、伝統知識や生活習慣などは人々の思考体系と生活様式に基づくものであり、むしろ具体的な形態が不明で該当範囲の設定が非常に困難な種目であると言える。したがって、既存の無形文化財の支援とは異なる政策が必要となった。

2018年の調査を実施した当時、「製茶」など5つの伝統知識が新規に指定されたが、既存の無形文化財とは異なり、保有者または保有団体を認めない種目に指定され、保有者または保有団体を中心に支援する方式が適用されなかった。そのため、日本では伝統知識などをどのように指定・管理するかを把握して、これを韓国の制度に適用する方法を模索しようとした。ただし、短い調査期間と現地環境などにより、当初計画した制度の策定や運営の全体像の把握は困難であった。また、調査当時から5年が経過した現在、韓国では伝統知識などを支援する事業が行われている。

したがって、本稿では現在までの状況を反映して、韓国の伝統知識と生活習慣における日本の民俗技術との類似性と相違点を把握するとともに、それによって施行される支援体系も併せて検討する。

2. 韓国の伝統知識・生活習慣、日本の民俗技術

日本の「文化財保護法」は、2004年6月9日に一部改正(2005年4月1日施行)され、無形民俗文化財に民俗技術という新しい分野が追加された。これにより民俗文化財は、風俗・慣習、民俗芸能、民俗技術の3分野で構成されることとなり、指定・選択・登録の3つの方法で民俗文化財の保護を図ることとなった。

韓国と異なって大きな変化がみられない日本の無形文化財関連制度において、2004年の改正で制度に含まれた民俗技術は、比較的最近新設された分野である。これは韓国と同様に2003年のユネスコ条約を受け入れる過程で制度化されたとも理解できる¹⁾。

民俗技術が制度として確立される前にも、田植えの風習や漁撈の習俗などが重要無形民俗文化財に指定されたり、記録作成等の措置を講じるべき無形の民俗文化財として選択されてきた。また、農耕技術や漁撈技術に関連する道具は、有形民俗文化財などに指定され保護さ

1) IWAMOTO MICHIIYA, 「Comparative study of the strategic acceptance and management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of Japan and Korea」, 2012.

れることもあった。しかし、その道具を作る技術は保護されず、機械化が進むにつれ道具の用途が急速になくなってその販路も塞がり、制度的に技術を保護するために設けられたものが民俗技術であると理解できる。

「技術」という用語から、民俗技術は韓国の伝統技術に対応すると理解されがちである。しかし、民俗技術は地域で受け継がれてきた生活と生産に関わる技術と定義され、その範疇が生計維持のため使用されてきた産業に関する「生産技術」と日常生活で使われてきた衣食住に関する「生活技術」に大きく分けられることから、韓国の「農耕・漁撈等に関する伝統知識」または「衣食住等の伝統的生活慣習」分野に類似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実際に指定された民俗技術を調べれば類似性がより明確になる。

2023年現在、民俗技術は計19件が指定されており、そのうち生産関連が16件、衣食住関連が3件である。

区分	名称	指定年度	所在地
生産 生業	津軽海峡および周辺地域における和船製作技術	2006	青森県津軽海峡周辺地域
	上総掘りの技術	2006	千葉県上総地方
	別府明礬温泉の湯の花製造技術	2006	大分県別府市明礬
	小木のたらい舟製作技術	2007	新潟県佐渡市小木
	能登の揚浜式製塩の技術	2008	石川県珠洲市清水町
	吉野の樽丸製作技術	2008	奈良県 吉野町
	秋田のイタヤ箕製作技術	2009	秋田県秋田市太平黒沢、 仙北市角館町雲然
	木積の藤箕製作技術	2009	千葉県 匝瑳市木積
	鴻巣の赤物製作技術	2009	埼玉県 鴻巣市
	論田・熊無の藤箕製作技術	2013	富山県 氷見市
	長良川の鵜飼漁の技術	2015	岐阜県 岐阜市、関市
	阿波の太布製造技術	2017	徳島県
	鳥羽志摩の海女漁の技術	2017	三重県
	輪島の海女漁の技術	2018	石川県
	阿波晩茶の製造技術	2021	徳島県 勝浦郡上勝町、 那賀郡那賀町、海部郡美波町
	石鎚黒茶の製造技術	2023	愛媛県西条市
衣食住	江名子バンドリの製作技術	2007	岐阜県高山市江名子町
	越中福岡の菅笠製作技術	2009	富山県高岡市福岡町
	与論島の芭蕉布製造技術	2020	鹿児島県

前述したように、韓国の伝統知識と生活慣習はユネスコ条約によって新たに追加された分野である。これは伝統社会の基盤を形成していた知識と慣習が、制度の制約で無形文化財として認定されなかったところに、制度内で受け入れられる土台が設けられたという点で大きな意味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その後、2022年までに計12件(伝統知識5件、生活慣習7件)が指定されたが、これは年間平均2件が新たに指定されたことで、韓国がこれまで制度の死角にあった知識と慣習の種目に多くの関心を持っていたことをうかがわせる。

区分	名称	指定年度	伝承地域
韓医学、 農耕・漁撈等に関する 伝統知識	海女	2017	済州島および東海岸等の全域
	製塩	2018	
	伝統漁撈方式－漁箭	2019	漁村地域
	人蔘栽培と薬用文化	2020	韓半島全域
衣食住等の伝 統的生活慣習	干潟漁撈	2021	西・南海岸の全域
	製茶	2016	韓半島の南部地域
	キムチ造り	2017	韓半島全域
	オンドル文化	2018	韓半島全域
	醬造り	2018	韓半島全域
	マッコリ造り	2021	韓半島全域
	餅作り	2021	韓半島全域
	韓服生活	2022	韓半島全域

両国の指定種目を確認すると、日本の民俗技術に指定された海女漁の技術や茶の製造技術、製塩の技術などは韓国の海女、製茶、製塩などと類似した種目であることがわかる。これらは韓国では「農耕・漁撈等に関する伝統知識」または「衣食住等の伝統的生活慣習」分野に指定されている²⁾。

このように民俗技術と伝統知識・生活慣習は類似した分野であると考えられるが、その指定条件を詳しく調べると、日韓両国が上記の分野を認識して指定した目的に大きな差があることが確認できる。

2) 日本の麻織物の技術などと類似する韓国の麻織りまたは絹織りなどは、現在伝統技術分野に分類されており、2016年の無形文化財法施行前に指定された種目である。

まず、日本の民俗技術は、国民生活と密接に関わる文化的所産であり、生活の推移を観察するために不可欠な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る。しかし、一度消滅すればその技術を復元することがほぼ不可能であり、生業の構造と生活の変化などによって現在は断絶の危機に瀕しているものがほとんどである。そのため、指定する場合は、下記の条件を中心に選定する。

1. 生業に関する技術のうち、伝統的な技術等で製作されたものが、地域住民の伝統的な生活に使われているもの。製作方法が伝統的な手作業で行うことに属するもの。製品が伝統的な素材を用いたもの
2. 衣食住に関する技術においては、地域的特色を示す伝統的かつ緊急性の高いもの
3. 保護団体(保存会等)が組織されているなど、地域の伝承意欲が高く、技術の伝承が期待される状況にあること
4. 季節限定の技術等、その他消滅の危機性が高いと考えられる技術

つまり「伝統的で地域的特色を示す生業・衣食住に関わる技術のうち、現在消滅の危機にあるが、今後伝承される可能性のある種目」が民俗技術として検討されているといえる。したがって、指定名称においても韓国に比べて具体的に特定地域の特定技術と命名されており、種目別に保存団体が構成され伝承を担っていると見られる。

一方、韓国の伝統知識および生活慣習においては、現在まで特定の伝承地域や保存団体が指定されていない。これらはいずれも共同体種目に指定されたが、共同体種目とは韓半島全域にわたって多くの国民が伝承・享有している文化であり、特定の保有者または保有団体を認定することが困難な種目をいう。つまり、韓国では伝統技術や生活慣習を指定する場合、消滅の可能性よりは現在も持続可能な種目であり、韓国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代表する文化的価値を主な指定条件として設定し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る。

2022年に指定された「韓服生活」の例をみると、指定の主な理由として「歴史・美学・デザイン・ファッション・技術・経営(マーケティング)・産業・教育など、あらゆる方面で学術研究が盛んであり、今後も学術研究資料としての可能性が大きい点」や「現在も生産主体、研究機関、家族共同体など様々な伝承共同体を通じて韓服を着用するなど、韓服生活関連の伝統知識が伝承・維持されている点」が挙げられている。

伝統と地域性を重視する日本の民俗技術と、文化の代表性と持続可能性を優先する韓国の伝統知識・生活慣習は、支援制度の相違とも関係している。これについては、次章で検討することとする。

3. 民俗技術の保護と伝統知識・生活慣習の活用

日本の民俗技術は、既存の無形民俗文化財と同じ方式で支援されているが、これは国の義務的な支援というより、地域の伝承者によって主体的に伝承され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国が実施する主な支援としては、無形の民俗文化財調査事業に対する補助、保存および伝承事業や活用事業などに対する助成がある³⁾。

このような体系では、韓国より伝承者の役割が大きく強調されており、その支援において政府または地方自治体は充実に役割を果たしている。風俗慣習や民俗芸能と同様に、技術を保存している人を保持者に指定するのではなく、技術保持者を含む伝承を支援する人々で構成された保護団体を特定して伝承を続けるようにしている。

能登の揚げ浜式製塩の技術を事例として、民俗技術保護制度の実態を確認すると、次のようである。日本の塩は、主に海水を煮詰めて造る「煮塩」方法で生産されており、地域別に様々な煮塩の生産方式が存在している。そのうち、能登半島の最北端にある珠洲市では、砂を地盤とする塩田から塩を生産する揚げ浜式製塩が行われている。

この地域は、平地が少なく農業に適さないため、古から農産物の代わりに塩を生業の基盤としてきた。製塩業は多大な労力を要するため、この地域では早くから住民同士の協力が強調されてきた。

揚げ浜式の製塩法は、塩田に20cm程の粘土を敷きつめ砂を撒いて、その上に海水を散布し、砂を攪拌して水分を蒸発させる。散布と攪拌を繰り返して乾燥させ、塩分が付着した砂を集め海水を流し、塩分濃度の高いかん水として、釜で煮詰めて塩を製造する方法である。

1959年を基点に伝統的塩田が消えたが、1960年代から再びこれを保存してきているが、一般産業としての保護ではなく、珠洲市の観光資源として製塩を念頭に置いて指定・保護を試みたものである。現在は観光と体験教育を主な目的とする小規模な塩田を運営しており、その塩田から現地で自主的に販売する程度の塩が生産されている。

珠洲市の角花豊氏は、揚げ浜式の製塩を守り続けて、2008年に重要無形民俗文化財に指定された。前述のように、個人ではなく保護団体を指定することが一般的である民俗技術において、角花豊氏が個人として指定されたことは異例であった。

3) 今石みぎわ「無形の民俗文化財としての『民俗技術』とその保護」『日韓無形文化遺産研究Ⅱ』2017年、163頁。

角花家は代々珠洲市で製塩に従事した家系で、1959年に近隣の塩田100ヶ余りが閉鎖になった時にも、唯一塩田を守り続けていた。しかし1968年に台風で大きな被害を受け、塩田をはじめとする基盤施設を全て失ったが、市の支援により復旧され、今に至っている。

2018年当時、角花豊氏とその息子が塩田を守り続けていたが、台風被害で塩田を失ったことで、珠洲市が約100坪の塩田を無償で提供する形で支援を行っていた。角花豊氏の場合、市指定文化財から県指定文化財に、その後は重要無形文化財に指定された事例である。重要無形文化財に指定されたことで、比較的支援の状況が向上したといえる。代表的な支援として、かん水を煮詰める釜と釜を置く釜屋を約1億ウォンの支援を受けて設置し、道具などに対する支援も行われていた。

また、珠洲市の製塩関連の主な支援として、塩の資料館である塩田村が挙げられる。塩田村は、市が建設した資料館であったが、現在は株式会社として運営されている。主に塩づくり体験や観光、関連商品の販売を目的とするが、唯一珠洲市で受け継がれている揚げ浜式製塩技術を観光と教育用として保存しながら、自主的な経営によって収益を生み出していた。このように、日本の民俗技術における政府の一定した支援はなされていないが、地方自治体・公共団体・保存会(製塩の場合は保持者)を中心に伝承が行われている。

さらに、民俗技術を記録する事業も進められている。文化財の記録は文化庁をはじめ、様々な関連機関により行われている。2018年当時は、民俗技術の記録化は不十分であったが、東京文化財研究所では木積の藤箕製作技術の記録が完了していた。

東京文化財研究所では、2019年度に民俗技術の記録化の事例を検討し、今後の課題について考察する『民俗技術の記録制作事業報告書』を刊行した。この報告書によると、日本における民俗技術の記録化は「民俗技術を災害等から守り、後世に伝えていくためのひとつの方法」とされている。特に民俗技術を含む無形遺産は、社会や自然環境と密接な関係にあり、災害等の緊急事態時ではなくても常に消滅の危機にあることから、記録の重要性が強調されている。実際に、木積の藤箕製作技術をはじめ、造船技術や製茶技術など種類の異なる3件の民俗技術の記録化を中心に、技術の伝承が途絶えた場合、どのような記録があれば技術の復元が可能か検討されている。

木積の藤箕製作技術を事例として、民俗技術の記録化を確認する。箕は穀物の選別や運搬など生業の現場に不可欠な道具として、1960年代半ばまで年間8万個が生産され、関東地方の製粉や製茶の工場などで多く使われてきた。しかし、社会環境の変化やプラスチック製品の普及により需要が急減したことで、職人の高齢化とも相まって後継者が不足している。

2009年に重要無形民俗文化財に指定されたことを契機に保存会が結成され、毎月伝承教室を開いて後継者育成を図っているが、職人と後継者の高齢化により伝承の継承は不明な状況である。そのため、木積の藤箕製作技術の記録化は、伝承教室で技術習得に役立つ記録を作成することも目標として、2015年から2017年までの約3年間にわたって調査と記録が行われ、原材料の採集・加工から箕づくりまでの一連の工程が映像に収められていた。

注目すべきことは、映像を検収する際、職人に確認することはもちろん、技術を学んでいる後継者にも技術習得に役立つことを検討した点である。その一例として、職人の正面や側面から撮影する一般的なカメラアングルでは、職人の動きが鏡のように左右反転して技術を理解しにくいという後継者の指摘を受け入れて、職人と同じ目線を確保できるよう肩越しにカメラを設置し、複雑かつ迅速な手技を同時に捉するために、撮影者が画面に映っても、複数のカメラで近接して撮影する方式を採用した。最小限の編集作業を経て完成された7時間弱におよぶ映像は、東京文化財研究所のホームページで公開されている。

簡略な字幕表示と作業者の説明を中心に、現場のありのままの姿を収めようとする点は、韓国の記録化事業と類似している。ただし、技術が失われた場合に復元を可能にするという明確な目標のもとで映像記録を製作しており、後継者の視点を重視するところで韓国とは多少の違いが見られた⁴⁾。

前述したように、韓国の伝統知識・生活慣習は、断絶の危険から保護されるべき無形遺産ではなく、現在も持続可能で代表的な無形遺産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そのため、従来の無形文化財とは異なり、保有者または保有団体を中心とする保存のための支援対象からは除外された。ただし、2016年製茶が指定されてから現在まで、広報および活性化のための教育プログラムや記念イベントなどの関連事業は行われてきた。

しかし、種目が次第に増加するにつれ、伝統知識・生活慣習の種目を伝承・享有する主体の活動を支援すべき必要性和新しい支援方式が要求された。これにより、伝統知識・生活慣習などの共同体種目を支援するため、2022年に無形文化財法が改正され「伝承共同体」の概念が新設された。伝承共同体とは、「無形文化財を地域的または歴史的に共有し、一定の連帯感およびアイデンティティを持って自発的に無形文化財を実現・享有することによって伝承してい

4) 韓国の記録化も伝承教材として使用されることを念頭に置いて製作されているが、伝承者の立場で映像を検収するなどの取り組みをみると、日本が伝承者の立場をより重視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さらに、鶺鴒製作技術は、職人が指導や試演を行い、これをもとに伝承者が直接製作する形で記録化された。

る共同体」と定義される。つまり、共同体種目を享有しているすべての団体は、伝承共同体になれる。

伝承共同体の概念の法制化を契機として、2023年からは伝承共同体の活動を支援する「伝承共同体活性化支援」プログラムが新たに開始されたりもした。各種目に対する調査・研究、教育運営、地域住民を中心としたネットワーク構築、各種活用事業などを支援するプログラムが主な内容で、伝承共同体・市・道・国が有機的に結合されて推進する事業である。

① 調査・研究	① 専門機関主導の記録化・目録化作業 ② 地域共同体が直接参加する記録化・目録化作業(伝承者の口述採録など)
② 教育プログラム	③ 常時・定期教育(大学および研究機関との連携教育) ④ 不定期教育(一般人向けの短期体験プログラムなど)
③ 空間づくり	⑤ 新規ネットワークの構築・既存ネットワークの活性化 * 予算の特性上、物理的な空間を提供する支援は除く
④ イベント開催	⑥ 無形遺産の活性化のためのイベント (フェスティバル、コンテスト、国際会議など)
⑤ 無形遺産の 創意的活用	⑦ 無形遺産の現在の役割の模索・創意的活用の試み(地域社会への貢献など)

この事業は、施行されて1年足らずのもので、その結果と効用性を評価するには、まだ時期早々といえる。しかし、この間広報などの間接支援を中心に、全国に散在した伝承共同体を制度の中に引き込み、積極的な活動を誘導している点に意味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

また、新しい無形文化財政策のビジョンを提示している点においても示唆するところは大きい。伝統知識・生活慣習を除いた韓国の無形文化財における政策の方向性は、保有者または保有団体が該当種目の原型を維持できるよう支援・管理することを基本としてきた。一方、伝承共同体に対する政策は、原型の維持や保全などとはその軌を異にし、該当種目を創意的に活用して多様な立場から享有できるよう拡散させることに重点を置い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る。

4. おわりに

韓国の伝統知識および生活習慣、そして日本の民俗技術は、無形文化財の中で日常生活と最も密接な関連性を持っている種目である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に類似した性格の無形文化財が、日韓両国において制度の中に収められたのは比較的最近のことである。時期的に、両国ともユネスコ条約によって国内の無形文化財の保護制度と政策の枠組みを整備する観点から始まったものと見られる。これを通じて両国共に日常の中でささやかに広がっているものの価値を再認識し、その重要性を制度として宣言したという点で、新しい無形遺産制度の場を開いたとも考えられる。

このように共通した視点を持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両国が各種目を定義する概念には違いがあり、それによって指定の細部要件や支援方式に大きな相違があることは興味深いところである。

これは上記のように、日本の民俗技術が既存の無形文化財制度の延長線上で拡大されたものであるとすると、韓国の伝統知識および生活習慣は、ユネスコ条約による新しい流れから生成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で、相違が明確になる。韓国では、新しい法律を作り、既存のものとは異なる制度を設けて、様々な施策を試みている。「保全」と「活性化」という言葉で簡略に表現できる各国の政策が、今後の伝承環境にどのような変化をもたらすかを注目し、相互の支援体系を整備するきっかけとなることであろう。

韓国の国家無形文化財(樂器匠) にかける保存・活用とその周辺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악기장)에 관한
보존 및 활용과 그 주변

前原恵美(마에하라 메구미)
東京文化財研究所(동경문화재연구소)

韓国の国家無形文化財(楽器匠)にかかると保存・活用とその周辺

前原恵美(東京文化財研究所)

本報告は2019年7月1日から2019年7月19日に韓国で実施した調査概要に若干追記したものである。なお当該調査の一部は、許諾を得て調査対象者による校正の上、「楽器を中心とした文化財保存技術の調査報告3」(前原恵美・橋本かおる、『無形文化遺産研究報告』14号、2020年3月¹⁾)として掲載している。

1. 課題の背景 —日本の伝統芸能が直面する2つの課題—

1) 重要無形文化財の指定・認定と選定保存技術の選定・認定

日本の伝統芸能関係の重要無形文化財の指定件数は50件(52件)²⁾、保持者・各個認定数51名(53名)、保持者・総合認定団体数14団体(14団体)である。一方、芸能を支える文化財保存技術³⁾は、選定件数13件(16件)、保持者数8名(9名)、保持団体数5団体(7団体)である。たいいていこの芸能は複数の保存技術で支えられているので、現状では重要無形文化財の指定・認定に比べて保存技術の選定・認定が遅れていることは否めない。

1) 当該論文は東京文化財研究所のウェブサイトで公開されている。以下のURL参照
https://tobunken.repo.nii.ac.jp/record/9092/files/02_maehara_hashimoto_2020.pdf

2) 数値は2019.1.1現在。()内は2022.12.1現在の参考数値。以下本項では同様。

3) 以下、本稿では「保存技術」と略す。

2) 無形文化財の「活用」への期待

2018年、文化財保護法が改正(2019年4月施行)されて、文化財の保存活用計画を作成して国の認定を受けることで地方文化財行政の推進力を強化する仕組みが整えられた。しかし、「無形」文化財に「活用」ということばが馴染まず、「観光」に置き換えて解釈される傾向が強いことには疑問もある。

文化庁が2018年7月に発表した「文化財保護法改正の概要について」では、「個別の文化財の保存活用計画について(イメージ)」として重要無形文化財(芸能)の「保存継承の計画」に「伝承者養成、研修発表会、資料の収集整理、原材料・用具の確保、普及教育活動、その他」を挙げている。このうち伝承養成や原材料・用具の確保、普及教育活動については、無形文化財と保存技術を連動させた計画を実行することで、無形文化財継承に資する本質的かつ大きな効果が期待できるのではなかろうか⁴⁾。以上を踏まえて、当該調査では伝統芸能の中でも音楽を中心に取り上げ、調査の柱を楽器製作者と教育機関等の現状調査とした。調査対象は末尾の<表>(末尾)を参照されたい。

2. 楽器製作者の現状調査

1) 伝承者養成

韓国の国家無形文化財の技術伝承システムには、保有者、伝授教育助教、履修者の指定範疇があり、これらを総称して伝承者と呼ぶ。保有者は自らが選んだ伝習生に対して技術伝習の責務を担う。そこで3年間の伝習を受けた伝習生は履修者への審査を受けることができ、履修生は5年の履修の後、募集があれば伝習教育助教の選抜に申し込める。伝授者助教から保有者への指定の詳細は定かではない。なおこのシステムでは、一部の伝習者に奨学生として、5年間毎月資金援助を行うことが、後継者育成の目配りとして注目される。また、保有者が高齢化等の理由で保有者の辞退を申し出て文化財庁に認められると名誉保有者になるが、その後も一定額が支給されるシステムも日本にはない特徴的な点と言える。

4) 同じく文化庁が発表した「文化財保護制度の見直しについて」(2019年1月)でも、「文化財の『保存活用計画』の構成例」のうち無形文化財(芸能)に、「活用(継承)計画」として「伝承者養成、研修発表会、資料の収集整理、原材料・用具の確保、普及教育活動、その他」が挙げられている。

調査した楽器製作者は国家無形文化財(楽器匠)保有者がNo.12コ・フンゴン氏⁵⁾とNo.13イ・ジョンギ氏、伝授教育助教がNo.8ユン・チョンク氏、その他がNo.10チュ・グソク氏、No.11イ・グァンジェ氏、No.15イ・チョルス氏である。現在伝承者育成に関わっているNo.12コ・フンゴン氏とNo.13イ・ジョンギ氏を含め、全員が自身は技術伝承システムに拠らない方法で技術を習得していた。彼らのように一定の年齢以上の製作者が経験してきた典型的な伝承方法は、住み込みによる場合と、もともと家業で父親から伝承された場合の二通りがあった。

住み込みで技術習得したのはNo.12コ・フンゴン氏とNo.13イ・ジョンギ氏である。No.12のコ・フンゴン氏も住み込みから独立まで15年かけて技を習得しており、No.13イ・ジョンギ氏も、住み込みを始めてから独立するまで24年かかり、特に独立前の10年は師匠の没後に未亡人を10年看るなど、長年の苦労を重ねた。

家業で父親から習得したのが4代目のNo.8ユン・チョンク氏、2代目のNo.11イ・グァンジェ氏とNo.15イ・チョルス氏である。No.15イ・チョルス氏は楽器製作者ではないが、カヤグムなどの弦楽器の絹糸弦原糸を手作業で繰糸する技術者で、No.12コ・フンゴン氏が製作する弦楽器の絹糸弦製作には、全てこの原糸を使う。なお、No.10チュ・グソク氏のみは、当初から「通い」で技術を習得していた。

いずれの製作者も10代終わりから20代前半でその道に入り、一様に雑用や材料の基本的な加工に長い期間を費やして、技術伝習が地道で辛抱の必要な道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これらの、現在は技術を伝授する立場となった製作者たちに「伝承者の現状」について尋ねたところ、「伝承者候補はいるが生活とのバランスに課題を感じる」(No.8ユン・チョンク氏、No.13イ・ジョンギ氏)、「現段階では伝承候補者がいない」(No.10チュ・グソク氏、No.11イ・グァンジェ氏、No.15イ・チョルス氏)との声が上がった。また「伝承者養成の課題」としては、「伝習期間の支援の必要性」、「若者が地味で静かな作業を続けることに魅力を感じない」、「職業としての将来性」などが挙げられた。

これらの現状や課題はいずれも日本と共通している。しかし韓国には保有者の作品を買い上げて展示したり、博物館に楽器製作者を招いて楽器を展示したりするなど、国の政策として楽器製作者の技術を紹介、周知する「仕組み」や「場」がある。また先述のように、伝承システムの中で奨学生制度を設け、一部の伝習者に奨学生に資金援助を行う制度もある。韓国の

5) 調査対象は末尾【表】のNo.を付して表記する。また、保有者等の指定は調査当時の情報。

ような普及・支援のシステムのない日本にとって、同様の課題がより重くのしかかっているとみるのが自然だろう。

また「伝承者養成の課題の先に想定される課題」として修復技術の課題も挙げられた。例えばNo.8ユン・チョンク氏は、竹ペンと墨で絵を描き、糸で寸法を測る技術を代々継承しており、この技術を用いて博物館所蔵の古い太鼓の修復も行ってきた。したがってこの技術が途絶えれば、現在演奏に使っている楽器の製作・修理だけでなく、古楽器修復への影響もあり得る。日本には古楽器修復を楽器製作・修理技術の一側面として捉える視点が抜け落ちていると実感した。

さらに、原材料製作技術が楽器製作に連動している事例がNo.15イ・チョルス氏だ。当該技術を持つのは現在の韓国ではこの一箇所なので、原材料製作技術の伝承が楽器製作技術に影響を与える可能性は高い。日本も同様の課題に直面してきたが、コロナ禍を経て特に危機感が増している。

2) 原材料・道具の確保

日本では楽器製作工程が細分化されており、各工程の技術を極めるために原材料へのこだわりが強い。道具も細かい用途に特化したものが多数ある。これらのこだわりが文化財保存技術の特徴をなす一方で、原材料や道具製作技術の状況が楽器製作に直接的に影響を与える要因にもなっている。以下、原材料・道具確保の観点から調査結果の概略を報告する。

打楽器のプクに使われる牛革は、農耕牛の激減により硬くて丈夫な革がなくなってきたが、革張り技術を適応させて対応している。そのほか、ムシ(右図)は珍しい材料だが課題はない。道具に関しては、特殊なものが多いので、自分で作るかオーダーメイド(No.8ユン・チョンク氏、No.13イ・ジョンギ氏)が主流である。また、No.8ユン・チョンク氏は家業を継いでいるので、代々の道具もともに受け継いでいる。

弦楽器では、先述の通りNo.12コ・フンゴン氏が弦楽器の絹糸弦原糸をNo.15イ・チョルス氏から仕入れている。最近は機械繰糸の原糸を絹糸弦に使うところもあるが、手作業の繰糸の

ムシ(麻布の一種):
麻(カラムシ)の繊維で
織った布を胴に貼る



方が弾力に富み、切れにくいという。なおNo.15イ・チョルス氏によると、昔は韓国の蚕の繭を使っていたが、国産繭の減少と健康食品の材料としての価格高騰により、現在は中国産繭を使っている。産地変更についてNo.12コ・フンゴン氏は、もともと中国伝来の楽器なので問題視していない。こうした柔軟な考え方が絹糸繰糸技術と弦楽器製作技術を支えてきた側面もあろう。道具は全てが重要なので自分で作っていて課題はない。

管楽器ではテグム(大琴)に使うサンコル(雙凹)⁶⁾の入手困難が知られている。No.10チュ・グソク氏によれば、サンコル(雙凹)は30年くらい前まで入手できていたが、今ではほとんどなくなってしまったと言う。こうした状況を鑑みて、国楽院楽器研究所ではサンコル(雙凹)に替わる新材料を開発し、特許取得後に情報公開している。ただし新材料は主に普及用の楽器に使われると言い、例えば国楽演奏家にどのていど受け入れられているかは疑問で、No.10チュ・グソク氏からこの新材料についての言及はなかった。また、ピリのリードに使うシヌデ(山竹)も入手困難だが、No.11イ・グァンジェ氏の父親は数十年前からシヌデ不足を予見し、本体と同じ篠竹で代用してきた。道具は、使い易いものを自作したり改良したりしているので問題ない。

3) 普及教育活動

楽器製作技術の普及教育活動には、国の機関によるものとそれ以外がある。前者に文化財庁が国楽院で行う公開行事(No.12コ・フンゴン氏)や国楽院の展示(No.12コ・フンゴン氏)がある。後者に作業場でのワークショップ(No.10チュ・グソク氏)、レジデンスでの講義と小型ブク製作ワークショップを組み合わせた企画(No.8ユン・チョンク氏)、伝習教育助教として年一回開催する企画行事(No.8ユン・チョンク氏)などがあり、いずれも個々の製作者の企画による活動である。

楽器製作技術に関わる普及活動として、日本では選定保存技術や保持者・保存団体の広報のため、毎年文化庁が毎年開催している「日本の技体験フェア」がある。ここでは保存技術の一部を体験したり、展示で学んだり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他、楽器製作者で作る組合が、年に一度程度、会場を借りて自ら原材料や道具を持ち込み、製作工程の説明や実演を行い、演奏体験できるイベントを開催する例がある。

6) 丈が低く細身の竹で、竹の両端に二筋の縦溝があり「双骨竹」とも言う。

3. 教育機関等の現状調査

1) 教育機関における国楽教育の現状

まず驚いたのが、小・中・高等学校の音楽教科書の内容の40%が国楽に充てられている点だ。これは日本の音楽教科書とは根本的に異なる。当該調査では教育機関のカリキュラム調査や教員からの聞き取り、授業や教室設備の見学を実施したが、国楽教育の現状、楽器・製作技術と国楽教育の接点は以下の通りであった。

国立国楽高等学校は大学の国楽専攻科を目指す演奏家志望者が進学する高校で、実技授業は毎日あるものの楽器そのものについて扱う授業はない。また京仁教育大学校は国楽を音楽教育に導入した先駆的な教員養成大学で、国楽の実技や理論の授業はあるが、楽器そのものについては扱っていない。ほかに民俗音楽の本場である全羅道の全南大学校では、民俗音楽(特にパンソリ)教育に特色があり、カリキュラムで楽器自体を扱うことはないが、楽器製作者の子息が演奏を学ぶために在籍したことはある。

日本には伝統音楽を大学で専門的に学ぶ場はほとんどないが、東京藝術大学邦楽科では、不定期ながら楽器製作者が材料や用具を持ち込んで、原材料や製作の解説、実演を行う機会を設けている。もっともこれは稀有な例で、概して日本でも韓国でも教育の現場に楽器製作技術が計画的に取り入れられているとは言い難い。

2) 国楽院博物館の試み

国楽院楽器研究所の試みを二つ報告する。一つは小学生親子向けのタンソ(短簫、リードを持たない竹製縦笛)のワークショップで、No.2ヘ・ソングァン氏とNo.3チョン・ファンヒ氏によると、理論と製作実技の二本立てである点に大きな特徴がある。楽器の仕組みを知るとその後の楽器製作への関心が一層高まると言い、楽器研究所ならではの強みを活かした試みと言える。また、小学校教育ではプラスチック製のタンソを使うが、このワークショップでは本格の原材料で製作し、作ったタンソを持ち帰ることができる。普及に適した安価で扱い易い楽器とは異なる、プロフェッショナルの演奏家の求める表現に応え得る本格楽器について知り、製作し、持ち帰って演奏するという一連の機会を提供していて興味深い。

二つ目は、国楽院楽器研究所による新素材開発と開発技術の公開である(No.2ヘ・ソングァン氏、No.3チョン・ファンヒ氏、No.4ユン・クォンヨン氏への聞き取り調査による)。例えば先述のようにテグム(大琴)に使うサンコル(雙凹)に替わる新材料を開発し、特許取得後に公開

して技術移転を積極的に行っている。この新材料について詳細はわからなかったが、竹をプレスして板状にしたものを整形し、テグムを製作するということなので、日本で普及用の雅楽管楽器に用いられている合竹のようなものではないかと推測している。もっとも、日本の場合は個々の企業(しかも規模は小さい)が開発して商品化しているのに対して、韓国の場合には、楽器製作者の原材料に関する課題に、国立機関が継続的な研究開発、技術公開で対応している点が注目される。

4. まとめ

韓国と日本に共通の課題として、職業としての楽器製作を成り立たせること、原材料製作・製造への目配りなどがあった。一方、韓国には技術伝習者を経済的に支える制度や国の機関が入手困難な楽器材料に替わる新材料を開発して技術を公開する仕組みなど、参考にした点も多かった。

当該調査後のコロナ禍を経て、日本の伝統芸能では特に保存技術や原材料への影響が顕著になっている。当該調査時から必要性を感じていた保存技術や原材料への目線と、そこから知りえたことを実演家や愛好家、教育関係者と共有することで、伝統芸能の継承にかかる環境を整えていくことが急務である。

また、日本では2021年9月に文化財保護法が改正された(2022年4月施行)。この改正にともない、無形文化財及び無形の民俗文化財について、これまで指定の対象とならなかった書道や食文化等の生活文化も含めた多様な無形の文化財の積極的な保護を図るべく、登録制度が創設された。登録制度と指定制度は直接連動していないが、「登録」という幅広く緩やかな保護措置の必要性が納得できるものである一方で、国から「指定」されている無形文化財の手厚い保護措置が大切なことは従前と変わらない。また、併せて指定無形文化材に関わる選定保存技術の制度も十分に活かされるべきであることに変わりはない。日本の複雑化した文化財保護制度を俯瞰する視点を維持しながら、コロナ禍で深刻化した個別の課題を見逃さずに掘り上げて、無形文化遺産の継承に繋げ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表> 韓国での調査先一覧(2019.7.1~2019.7.19)

No.	日付	調査・訪問先	分野	調査目的
1	2019.7.2	国立無形遺産院		活用(普及)
2	2019.7.3	国立国楽院：海成光 (ハ・ソングァン、音楽研究部門 研究員)	国楽	活用(普及)
3		国立国楽院：鄭煥熙 (チョン・ファンヒ、研究員)	国楽(理論)	活用(普及)／ 楽器製作技術_笛
4		国立国楽院：尹權映 (ユン・クオンヨン、音楽研究部門 研究助手)	国楽(笛)	活用(普及)／ 楽器製作技術_笛
5		国立国楽院：宋相赫 (ソン・サンヒャオ、音楽研究部門 研究員)	国楽(博物館)	活用(無形文化遺産の展示)
6	2019.7.4	京仁教育大学校：金惠貞 (キム・ヘチョン、音楽教育科 教授)	教育	活用(教育_教育者の育成、 学校教育における伝統音楽)
7	2019.7.5	国立国楽高等学校：ファンインワン(教員)	国楽(大琴：テグム)	活用(教育_ 伝統音楽演奏者の育成)
8		国家無形文化財第42号楽器匠：ユン・チョンク	楽器製作(打楽器)	楽器製作技術_打楽器
9		国楽院公演「正歌(ジョンガ)」	国楽(公演)	活用(普及_国楽)
10	2019.7.6	朱球錫(チュ・グソク)	楽器製作(管楽器)	楽器製作技術_管楽器_ ピリ以外
11	2019.7.7	李光在(イ・グァンジェ)	楽器製作(管楽器)	楽器製作技術_管楽器_ピリ
12	2019.7.8	国家無形文化財第42号 楽器匠：高興坤 (コ・フンゴン)	楽器製作(弦楽器)	楽器製作技術_弦楽器
13	2019.7.9	国家無形文化財第42号 楽器匠：李廷耆 (イ・ジョンギ)	楽器製作(打楽器)	楽器製作技術_打楽器
14	2019.7.10	国家重要無形文化財第83-1号 求礼郷制弦風流保存会 会長(芸能保有者)：李鐵湖(イ・チョルホ)	伝統音楽	活用(継承)
15	2019.7.11	明紬産業李轍水(イ・チョルス)	絹糸繰糸	楽器製作技術_原材料製作
16	2019.7.13	国立無形遺産院公演「男寺黨(ナムサダン)」	伝統大衆芸能(公演)	活用(普及_伝統大衆芸能)
17	2019.7.15	全南大学校	教育	活用(教育_ 伝統音楽演奏者の育成)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악기장)에 관한 보존 및 활용과 그 주변

마에하라 메구미(동경문화재연구소)

본 보고는 한국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19일에 실시한 조사 개요를 바탕으로 약간의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해당 조사의 일부는 허락을 받아 조사 대상자의 교정을 거친 후, 「악기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보존 기술 조사보고3」(마에하라 메구미 및 하시모토 가오루, 『무형문화유산 연구보고』 14호, 2020년 3월¹⁾)으로 게재하였다.

1. 과제의 배경 - 일본의 전통예능이 직면한 두 가지 과제 -

1)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과 선정보존기술의 선정 및 인정

일본의 전통예능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건수는 50건(52건)²⁾, 보유자 및 각개 인정 수는 51명(53명), 보유자 및 종합인정단체의 수는 14단체(14단체)이다. 한편, 예능을 뒷받침하는 문화재 보존 기술³⁾은 선정 건수 13건(16건), 보유자 수 8명(9명), 보유 단체 수 5단체(7단체)이다. 대부분의 예능이 여러 보존 기술의 토대 위에서 유지됨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에 비해 보존 기술의 선정 및 인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1) 해당 논문은 동경문화재연구소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아래 URL 참조.
https://tobunken.repo.nii.ac.jp/record/9092/files/02_maehara_hashimoto_2020.pdf

2) 수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괄호 안은 2022년 12월 1일 참고 수치. 이하 본 페이지에서는 동일.

3) 이하 본 문서에서는 '보존 기술'로 생략.

2) 무형문화재의 '활용'에 대한 기대

2018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2019년 4월 시행) 문화재의 보존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지방 문화재 행정의 추진력을 강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무형'인 문화재를 '활용'한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 '관광'으로 대체해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데는 의문도 존재한다.

문화청이 2018년 7월에 발표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개요에 관하여」에서는 '개별 문화재의 보존 활용 계획에 관해(이미지)'라고 해서 중요무형문화재(예능)의 '보존 계승 계획'으로 '계승자 양성, 연수 발표회, 자료 수집 및 정리, 원재료 및 용구의 확보, 보급 교육 활동, 기타'를 들고 있다. 이 중 계승자 양성이나 원재료 및 용구의 확보, 보급 교육 활동은 무형문화재와 보존 기술을 연동시키는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무형문화재 계승에 이바지하는 본질적이고도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⁴⁾ 이를 근거로 해당 조사에서는 전통예능 중에서도 음악을 중심으로 악기제작가와 교육기관 등의 현황을 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문서 말미에 표시된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악기제작가 현황 조사

1) 전승자 양성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 기술 전승 시스템에는 보유자, 전승교육사(구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라는 지정 범주가 있으며 이들을 총칭해 전승자라고 부른다. 보유자는 자신이 고른 전수자로 하여금 기술을 전습하게 할 책임이 있다. 그로부터 3년간 기술을 전습한 전수자는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수자는 5년의 이수 후 모집이 있으면 전승교육사 선발에 참가할 수 있다. 전승교육사에서 보유자로 지정되는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명확하지 않다. 이 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전승교육사에게 장학생으로서 5년간 매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후계자 육성의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유자가 고령화 등의 이유로 보유자 해제를 신청해 문화재청의 인정을 받으면 명예보유자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일본에는 없는 특징적인 점이라 할 수 있다.

4) 마찬가지로 문화청이 발표한 「문화재 보호 제도의 재검토에 관하여」(2019년 1월)에서도 '문화재 『보존 활용 계획』의 구성 예' 중 무형문화재(예능)의 '활용(계승) 계획'으로 '전승자 양성, 연수 발표회, 자료 수집 및 정리, 원재료 및 용구의 확보, 보급 교육 활동, 기타'가 거론된다.

조사한 악기제작가는 국가무형문화재(악기장) 보유자인 제12호 고흥곤⁵⁾과 제13호 이정기, 전승교육사(구 전수교육조교)인 제8호 윤종국, 그리고 그 외 제10호 주구석과 제11호 이광재, 제15호 이철수이다. 현재 전승자 육성에 관여하고 있는 제12호 고흥곤과 제13호 이정기를 포함한 전원이 기술 전승 시스템에 바탕을 두지 않은 방법으로 기술을 습득했다. 이들처럼 일정 연령 이상의 제작자가 경험한 전형적인 전승 방법으로는 더부살이를 하며 배우거나 원래부터 가업으로 이어진 기술을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제12호 고흥곤과 제13호 이정기는 스승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기술을 습득했다. 제12호 고흥곤은 더부살이에서 독립하기까지 15년에 걸쳐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제13호 이정기도 더부살이에서 독립할 때까지 24년이 걸렸다. 특히 독립 전 10년은 스승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부인을 10년간 보살피는 등 오랜 기간 고생을 거듭했다.

가업을 잇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습득한 경우는 4대째인 제8호 윤종국과 2대째인 제11호 이광재, 그리고 제15호 이철수이다. 제15호 이철수는 악기제작가는 아니지만 가야금 등 현악기의 현으로 사용되는 명주 원사를 수작업으로 만드는 기술자이다. 제12호 고흥곤이 제작하는 현악기의 명주줄에는 모두 이 원사가 사용된다. 이 중에서는 제10호 주구석만이 처음부터 '왕래'하며 기술을 습득했다.

이들 모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업계의 길로 접어들어, 각종 잡무를 처리하거나 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가공 기술을 배우는 데 오랜 기간을 할애했다. 이처럼 기술 전승은 한결 같은 꾸준함과 인내심이 필요한 여정임을 알 수 있다.

현재는 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이 된 이들 제작가에게 '전승자의 현황'에 대해 묻자, "전승자 후보는 있지만, 일상생활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느껴진다"(제8호 윤종국, 제13호 이정기), "현 단계에서는 전승 후보자가 없다"(제10호 주구석, 제11호 이광재, 제15호 이철수)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승자 양성의 과제'로는 '전수교육 기간 지원의 필요성', '젊은 사람들이 소박하고 고요한 작업을 계속하는 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함', '직업으로서의 장래성' 등을 꼽았다.

이러한 현상과 과제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보유자의 작품을 사들여 전시회를 열거나 박물관에 악기제작가를 초청해 악기를 전시하는 등 국가 정책으로 악기제작가의 기술을 소개하고 알리는 '장치'와 '장(場)'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5) 조사 대상은 문서 말미 [표]에 No.(제 호)를 붙여 표기. 또한 보유자 등의 지정은 조사 당시 정보.

전승 시스템에 장학생 제도를 마련하여 일부 전수자에게 장학생으로서 자금을 지원하는 전수장학생제도도 있다. 한국과 같은 보급 및 지원 시스템이 없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과제가 한층 더 무겁게 다가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외에도 '전승자 양성의 선과제'로서 복원 기술이 거론되었다. 예를 들어 제8호 윤종국은 대나무 펜과 먹으로 그림을 그리고 실로 치수를 재는 기술을 대대로 계승해 왔는데, 이 기술로 박물관이 소장한 오래된 북을 복원하는 작업도 진행한 바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단절되면 현재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의 제작 및 수리 기술뿐만 아니라, 고악기 복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는 고악기 복원을 악기 제작 및 수리 기술의 한 측면으로 보는 시점이 빠져있음을 실감했다.

이와 같이 원재료 제작 기술과 악기 제작이 연동된 사례로 제15호 이철수를 들 수 있다. 해당 기술을 가진 곳은 현재 한국에서 이곳 단 한 곳뿐이라, 원재료 제작 기술의 전승이 악기 제작 기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과제를 직면한 일본에서도 코로나19의 범유행을 거치면서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

2) 원재료 및 도구의 확보

악기 제작 공정이 세분화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각 공정의 기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고집이 강하다. 도구도 용도에 따라서 세세하게 특화된 것이 많다. 이러한 고집은 보존 기술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원재료 및 도구 제작 기술의 현황이 악기 제작으로 직결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원재료 및 도구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실시된 조사 결과의 개략을 소개하겠다.

타악기 북에 사용되는 쇠가죽은 농업용 소의 급감으로 인해 단단하고 튼튼한 질 좋은 가죽을 구하기 어려워졌지만, 가죽을 씌우는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타개했다. 이 외에도 모시(우측 그림) 역시 희귀한 재료이지만 문제는 없다. 특수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만들거나 주문해 제작하는 것(제8호 윤종국, 제13호 이정기)이 보통이다. 특히 가업을 잇고 있는 제8호 윤종국은 도구도 대대로 계승하고 있다.

모시(삼베의 일종):
마(모시풀) 섬유로 짠 천을
뿔통에 붙임.



현악기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5호 이철수가 만든 명주 원사를 제12호 고흥곤이 구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계로 짠 원사를 명주줄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수작업으로 만든 명주가 더 탄력이 있어서 잘 끊어지지 않는다. 또한 제15호 이철수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는 한국산 누에고치만을 사용했지만, 국산 누에고치가 감소하고 건강식품의 재료로 쓰이는 등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재는 중국산 누에고치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12호 고흥곤은 북은 원래 중국에서 전해진 악기이므로 산지가 변경된 것은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듯 유연한 사고방식이 명주길쌈 기술과 현악기 제작 기술을 뒷받침해 온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필요한 모든 도구를 스스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관악기에서는 대금에 사용되는 쌍골죽⁶⁾은 구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제10호 주구석에 따르면 쌍골죽은 30년 전까지만 해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국악원 악기연구소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쌍골죽을 대체할 신재료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후 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신재료는 주로 보급용 악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국악 연주자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졌을지는 의문이다. 제10호 주구석도 이 신재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한 피리의 리드에 사용되는 시누대(산죽) 역시 구하기 어려운 재료이기는 하지만, 제11호 이광재의 부친은 수십 년 전부터 시누대가 부족해질 것을 예상하고 본체와 같은 소죽으로 대체해 왔다. 도구는 사용하기 쉽도록 직접 제작하거나 개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3) 보급 교육 활동

악기 제작 기술의 보급 교육 활동으로는 국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그 외가 있다. 전자에는 보유자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공개행사(제12호 고흥곤)나 국악원의 전시(제12호 고흥곤)가 속한다. 후자에는 작업장 워크숍(제10호 주구석), 레지던스 강연과 소형 복제작 워크숍을 합친 기획(제8호 윤종국), 전승교육사가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기획행사(제8호 윤종국)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개별 제작자의 기획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다.

악기 제작 기술과 관련된 보급 활동의 일환으로 일본 문화청에서는 선정보존기술과 보유자 및 보존 단체의 홍보를 위해 매년 ‘일본 기술 체험 페어’를 개최한다. 여기서 일부 보존 기술을 체험하거나 전시를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악기제작가로 구성된 조합이 매년

6) 길이가 짧고 몸통이 가는 대나무로 양쪽 줄기에 홈이 깊이 패여서 ‘병죽’이라고도 불린다.

장소를 빌려 직접 가져온 원재료와 도구로 제작 공정의 설명과 실연도 하고 연주를 체험할 수도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사례가 있다.

3. 교육기관 등의 현상조사

1) 교육기관에서의 국악 교육 현황

한국의 국악교육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초·중·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내용 중 40%를 국악이 차지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일본의 음악교과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해당 조사에서는 교육기관의 커리큘럼을 조사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수업이나 교실의 시설 등을 견학했는데, 국악 교육의 현황과 악기 및 제작 기술의 접점은 다음과 같았다.

국립국악고등학교는 대학의 국악전공과를 목표로 하는 연주자 지망생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로, 매일 실기 수업은 있지만 악기 자체에 대해 배우는 수업은 없다. 또한 경인 교육대학교는 국악을 음악 교육에 도입한 선구자적인 교원 양성 대학으로, 국악 실기나 이론 수업은 있지만 악기 자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 외에도 민속음악의 본고장 전라도에 자리한 전남대학교는 민속음악(특히 판소리) 교육에 특색을 보였는데, 커리큘럼으로 악기 자체를 다루지는 않지만 악기제작가의 자녀가 연주를 배우기 위해 다니는 경우가 있었다.

일본에는 전통음악을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지만, 도쿄예술대학의 일본음악과에서 비정기적으로 악기제작가가 재료와 도구를 가져와 원재료나 제작에 대해 해설하고 실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매우 드문 사례로서 대체로 일본이나 한국이나 교육 현장에 악기 제작 기술이 계획적으로 도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2)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시도

여기서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두 가지 시도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초등학교 자녀를 위한 단소(리드가 없는 대나무제 짧은 피리) 워크숍으로, 제2호 해성광과 제3호 정환희에 따르면 이론과 제작 실기를 함께 진행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 악기의 구조를 알면 악기 제작에 대한 관심도 한층 더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는 악기연구소만의 강점을 살린 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플라스틱 단소를 사용하지만, 이 워크숍에서는 본격적인 원재료로 단소를 만들고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했다. 보급에 적합한 저렴하고 다루기 쉬운 악기가 아닌, 전문 연주자들이 추구하는 표현에도 응할 만큼 본격적으로 악기에 대해 배우고 제작하며 집으로 가져가 연주하는 일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두번째는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신소재 개발과 개발 기술의 공개이다(제2호 해성광, 제3호 정환희, 제4호 윤권영으로부터 조사 청취).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듯이 대금에 사용되는 쌍골죽의 대체 재료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이 신재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대나무를 압축해 만들어진 얇은 판을 다시 성형하여 대금을 제작한다고 하니 일본에서 보급용 아악 관악기로 사용되는 아이타케(合竹)와 비슷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일본에서는 개별 기업(게다가 소규모)이 개발해 상품화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악기제작가들의 원재료 관련 과제에 국립 기관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 공개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4. 결론

한국과 일본의 공통 과제로는 악기 제작을 직업의 하나로 성립시키는 것, 그리고 원재료 제작과 제조에 대해 두루 살펴보는 것 등이 있었다. 한편, 한국에는 기술 전습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나 국가 기관이 구하기 어려운 악기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료를 개발하고 그 기술을 공개하는 시스템 등 참고할만한 점도 많았다.

해당 조사를 실시한 후에 벌어진 코로나19 범유행 사태를 거치면서 일본 전통예능에서는 보존 기술이나 원재료에 대한 영향이 특히 현저하게 드러났다. 해당 조사를 실시할 때부터 필요성을 절감한 보존 기술과 원재료에 대한 시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지식을 실제 연주자나 애호가, 교육관계자 등과 공유하며 전통예능의 계승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2021년 9월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었다(2022년 4월 시행).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 중에서도 그동안 지정 대상이 아니었던 서예나 식문화 등의 생활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 제도가 창설되었다. 등록 제도와 지정 제도는 직접 연동되지는 않지만, '등록'이라는 폭 넓고 느슨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납득이 간다. 그러나 국가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선정보존기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의 복잡해진 문화재 보호 제도를 부감하는 시선은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19 범유행 사태로 더욱 심화된 개별 과제는 어느 하나 놓치지 말고 건져 올려서 무형문화재 유산의 계승으로 이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한국 내 조사처 일람(2019. 7. 1.~2019. 7. 19.)

No.	날짜	조사처 및 방문지	분야	조사 목적
1	2019. 7. 2.	국립무형유산원		활용(보급)
2	2019. 7. 3.	국립국악원: 해성광 (음악연구부 연구원)	국악	활용(보급)
3		국립국악원: 정환희(연구원)	국악(이론)	활용(보급) / 악기제작기술_피리
4		국립국악원: 윤권영 (음악연구부 연구소주)	국악(피리)	활용(보급) / 악기제작기술_피리
5		국립국악원: 송상혁 (음악연구부 연구사)	국악(박물관)	활용(무형문화유산 전시)
6	2019. 7. 4.	경인교육대학교: 김혜정 (음악교육과 교수)	교육	활용(교육_교육자 육성, 학교 교육에서의 전통음악)
7	2019. 7. 5.	국립국악고등학교: 황인완(교원)	국악(대금)	활용(교육_전통음악 연주자 육성)
8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윤종국	악기제작(타악기)	악기제작기술_타악기
9		국악원 공연 '정가'	국악(공연)	활용(보급_국악)
10	2019. 7. 6.	주구석	악기제작(관악기)	악기제작기술_관악기_피리 외
11	2019. 7. 7.	이광재	악기제작(관악기)	악기제작기술_관악기_피리
12	2019. 7. 8.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고희곤	악기제작(현악기)	악기제작기술_현악기
13	2019. 7. 9.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이정기	악기제작(타악기)	악기제작기술_타악기
14	2019. 7. 10.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83-1호 구례향제 줄풍류보존회 회장(예능보유자):이철호	전통음악	활용(계승)
15	2019. 7. 11.	명주산업: 이철수	명주길쌈	악기제작기술_원재료 제작
16	2019. 7. 13.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남사당'	전통대중예능(공연)	활용(보급_전통대중예능)
17	2019. 7. 15.	전남대학교	교육	활용(교육_전통음악 연주자 육성)

한국과 일본의 화전기술 비교와 일본 사례 연구

韓国と日本の焼畑技術の比較と日本の事例研究

강경혜(姜敬惠)
국립무형유산원(國立無形遺産院)

한국과 일본의 화전기술풀교와 일본 사례 연구

강경혜(국립무형유산원)

1. 들어가며

농경·어로 관련 전통지식은 전통적인 생산활동 및 생업체계 유산으로서 공동체가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축적·전승되어온 무형유산이다. 이 범주는 한국에서 2016년도에 시행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한의약, 농경·어로에 관한 전통지식’의 범주에 포함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외에서는 그 이전부터 농경·어로 기술과 전통지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특히 2003년 체결한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는 전통지식과 그 보유자를 존중하고,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논의를 지속하였다. 2003년 유네스코는 무형유산 보호협약에서는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을 무형유산의 한 분야로 인정하고, 전통적 생태지식, 토착지식, 지역 동식물에 대한 지식, 그리고 공동체가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전시킨 지식, 방법, 기술, 관습 등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농경 관련 전통지식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현대산업화시대로 변화·발전하는 바탕이 된 지식임에도,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여 멸실 우려가 큰 분야이기도 하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7년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점차 사라지고 있는 농경·어로 관련 전통지식을 우선적으로 수집·기록하고자 한다.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농경·어로 분야 현장조사를 지역별로 실시하여 총 406항목을 수집하였다. 이중 농경 분야 조사대상은 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체가 생업을 위해 유지·전승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도 그 기술과 방법이 유지되고 있는 것, 유산을 지속한 지 50년이 넘는 것, 지역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는 것 위주로 선정하였다. 주로, 벼농사 관련 농사지식, 밭 경작 관련 농사지식, 전통적

수리체계, 특산물 재배와 문화가 있으며, 임업과 관련하여 심마니와 약초꾼의 관행, 산나물 채취, 양봉, 그 외 가축사육, 농경 문화와 생활지식 등이 있다. 이미 소멸된 농경 관련 전통지식은 제외되었는데, 무형유산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전승성이라는 점에서 현재 전승되고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 이미 소멸되었으나,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화전’(일본 야키하타(燒畑))에 주목하였다. 화전은 흔히, ‘미개간지나 휴경지를 새로이 경작할 때 불을 놓아 야초와 잡목을 태워버리고 농경에 이용하던 농법’으로¹⁾ 원시적 약탈경제의 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화전은 한국 농업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온 전통농경방식으로 지형지세, 토질, 작물생태 등에 대한 상당한 전통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인식은 좋지 않았다. ‘사라지고’, ‘근절되어야 할’ 문화로 본 것이다. 따라서 현재 화전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화전의 지속가능성, 전통농경방식의 부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등에 주목하여, 지난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즈오카현의 이카와마을과 미야자키현의 시바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글은 한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경작방법인 화전이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최근에 전승이 끊긴 마을도 다시 화전을 복원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국의 화전경작방법을 비교연구하고, 일본의 화전 활성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쓰여졌다. 즉, 일본 화전 실태와 그 농경기술, 그리고 화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파악하여, 화전이 농경문화의 자산이자, 미래 생태 농업의 대안처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삼림 훼손과 재해를 막기 위해 ‘정리되어야 했던’ 농경방식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과거 화전농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그 의의를 되새기고자 한다. 이 글은 먼저, 한국의 화전농법의 소멸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의 화전사를 간단히 정리하였으며, 화전의 전통지식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사례의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한국의 화전기술은 60년 전 당시의 기술이라는 점과 일본의 많은 화전지 중 시즈오카현과 미야자키현, 두 곳과의 비교연구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하지만, 위의 두 화전지가 한국과 유사한 잡곡 윤작 형태라는 점, 일본에서는 일부 도구에 기계장비가 도입되었다는 점이 바뀌었으나, 전통적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비교가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타 지역 화전 사례를 포함한 종합적 분석은 추후 연구로 남겨둔다는 점을 밝힌다.

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9084&cid=46631&categoryId=4663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화전>”

2. 한국의 화전과 화전의 정리

조선시대와 그 이전 화전 관련 기록을 통해 당시 화전의 모습을 분석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문헌에 따르면 6세기 신라 진흥왕 대부터라고 하며, 창녕 정계비에 새겨진 ‘白田畷’이 ‘火田’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고려시대 이후 전작제도에는 항상 경작이 가능한 불역전, 격년 경작하는 일역전, 1년 경작하여 2년은 휴경하는 재역전으로 구별되어 있다. 이 중 재역전이 오늘의 화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전과 평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화전민의 존재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어있다고 보인다.²⁾ 조선시대에는 화전의 면적과 수에 대한 정확한 사료를 얻을 수 없지만, 전기보다 후기로 넘어오면서 화전의 면적과 화전민의 수가 증가되어간 사실을 알 수 있다.³⁾

일제강점기에는 화전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조선시대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화전민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자작농과 소작농이 감소하였고, 농토를 잃은 사람들의 최후 생계처가 바로 화전이었기 때문이다. (그 외는 도시의 토막민이 되거나 국외로 이주하기도 하였다.)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나무를 태워 일정정도의 농토를 얻게 되면 4~5년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이 농토를 잃은 사람들이 화전에 몰리는 가장 큰 이유였다. 이 당시 화전민은 농사의 또 다른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빈민층에 가까웠다. 신문에서는 산림 황폐화, 식민지 경제 정책(산림자원 수탈)을 저해하는 사회문제로 연일 이슈가 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11년 삼림법을 제정하고, 1919년부터 1924년까지 화전민 실태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조선총독부 조사자료집 「화전의 현장」에서는 2만 정보 이상 증가하였고, 1926년부터 1939년까지의 농업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자작농이 12%, 자소작농이 20%, 소작농은 33% 증가하였으나, 순화전민은 100% 증가하였다.⁴⁾ 일제강점기 화전민수의 증가현상은 조선시대 이래 자연추세적 성장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경제정책이 빚어낸 하나의 특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화전금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였지만, 실상 화전을 금지하고, 화전민을 해산시키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당국의 생활안정화에 대한 대책미비와 감시망을 피한

2) 宮塚利雄, 「한국 화전민에 관한 사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술논총』 제4집(1980, 서울: 동국대학교), 284쪽.

3) 강만길, 「일제시대 화전민 생활」, 『동방학지』(1981, 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57쪽.

4) 강만길, 위의 논문(『일제시대 화전민 생활』, 1981), 169쪽.

화전은 더욱 확대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에서 화전경작 농가는 늘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산림황폐, 산사태 등의 재해가 속출하여 산림복구, 농경지 및 화전민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고조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4월 23일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화전정리사업을 시작하고, 1973년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발표하는 등 박차를 가했다. 그러던 중 박정희 대통령의 영동고속도로 예정지 순시를 계기로, 1974년부터 1978년까지 본격적인 화전정리사업 추진되었다.⁵⁾ 화전정리사업의 주된 골자는, 경사도 20도 이상 거주 및 화전을 하는 화전민은 이주(타지역) 또는 이전강제, 농경지(1.5ha) 및 주택자금(23,300원) 지원, 20도 이하에서 거주 및 화전지를 보유하고 있는 화전민들의 정착, 수산, 양잠 축산 등의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등이다. 경사도 20도 이하에 거주하더라도 20도 이상의 산림에 화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화전정리사업은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1978년(일부 1979년까지)에 최종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 전체 화전민 중 93.4%는 현지정착을 하였고, 6.6% 화전민은 대도시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사를 짓거나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당시 화전민들은 한국의 경제개발과 고속도로망 정비에 따라 노동력 이동이 용이해지고, 화전 지대의 고랭지 밭으로의 전환 및 생산물 유통이 용이해지는 등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소멸되었다. 한국에서는 화전이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찰은 어렵다. 또한 대다수 연구가 화전민의 유래와 화전정리사업, 사회경제적 실태 등에 대한 연구로, 화전민의 생활 및 화전 기술과 방식에 대한 조사는 많지 않다.

3. 한국과 일본의 화전기술 비교

화전기술은 용지를 선정하고 벌채를 한 다음 건조시켜 불을 놓고, 파종을 하여 거둬들이는 일의 전체를 말한다. 본 화전기술 비교는 한국의 경북 영양군 수하리와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의 과거 화전기술과 일본 미야자키현의 시바마을과 시즈오카현의 이카와마을의 화전기술 사례로 한정했다. 일부 사례의 비교로 양국의 화전기술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일본은 여전히 화전 경작방식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했을 때 도구, 방법

5) 신민정, 「한국 정부의 화전정리사업 전개과정과 화전민의 실태(1965~1979년)」, 『경제사학』 제50호(서울: 경제사학회, 2011), 69쪽.

등에서 변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과의 확장된 비교연구는 추후의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⁶⁾

1) 용지선정

한국에서 화전용지를 정할 때 경사, 지형, 토질, 풍속, 일조량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햇볕이 잘 들고, 서리가 늦게 내리는 땅을 적지로 하였다. 봉화군 현동리에서 화전을 한 주민은 동북이 꼭 막혀, 바람을 적게 타고 아늑한 비탈쪽이 태양볕이 잘 비치고 따스하다고 하였다. 또한 왜림지 보다는 혼림지를, 처너림보다는 2차림을 선호하였다. 일본 시바마을에서도 위의 조건에다가 대나무가 자라는 땅이나, 산간의 움푹 들어간 땅이 토질이 비옥하고 바람이 불지 않아 좋다고 한다. 대신, 햇빛이 들지 않거나, 참억새가 많은 곳은 좋지 않으며, 잡곡을 경작할 경우 돌과 암석이 많은 곳은 피한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까지 화전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조건도 고려하였다. 화전지는 집과의 거리가 도보로 다녀갈 수 있는 4km 내외여야하며, 관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있는 곳이어야 했다. 공동 화전을 하는 곳은 화전지가 3,000평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며, 산정상부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6~7부 정도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화전에서 거주지까지 수확물을 가져와야 하고, 감독관의 감시망도 고려해야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입지선정에 고려하였다.

2) 벌채와 화입

한국과 일본 모두 벌채는 주로 가을에 하고, 화입은 이듬해 봄에 하였다. 벌목을 한 나무가 겨울 내 건조되어야 이듬해 잘 타기 때문이다. 봄에 벌채를 하고 여름에 바로 화입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드물었다. 한국에서는 낮이나 도끼를 이용해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가면서 작업하고, 작은 나무부터 큰 나무로 벌목했다.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이듬해 봄에 화전 예정지 밖으로 불길 이 번지지 못하도록 방화대를 조성하였다. 일본 또한 대나무는 음력 8월 15일 이후부터 12월 안에 베었으며, 주로 손도끼나 톱, 낫 등을 이용했다. 거목의 경우 나무껍질을 한 바퀴 벗겨내는 ‘마키카라시’ 실시 후 고사시킨 다음 베다. 현재는 10월~이듬해

6) 본 장의 화전기술은 다음의 두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민병근, 「화전민의 생업관행과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논문(1995), 배영동, 「화전농업의 기술과 전승지식의 의의-20세기 경북 영양군 수하리의 사례-」, 『비교민속학』 제51집(안동: 비교민속학회, 2013).

3월까지 실시하며, 중장비나 기계를 이용하여 주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도구는 달라졌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예초기로 작은 나무나 대나무 벌채 후 전기톱으로 거목을 벌채한다. 벌채목은 표고버섯 재배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보통 여름에 불을 놓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여름까지 자란 나무는 불을 놓기 2주전 정리하는 편이다.

화입은 개간할 경지에 불을 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지온을 일시적으로 높여 토양의 화학적, 생물학적 특색을 변화시키고, 잡초와 해충의 구제에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⁷⁾ 한국과 일본 모두 화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화입을 보통 저녁부터 자정 또는 새벽녘 사이에 하는데, 이 시간대에는 바람이 잔잔할 뿐만 아니라, 산정에서 곡지로 산풍이 불기 때문이다. 멀리서 보아도 연기가 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대라서 산림당국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화입을 할 때는 먼저 산신께 간단히 치성을 드려 고하고, 방화대에서 불 놓을 준비를 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을 내려가며 놓는데, 반쯤 내려갔을 때에는 아래에 불을 놓아서 중간에서 불이 합쳐지도록 한다. 불이 합쳐지면, 남은 목재를 온전히 태울 수 있고, 불도 잦아들게 할 수 있다. 불은 광솔가지로 가장자리에서부터 질러나가고, 산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솔가지(불채)로 두드렸다.

일본 시바마을에서도 화입을 할 때 유사한 방법을 사용했다. ‘카다치’라는 방화대를 만들고, 산신에게 술이나 제물을 바쳐 기도를 한다. 불을 놓을 때는 타케다(마른 대나무를 묶은 것)나 현대적 가스버너를 사용한다. 일본 역시 경사부 상부(요코가시라)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점화해 가는데, 왼쪽 측면과 오른쪽 측면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면서 점화한다. 안에서도 위에서부터 차례로 점화해갈 수 있도록 불을 놓는다. 태울 면의 위쪽 절반에 불이 붙어 내려오면, 맨 아래쪽(요코지리)을 점화하여, 불이 다 탈 때까지 지켜본다. 일본 시바마을에서도 불뚱이 될 것 같으면, 삼나무 생가지 잎을 묶어서 만든 빗자루 같은 도구(히케시)로 불을 끈다. 일본 시즈오카 이카와마을의 불 놓는 방법도 이와 유사하다. 불을 놓기 전, 네 방향에 대나무를 세워 술, 물, 소금으로 신에게 고하며, 위에서 아래로 불을 놓았다. 불을 놓고 난 뒤 지면을 정리한 뒤 경사면에서 작물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큰 통나무를 가로로 놓아두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한일 양국 모두 경사지의 위에서 아래로 불을 놓는 것은 불을 통제하기 쉽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 방법이 지력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불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지필 경우, 오래 연소되면서 지열이 증가하고, 지력이 상승하고, 비료성분이

7) 민병근, 앞의 논문(「화전민의 생업관행과 연구」, 1995), 25쪽.

합성된다고 한다. 일본의 실험자료에 따르면 지표온도가 100℃까지 올라갈 때에는 50℃의 경우에 비해 암모니아 성분이 40%, 알칼리성분이 30% 증가한다는 것이다.⁸⁾ 현재 일본에서는 불을 놓기 전, 해당 관청에 '화입허가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득하는데, 일본 시마네현의 경우에는 경사지에 불을 놓을 때 '불을 위에서 아래로 놓을 것, 방화대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⁹⁾

3) 파종과 수확

첫해, 화입이 끝난 개간지는 잡풀이 무성해지기 전에 바로 땅을 갈아엎고 작물을 파종한다. 한국에서 봉화나 울진의 경우에는 팽이를 주로 사용했으며, 팽이 중에서도 날이 길고 날카로워 나무뿌리를 캐거나 나르는 데 용이한 것을 썼다. 별도로 고랑이나 이랑을 탈 수 없기 때문에 씨를 흠뿌린 뒤 팽이로 복토를 하는 식이다. 팽이로 땅을 쪼아서 복토를 할 때에는 산정상부에 있는 사람일수록 앞서나가, 저지대에 있는 사람은 간격차를 두고 오도록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산정상부에서 팽이질로 내려오는 돌에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시바마을에서 첫해 메밀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파종하는데, 보통 오전에 불을 놓고, 그 열기가 식기 전에 바로 파종한다. 용지 경사면 아래쪽부터 지그재그로 올라가면서 씨를 뿌리며, 대나무를 묶어서 만든 자루로 씨와 불탄 재를 섞는다. 과거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팽이로 씨와 재와 흙을 섞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며, 이를 '팽이로 친다.'고 했다.

불을 놓으면, 3년에서 4년 정도로 경작하기 때문에, 땅의 지력과 작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작물을 바꾼다. 한국의 봉화군과 영양군의 사례에서는 주로 첫해에는 조, 보리, 감자 등을 심었고, 두 번째 해부터는 콩과 팥, 옥수수 등을 교차로 심었다. 토질의 종류와 비옥도, 시비 요건에 따라서 작물에 차이가 있다. 일본은 첫해에는 보통 메밀을 심었다. 메밀은 파종부터 "75일째 저녁식사에 맞출 수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결실을 빨리 맺는다고 한다. 이러한 짧은 성장기간으로 인해 화전에서 주요 작물로 여겨졌다. 시바 마을 주민은 메밀이 열에 강하기 때문에 화입한 뒤 바로 파종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하였다. 그 후에는 피, 조, 팥, 콩 등을 해를 바꿔가며 심었다. 피, 조, 팥, 콩은 화입 한 이듬해부터 재배하기 때문에 파종할 때 팽이를 사용하여 풀을 제거한 뒤 심는다.

8) 장재우, 「지력과 화전민의 지혜」, 『농약정보』 v.21.no.3(2000), 7쪽.

9) 일본 시마네현 야스기시의 「火入許可申請書」 참조.

화전 지대는 경작 연수가 증가할수록 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한국 봉화군과 영양군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가장 선호되는 작물은 조였다. 조는 씨앗이 작고 복토만 조금 해주면 생장이 잘 된다. 격년 주기로 콩, 팥 등의 두류를 재배하였고, 마지막에는 거름을 주면서 감자도 재배하였다. 콩의 뿌리혹박테리아는 공기 중의 질소를 단백질로 변화시켜, 토양양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윤작작물로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4년 동안 경작하면 지력이 떨어지고, 잡초제거에 필요한 노동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보통 폐기하고, 휴경한다. 한국에서 휴경지를 다시 경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15년 정도이다. 봉화군의 사례에서는 휴경 후 숙전이 어려우면 오리나무, 소나무, 낙엽송 같은 수목을 식재하며 수림의 재생을 도왔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억새류나 싸리 등과 같은 초본류를 실생활에 이용하거나, 지붕의 재료, 저장용 도구, 광주리, 채반 등과 같은 생활용구와 농기구에 두루 사용하였다.

4. 일본 화전 사례연구

1) 일본 화전 현황

2019년도 기준 일본에서 화전은 8곳(아마가타현, 니이가타현, 후쿠이현, 시가현, 시즈오카현, 시마네현, 미야자키현, 구마모토현)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의 화전은 작물의 종류와 경작방법, 그 지역의 화전 호칭에 따라 키타카미(北上)산지에 분포하는 '아라키형', 오우테와 산지에서 조에츠쿠비키 산지에 분포하는 '카노형', 중부 일본에 넓게 분포하는 '니기하타형', 시코쿠(西國) 규슈(九州) 산지 등 서남 일본에 분포하는 '코바형', 하치조지마 오키나와 등 남방 제도에 분포하는 '근채(뿌리채소)형'이 있다. 시즈오카는 '니기하타형', 시바마을은 '코바형'에 속한다.¹⁰⁾



10) 일본의 화전 유형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椎葉村役場 農林振興課, 『椎葉の焼畑 手順書』(2018), 25쪽.

2) 일본 미야자키현 시바마을

시바마을은 미야자키현에 규슈 산지의 중앙에 위치해있으며 구마모토현과 인접해 있다. 마을 내 산지가 96%를 차지하고, 평균 고도는 1,500m~1,600m에 달하며, 마을 주민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산촌이다. 다카치호고와 시바야마라는 이름으로 2015년도에 세계주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주민들의 말로는 조몬 시대부터 화전을 해왔다고 한다. 2019년도 현지조사 시 시바마을에서 화전을 하는 곳은 '화전계승회', '야키하타소바클럽', '오무카이 소학교', '오마에 사토야마 보전회' 등 총 6곳이었다. 2020년 8월에는 총 4곳이 화전작업을 실시하였는데, 화전계승회부터 야키하타소바클럽, 오무카이 소학교, 오마에 사토야마 보전회 순으로 불을 놓고, 메밀 씨를 뿌렸다. 특히, 오무카이 소학교 학생들은 직접 체험을 하였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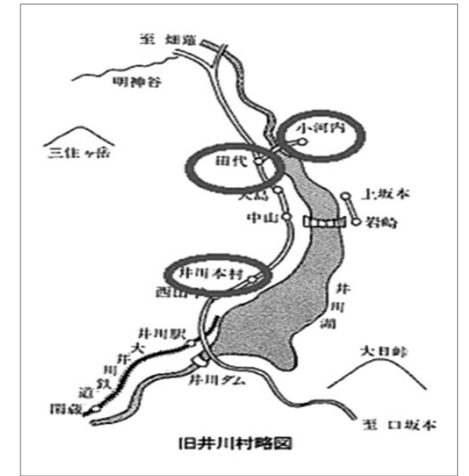
구분	내용
화전계승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미시바지구의 요카리우치 주민 7명을 중심으로 2016년도에 결성하였으며(2019년 기준) 28명이 가입 이 마을은 약 50년 전에 화전전승이 중단되었으나, 세계주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화전복원과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결성 결성 당시 회원들은 화전 경험이 전무하였으나, 시바 마사루 등 유경험자에게 도움을 받아서 진행함
야키하타 소바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부터 시마 마사루(72세 가량)와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함 (2019년 당시 15명 내외) - 시마 마사루 씨는 마을에서 8대째 화전을 경작하고 있음 클럽 회원들은 <화전체험센터>를 열어서 타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험과 민박을 하고 있음
오무카이 소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학교에서는 1988년부터 화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회 넘게 개최함 화전은 학교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으며, 불 넣기부터 씨뿌리기, 수확, 소바만들기 등 전 과정을 습득함 마을 주민에게 대여한 토지에 화전을 하고 있으며, 화전 시 마을 전체 10개 지구 대표 및 소방관들이 참여함
화전연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 주도로 개최하는 연구회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 2~4회 화전 관련 강의 개최 소바의 현대적 가치, 화전 부활 경위 등

11) <http://www.vill.shiiba.miyazaki.jp>. "椎葉村".

3) 일본 시즈오카현 이카와마을

이카와마을은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 아오이 지구에 있는 마을로, 시즈오카의 가장 북쪽 3,000m 높은 산들이 이어진 '남알프스 지역'의 관문에 위치해있다. 이 지역은 2014년도에 에코파크로 인정을 받았다. 주민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산림벌채(삼나무 판매), 관광업(에코파크) 등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다.

이카와마을은 조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으며, 에도시대에도 화전농업을 했다고 한다. 이카와에서 화전농업은 1950~60년대까지 남아있었다가 경제부흥기에 중단되었으며, 2012년 50년만에 다시 복원되었다. 하지만 이카와마을 타시로 스와신사에서 산천어 축제 시 제단에 올릴 산천어 스시를 만들 때 화전에서 경작한 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화전 전통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¹²⁾



이카와마을 또한 시바마을처럼 잡곡 위주의 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윤작형태를 보였다. 크게 봄 화전과 여름 화전으로 나뉘었는데, 봄 화전은 조나 피를 얻기 위해 봄에 불을 놓는 것이며, 8월 중에 실시하는 여름 화전은 메밀을 얻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여름 화전만 남아있다. 이 지방에는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은 움막 같은 것을 짓고, 화전을 하는 원거리 화전경작도 많았다. 현재 이카와마을에서는 '이카와 자치회', '이카와 화전협회', '화전클럽 유이노나카마' 등의 단체가 산촌 문화전통의 지속과 발전, 그리고 채래작물의 전승을 위해서 화전을 유지하고 있다.

12) 「静岡市井川の焼畑農業と体験型観光ガイド」, 静岡市井川地域おこし協力隊(2017.3.16.改訂)

구분	내용
타시로 스와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시로 스와신사에서는 매년 8월 하순에 산천어 축제를 개최하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함 이 축제에서 신전에 바치는 제례음식이 '신의 계곡'에서 잡은 산천어에 조를 버무린 산천어 슌시인데, 이때 사용하는 조는 화전 경작을 통해서 얻은 것임. 조를 얻기 위하여 타시로 마을의 4개 지구가 돌아가면서 매년 화전을 경작하고 있음
화전클럽 '유이노나카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도부터 고고우치 마을의 마사토 모치즈키 부부(60대 후반)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 10여 명이 주축이 되어 결성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에는 6월 18일 나뭇가지를 정리하고, 7월 31일 600㎡ 면적의 밭에 불을 놓고 메밀을 파종하였음¹³⁾ 매년 화전을 경작하고 있으며, 타지역 사람들에게도 개방하여 화전 체험신청을 받고 있음. 별도 게스트하우스도 운영 중임 재래작물의 보존과 전승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카와 작물의 내외 홍보 등을 중요시 함
이카와 화전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도부터 모치즈키의 도움을 받아 마을 주민과 '지역부흥협력단'에 참여한 타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화전을 복원함. 마을에서 쓰지 않는 땅(차밭)을 대여하여 화전으로 경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종의 전승과 새로운 나무의 식재 등을 목적으로 함 2019년 당시 1회 규모가 300㎡으로 더 확장을 시도하고 있으나, 참여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맺음말

본 글은 한국과 일본의 화전기술 비교 및 현재 일본의 화전현황과 그 의미를 연구하기 위한 사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일부 지역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화전기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용지선정, 벌채, 화입, 휴경지의 관리, 윤작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였다. 하지만, 첫째 경작 작물 등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의 마을에서 화전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시바마을과 이카와마을은 과거의 식량자원 생산을 위하여 화전을 경작하였다면 현재는 지역의 전통적 경작 방법 및 작물의 계승, 청정지역의 친환경 농산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단체의 결성, 관민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전은 일본에서 그간 중단된 많은 지역에서 복원되고 있으며, 지역활성화의 자원이 되고 있다. 이는 화전이 역사성과 지역성, 공동체성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농경방법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3) 「あなたの静岡新聞」, 2022. 10. 5.

전통적 농경방법의 순기능을 살리고,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로서 농경방법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무형유산의 전승의 맥락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짧은 연구기간과 한정된 사례지로 이러한 문화적 현상을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본의 화전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화전의 전승 및 복원 과정과 지역활성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지역사례 연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본 화전 전승과 복원 문화의 특징과 함께 과거 한국 화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韓国と日本の焼畑技術の比較と日本の事例研究

姜敬恵(国立無形遺産院)

1. はじめに

農耕・漁労に関する伝統知識は、伝統的な生産活動および生業体系の遺産であり、共同体と自然環境との相互作用における過程で蓄積・伝承されてきた無形遺産である。これは、韓国で2016年度に施行された「無形文化財の保全および振興に関する法律」における「韓医薬、農耕・漁労に関する伝統知識」の категорияに含まれ、法的保護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韓国国外では、以前から農耕・漁労の技術と伝統知識に関して様々な議論が行われてきた。特に、2003年に締結された生物多様性条約(CBD)および世界知的所有権機関(WIPO)では、伝統知識とその保持者を尊重し、それを利用することで発生する利益を公平に共有するため、法的制度を設けるべく議論が続けられた。ユネスコは2003年、無形遺産保護条約で「自然および万物に関する知識および慣習」を無形遺産の一分野として認定し、伝統的な生態知識、土着の知識、地域の動植物に関する知識、共同体と自然環境との相互作用における過程で発展した知識、方法、技術、慣習などを保護している。最近になり、農耕に関する伝統知識が国家無形文化財に指定されたが、近代化や産業化に伴う時代の変化や発展の基盤となった知識にもかかわらず、これまで注目されなかった消滅の懸念が大きい分野でもある。

国立無形遺産院は、2017年度から韓国無形遺産総合調査を実施し、徐々に消滅しつつある農耕・漁労に関する伝統知識の優先的な収集・記録に努めている。2020年までの4年間にわたって、農耕・漁労分野の現場調査を地域別を実施し、計406項目を収集した。このうち農耕分野の調査対象としては、地域や村などの共同体が生業のために維持・伝承しているもので、現在までその技術と方法が維持されているもの、遺産の持続的な保存が50年を超えるもの、地域

性や歴史が反映されているものを中心に選定した。主に、稲作に関する農業知識、畑の耕作に関する農業知識、伝統的な水利体系、特産物の栽培や文化があり、林業に関しては高麗人参や薬草の採取者の慣行、山菜の採取、養蜂、その他の家畜飼育、農耕文化と生活知識などがある。既に消滅した農耕に関する伝統知識は除外されたが、これは無形遺産の最も重要な価値は伝承性であるという観点から、現在伝承されている項目を中心に調査が行われたためである。

筆者は、韓国では1970年代に消滅したものの、日本では2000年代以降も非常に活発に行われている「焼畑」(韓国の「火田」)に注目した。焼畑とはしばしば、「未開墾地や休耕地を新たに耕作する際に火を放ち、野草や雑木を燃やして農耕に利用する農法」として¹⁾ 原始的な経済の略奪行為の一形態と定義されている。焼畑は、韓国の農業史において重要な部分を占めてきた伝統農耕方式で、地形・地勢、土質、作物の生態などに関する相当な伝統知識が必要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における認識は良いものではなかった。「消滅」し「根絶されるべき」文化だと見なされていたのである。したがって、焼畑が現在活発に行われている日本の事例を通じて、焼畑の持続可能性、伝統農耕方式の復興に対する地域社会の認識などに注目し、去る2019年9月16日から10月5日にかけて、静岡県井川地区と宮崎県椎葉村で現地調査を実施した。

本稿は、韓国では既に消滅した耕作方法である焼畑が日本では長く続いている点、そして、伝承が途絶えた地域でも最近再び焼畑が復活している点に着目し、両国における焼畑の耕作方法を比較研究して、日本における焼畑活性化の様相を分析するために執筆された。すなわち、日本における焼畑の実態とその農耕技術、そして焼畑に対する認識の変化などを把握し、焼畑が農耕文化の資産であり、将来の生態系農業の代替としてどのような可能性を持つのかを考察する。これを通じて、韓国で森林破壊や災害を防ぐために「根絶されるべき」農耕方式という認識から脱却し、過去の焼畑農法に対する理解を新たにして、その意義を改めて考える。本稿ではまず、韓国における焼畑農法の消滅過程を理解するために、韓国の焼畑の歴史を簡単に整理し、焼畑の伝統知識について韓国と日本の事例を比較研究した。韓国の焼畑技術は60年前当時の技術であるという点や、日本の多くの焼畑地のうち静岡県と宮崎県の2か所の比較研究であるという点で、ある程度の限界が存在する。しかし、この2か所の焼畑地は雑穀の輪作形

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9084&cid=46631&categoryId=46631>, 「韓国民族文化大百科辞典」, <焼畑>”

態を取っている点で韓国と類似しており、日本で一部の道具に機械装置が導入された点は変化したが、伝統的な方式はそのまま維持されているので比較が可能だった。また、日本の他地域における焼畑の事例を含む包括的な分析は、今後の研究で行う予定である。

2. 韓国の焼畑および焼畑の整理

朝鮮時代やそれ以前の焼畑に関する記録から、当時の焼畑の様子を分析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文献によると、6世紀の新羅真興王の代に始まったとされ、昌寧の定界碑に刻まれた「白田畚」が「火田(焼畑)」を意味すると見られる。高麗時代以降の田作制度は、常に耕作可能な不易田、隔年で耕作する一易田、1年耕作して2年は休耕する再易田に区分されている。このうち、再易田が現在の焼畑に該当し、山田と平田に区分されていることから、焼畑民の存在が制度的に認められていたと思われる。²⁾ 朝鮮時代の焼畑の面積や数について正確な史料を入手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前期よりも後期になって焼畑の面積や焼畑民の数が増えていることがわかる。³⁾

日本統治時代には、焼畑人口が急激に増加した。朝鮮時代とはかなり異なる様相を呈していたと言える。日本統治時代に焼畑民が急速に増加したのは、土地調査事業などにより自作農や小作農が減少し、農地を失った人々が生計を立てられる最後の場所が焼畑だったためである。(その他は都市の土幕民(スラム住民)になったり、国外に移住したりした。) 国有林であれ私有林であれ、木を燃やして一定程度の農地を確保できれば4~5年間は農業を行えるという点が、農地を失った人々が焼畑に群がった最も大きな理由だった。この当時の焼畑民は、別の方法の農業を選んだ人々というよりは、貧困層に近かった。新聞では、森林の荒廃および植民地の経済政策(山林資源の収奪)を妨げる社会問題として連日のように取り上げられた。朝鮮総督府では1911年に森林法を制定し、1919年から1924年まで焼畑民の実態調査を行った。その結果としては、朝鮮総督府の調査資料集「焼畑の現場」によると2万町歩以上増加しており、1926年から1939年までの農業関連統計資料によると自作農が12%、自小作農が

20%、小作農は33%増加したが、純焼畑民は100%増加した。⁴⁾ 日本統治時代に焼畑民が増加したのは、朝鮮時代以降の自然な流れによる成長ではなく、日本統治時代の経済政策が生み出した1つの特殊な現象であると考えられる。日本は焼畑禁止対策を講じようとしたが、実際には焼畑を禁止して焼畑民を解散させることが目的だったため、当局の生活安定化対策の不備や監視網のすり抜けにより、焼畑はいっそう拡大した。

日本からの独立後も韓国で焼畑耕作農家は増加していき、これによって森林の荒廃、地すべりなどの災害が続出し、森林の復旧や農耕地および焼畑民の住居環境の改善などの必要性が高まった。朴正熙政権は、1966年4月23日に「焼畑整理に関する法律」を制定して焼畑整理事業を開始し、1973年に「治山緑化10年計画」を発表するなど、事業に拍車がかかった。そして、朴正熙大統領が嶺東高速道路の予定地を視察したことをきっかけに、1974年から1978年まで本格的な焼畑整理事業が推進された。⁵⁾ 焼畑整理事業の主な枠組みとしては、傾斜度20度以上の土地の居住者と焼畑を行う焼畑民の移住(他地域)または強制移転、農耕地(1.5ha)および住宅資金(23,300ウォン)の支援、また傾斜度20度以下の土地の居住者と焼畑地を保有している焼畑民の定着、水産・養蚕・畜産などの振興事業に参加できるよう関連事業への支援(実効性の有無に関係なく)などである。傾斜度20度以下の土地に居住していても、20度以上の森林に焼畑を保有していることが多かったため、追加支援策が必要であった。このような焼畑整理事業は1960年代に開始され、1978年(一部は1979年まで)に完了した。その結果、焼畑民全体の93.4%が現地に着し、6.6%は大都市または他地域に移住して農業を行ったり賃金労働者となったりした。当時、韓国の経済開発と高速道路網の整備によって労働力が移動しやすくなり、焼畑地帯の高冷地の畑への転換や生産物の流通が容易になるなど、社会の経済条件の変化に伴って焼畑民は消滅した。韓国では焼畑が完全に消滅したため、これ以上の考察は難しい。また、ほとんどの研究が焼畑民の由来や焼畑整理事業、社会経済の実態などに関するものであり、焼畑民の生活や焼畑の技術および方式に関する調査は少ない。

2) 宮塚利雄「韓国の焼畑民に関する私的研究」、『東国大学大学院学術論叢』第4集(1980), p.284.

3) カン・マンギル「日本統治時代の焼畑民生活」、『東方学誌』(1981), p.157.

4) カン・マンギル「日本統治時代の焼畑民生活」、『東方学誌』(1981), p.169.

5) シン・ミンジョン「韓国政府による焼畑整理事業の展開過程と焼畑民の実態(1965~1979年)」、『経済史学』第50号(2011), p.69.

3. 韓国と日本の焼畑技術の比較

焼畑技術とは、用地を選定して伐採をした後、乾燥させて火を放ち、播種をして刈り取るまでの全過程をいう。この焼畑技術の比較は、韓国の慶尚北道 英陽郡 水下里および奉化郡 小川面 県洞里における過去の焼畑技術と、日本の宮崎県椎葉村および静岡県井川地区における焼畑技術の事例に限定した。一部事例の比較をもって両国の焼畑技術を一般化するのは無理があり、日本は現在でも焼畑耕作方式が続けられているため、韓国と比較した場合、道具や方法などに変化があるという点も考慮する必要がある。他地域との更なる比較研究は、今後の研究を通じて補完することとする。⁶⁾

1) 用地選定

韓国で焼畑用地を選定する際は、傾斜、地形、土質、風速、日照時間などを基準とした。すなわち、日当たりが良く、霜が降りるのが遅い土地が適地とされた。奉化郡 県洞里で焼畑を行っていた住民によれば、北東側が塞がっており、風が強くない穏やかな斜面側が、日当たりが良く暖かいという。また、矮林よりも混林が、原生林よりも二次林が適していた。日本の椎葉村でも上記の条件に加えて、竹が育つ土地や山間の窪んだ土地は、土壌が肥沃で風が吹かず適しているのだという。一方、日当たりが悪くススキが多いのは適さない場所で、雑穀を栽培する場合は石や岩が多い場所を避けるのだという。

韓国の場合、1970年代まで焼畑を行っていたため、社会的な条件も考慮した。焼畑地は、家との距離が徒歩で通える4km前後である必要があり、官庁の監視を避けられるように道路から一定の距離がある場所で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共同焼畑を行う場所は、焼畑地が3,000坪程度は確保されなければならず、山頂部は風が強いため6~7合目あたりを利用したという。焼畑地から居住地まで収穫物を運ぶ必要があり、監督官の監視網のことも考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ため、このような部分も用地選定の際に考慮された。

2) 伐採と火入れ

韓国と日本ではいずれも、伐採は主に秋に、火入れは翌年の春に行われた。伐採した木

を冬に乾燥させることで、翌年よく燃えるようにするためだ。春に伐採して夏にすぐ火入れを行うこともあったが、それはまれであった。韓国では鎌や斧を使って低地帯から高地帯に登りながら作業し、小さな木から大きな木へという順で伐採した。ある程度乾燥させたら、翌年の春に火が焼畑予定地の外まで燃え広がらないよう防火帯を設置した。日本でも、竹は旧暦8月15日以降から12月にかけて伐採され、主に手斧や鋸、鎌などが使われた。巨木の場合、樹皮を一周にわたり剥がし取る「巻き枯らし」を行い、枯らした後に伐採する。現在は10月から翌年3月にかけて行われており、重機や機械を利用して所有者が単独で行うこともある。道具は変化したが、韓国と同様に刈払機で小さな木や竹を伐採した後、電動ノコギリで巨木を伐採する。伐採木はシイタケ栽培などで使われることもある。通常は夏に火入れを行うため、冬が過ぎて夏までに育った木は、火入れの2週間前に整理することが多い。

火入れとは、開墾する耕地に火を放つことで、地温を一時的に上げて土壌の化学的・生物学的な特色を変化させ、雑草や害虫の駆除に大きな効果があると言われている。⁷⁾ 韓国も日本も火入れを非常に重視している。韓国では通常、火入れを夜から深夜または明け方の間に行うが、この時間帯は風が穏やかなだけでなく、山頂から谷間に山風が吹くためである。遠くから見ても煙が目立たない時間帯なので、森林当局の監視を避け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理由もあった。火入れをするときは、まず山の神に対して簡単な祈禱を捧げ、防火帯で火を放つ準備をする。上部から下部へと下りるように火を放ち、半分ほど下ったら下部から火を放って、途中で火が一体になるようにする。火が一体になると、残った木材が完全に燃え、鎮火される。火は松の小枝により端から燃え広がり、火が山に燃え広がるのを防ぐために松の生枝(火消し棒)で叩いた。

日本の椎葉村でも火入れをする際に類似した方法が用いられる。「火断(かだち)」という防火帯を作り、山の神に酒や供物を捧げて祈禱する。火入れには、乾いた竹を束ねたものやガスバーナーを使用する。日本でもやはり、傾斜部の上部(横頭)から始まり、下方に向かって点火していくが、左側面と右側面に沿ってゆっくり下りながら点火する。内側も上から順に点火していけるように火を放つ。燃やす面の上半分に火がついて下りてきたら、一番下側(横尻)に点火し、火が燃え尽きるまで見守る。日本の椎葉村でも火種が跳ねそうな場合は、杉の生枝の葉を束ねて作ったほうきのような道具(火消し)で消火する。日本の静岡県井川地区における火入れの方法もこれと類似している。火入れの前に四方向に竹を立てて、酒や水、塩

6) 本章の焼畑技術については、次の2つの論文を参照した。ミン・ビョングン「焼畑民の生業慣行と研究」安東大学修士論文(1995)、ペ・ヨンドン「焼畑農業の技術と伝承知識の意義 - 20世紀における慶尚北道 英陽郡 水下里の事例 - 」、「比較民俗学」第51集。

7) ミン・ビョングン、同上、p.25。

を備えて神に祈り、上から下に火を放つ。火入れの後、地面を整えて傾斜面から作物が落ちていかないように、大きな丸太が横向きに置かれる点が特徴的だ。このように、日韓両国とも傾斜地の上から下に向かって火を放つのは、火を制御しやすいだけでなく、この方法が地力を高めてくれるという理由でもある。上から下へ火を放つと、長く燃焼しながら地温が上昇し、地力が増進して肥料成分が合成されるという。日本の実験資料によれば、地表温度が100°Cまで上昇する場合、50°Cの場合に比べてアンモニア成分が40%、アルカリ成分が30%増加するという。⁸⁾ 日本では現在、火入れの前に当該官庁に「火入許可申請書」を提出して許可を得るが、島根県の場合は、傾斜地に火を放つ際に「火を上から下に放つこと、防火帯を設置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ている。⁹⁾

3) 播種と収穫

火入れ一年目の開墾地は、雑草が生い茂る前にすぐ土地を耕して作物を播種する。韓国の奉化郡や蔚珍の場合は、主に鋤の中でも刃が長くて鋭く、木の根を掘ったり運んだりするのに便利なものが使われた。別途、畝や溝を作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種をまいた後、鋤で覆土を施す方法が取られた。鋤で地面を掘って覆土を施す場合は、山頂にいる人ほど先に進み、低地にいる人は間隔を空けて進む必要があった。そうしなければ、鋤作業によって山頂部から落ちてくる石に当たることからだ。

日本の椎葉村で一年目に育てるソバは、7月末から8月初めに播種されるが、通常は午前中に火入れを行い、その熱気が冷める前にすぐ播種する。用地の傾斜面の下からジグザグに上りながら種をまき、竹を束ねて作ったほうきで種と燃えた灰を混ぜる。過去には韓国と同様に、鋤で種と灰と土を混ぜることもあったといい、これを「鋤で打つ」と言った。

火入れをすると3年から4年ほど耕作できるため、土地の地力と作物の特性を考慮して毎年作物を変更する。韓国の奉化郡と英陽郡の事例では、主に一年目にはアワ、オオムギ、ジャガイモなどを植え、2年目からは大豆や小豆、トウモロコシなどを交互に植えた。土壌の種類や肥沃度、施肥基準によって作物が異なる。日本では通常、一年目にはソバを植える。ソバは播種から「75日目の夕食に間に合う」という言葉があるほど、早く実を結ぶという。このように栽培期間が短いため、焼畑における主要作物とされた。椎葉村の住民によれば、ソ

8) チャン・ジェウ「地力と焼畑民の知恵」『農業情報』v.21.no.3(2000), p.7.

9) 日本 島根県安来市の「火入許可申請書」を参照

バは熱に強いので、火入れ後すぐに播種できる作物だという。それ以降は、ヒエ、アワ、小豆、大豆などを年ごとに入れ替えて植えた。ヒエ、アワ、小豆、大豆は火入れの翌年から栽培するので、播種するときは鋤を使って除草してから植える。

焼畑地帯は耕作年数が長くなるほど地力が弱まるため、韓国の奉化郡と英陽郡の事例を総合してみると、最も適した作物はアワであった。アワは種子が小さく、覆土のみでよく生長する。隔年周期で大豆、小豆などの豆類を栽培し、最後には肥料を与えてジャガイモも栽培した。大豆の根粒菌は空気中の窒素をタンパク質に変化させ、土壌養分を維持するのに役立つことが知られており、輪作に適した作物とされていたようである。

3~4年間耕作すると地力が落ちて、雑草の除去に必要な労働時間が増えるため、通常は廃棄して休耕する。韓国で休耕地を再耕作するのに要する期間は、10~15年ほどである。奉化郡の事例では、休耕後の熟田化が困難な場合、ハンノキ、松、落葉松などの樹木を植えて樹林の再生を促した。そして、2~3年が経過した時点で、ススキやハギなどの草本類を生活で利用したり、屋根の材料、貯蔵用具、丸籠、ざるなどの生活用具や農機具として幅広く使用したりした。

4. 日本の焼畑事例についての研究

1) 日本の焼畑の現状

2019年の時点で、日本における焼畑は8か所(山形県、新潟県、福井県、滋賀県、静岡県、島根県、宮崎県、熊本県)において確認された。日本の焼畑には、作物の種類と耕作方法、その地域の焼畑の呼称に応じて、北上山地に分布する「アラキ型」、奥羽・出羽山地から上越・頸城山地に分布する「カノ型」、中部日本に広く分布する「ナギハタ型」、四国・九州山地など西南日本に分布する「コバ型」、八丈島・沖縄など南方諸島に分布する「根栽型」が存在する。静岡は「ナギハタ型」、椎葉村は「コバ型」に属する。¹⁰⁾



10) 日本の焼畑の種類については、更なる研究が必要である。椎葉村役場 農林振興課「椎葉の焼畑 手順書」(2018), p.25.

2) 日本の宮崎県椎葉村

宮崎県の椎葉村は九州山地の中央に位置し、熊本県と隣接している。村内は山地が96%を占め、平均標高は1,500m～1,600mに達し、村民の50%以上が農業に従事する典型的な山村である。「高千穂郷・椎葉山地域」という名称で、2015年、世界農業遺産に認定された。住民の話によると、縄文時代から焼畑を行っているという。2019年度の現地調査の際、椎葉村で焼畑を行っていたのは「夜狩内焼畑継承会」、「焼畑蕎麦苦楽部」、「尾向小学校」、「尾前里山保全の会」など計6か所だった。2020年8月には計4か所が焼畑作業を行い、夜狩内焼畑継承会から焼畑蕎麦苦楽部、尾向小学校、尾前里山保全の会の順に火入れをしてソバの種をまいた。尾向小学校の生徒は実際に作業を体験した。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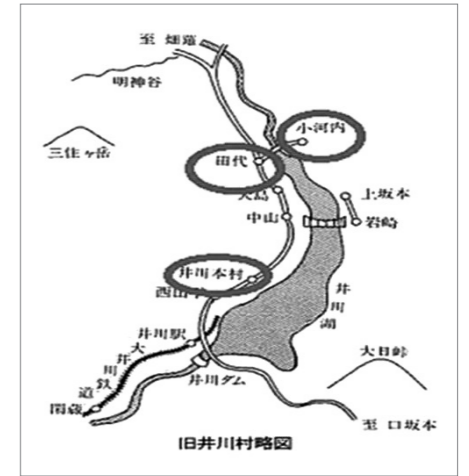
区分	内容
夜狩内焼畑継承会	<ul style="list-style-type: none"> 上椎葉地区の夜狩内の住民7人を中心として2016年度に結成され、(2019年時点)28人が加入 この村は約50年前に焼畑伝承が中断されたが、世界農業遺産に認定後、焼畑の復元と地域活性化を目的として結成 結成当時、会員は焼畑の経験が皆無だったが、椎葉 勝氏など経験者の助けを得て活動
焼畑蕎麦苦楽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年に椎葉 勝氏(72歳前後)と地域住民が中心となり結成(2019年当時、約15人) - 椎葉 勝氏は、地域内で8代目として焼畑を行っている。 焼畑蕎麦苦楽部の会員は<焼畑体験センター>を開き、他地域の人々を対象とした体験や民宿を提供
尾向小学校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小学校では、1988年から焼畑を実施しており、現在まで30回以上開催 焼畑は学校の正規カリキュラムに含まれており、火入れから種まき、収穫、蕎麦作りなど全過程を習得 村民に貸し出した土地で焼畑を行っており、焼畑には村の全10地区の代表および消防士が参加
椎葉焼畑研究会	<ul style="list-style-type: none"> 役場主導で開催される研究会で、関連の専門家を招待して焼畑関連の講義を年2～4回開催 蕎麦の現代的価値、焼畑復活の経緯など

11) <椎葉村 Web Site> <http://www.vill.shiiba.miyazaki.jp>.

3) 日本の静岡県井川地区

静岡県静岡市葵区井川地区は、静岡の最北で3,000m級の高い山々が連なる「南アルプス」の玄関口に位置している。この地域は2014年度にエコパークに認定された。住民は主に農業に従事しており、森林伐採(杉の販売)、観光業(エコパーク)などを通じて収入を得ている。

井川地区は縄文時代から人が住み始め、江戸時代にも焼畑農業を行っていたという。井川では焼畑農業が1950～60年代まで続いていたが、経済復興期に中断した後、2012年に50年ぶりに復活した。しかし、井川地区田代の諏訪神社で



のヤマメ祭りにおいて、祭壇に供えるヤマメ寿司を作る際に、焼畑で栽培したアワが使用されていたことから、焼畑の伝統が受け継がれてきた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¹²⁾

井川地区もまた、椎葉村のように雑穀中心の作物を輪作により栽培している。焼畑は大きく分けて春と夏に行われるが、春の焼畑はアワやヒエを栽培するため春に火入れを行い、8月中に行う夏の焼畑はソバを栽培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現在は夏の焼畑だけが残っている。この地方では、居住地から遠く離れた場所に小屋のようなものを建てて焼畑を行う、遠距離の焼畑耕作も多くみられた。現在、井川地区では「井川自治会連合会」、「井川の焼畑農業の会」、「焼畑倶楽部『結のなかま』」などの団体が、山村の伝統文化の継承と発展、在来作物の伝承のために焼畑を維持している。

12) 「静岡市井川の焼畑農業と体験型観光ガイド」静岡市井川地域おこし協力隊(2017.3.16.改訂)

구분	내용
田代の諏訪神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田代の諏訪神社では毎年8月下旬にヤマメ祭りを開催し、地域の安寧を祈願 この祭りでは、「神域」で捕れたヤマメにアワを和えたヤマメ寿司を神前に奉納するが、このとき使うアワは焼畑耕作によって収穫されたもの。アワを栽培するために田代の4地区が毎年交代で焼畑を実施
焼畑倶楽部「結のなかま」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年度に小河内地区の望月夫妻(60代後半)が中心となり、地域住民10人余りと結成 - 2022年6月18日に木の枝を整理し、7月31日に600m²の畑に火入れをしてソバを播種¹³⁾ 焼畑を毎年実施しており、他地域の人々にも開放して焼畑体験を実施している。別途、ゲストハウスも運営中 在来作物の保存と伝承に対して強い関心を持ち、井川産の作物の内外への広報などに力を入れている。
井川の焼畑農業の会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年度に望月氏の助けにより、地区住民と「地域復興協力団」に参加した他地域の人々を中心に焼畑を復元 村で使わない土地(茶畑)を貸し出し、焼畑として耕作 - 在来種の伝承や新たな木の植樹などを目的とする。 2019年当時は1回の規模が300m²で、更なる拡張を試みているが、参加人数の不足により難航

5. まとめ

本稿は、韓国と日本の焼畑技術の比較および現在の日本における焼畑の現状とその意味を研究するための事前研究であると言える。この研究を通じて、一部の地域ではあるものの、韓国と日本における焼畑技術の類似点や相違点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た。用地選定、伐採、火入れ、休耕地の管理、輪作方式など多くの部分で類似していた。しかし、一年目に耕作する作物などに多少の違いがあった。そして現在、日本の地域で焼畑がどのように維持されているのかを知ることができた。椎葉村と井川地区は、以前は食糧資源生産のために焼畑を行っていたのに対し、現在は地域の伝統的な耕作方法および作物の継承、汚染されていない地域におけるエコ農産物としての付加価値の創出など、地域活性化の側面からアプローチがなされており、そのために団体の結成、官民の協力などを推進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焼畑は、日本でこれまで中断されていた多くの地域で復元されており、地域活性化の資源となっている。それは、焼畑には歴史や地域性、共同性が反映されていると同時に、自然と共生できる農耕方法であるという認識が高まっているためである。

13) 2022.10.5.「あなたの静岡新聞」

伝統的農耕方法の持つプラスの機能を活かし、自然と共生できる共同体文化として農耕方法を維持していくことは、無形遺産の伝承という面で大きな後押しとなる。研究期間が短く、事例も限られているため、このような文化的現象を盛り込むことはできない。日本の焼畑がどのような特性を持つのか、焼畑の伝承および復元の過程や地域活性化の方向性に関する様々な地域事例について、さらに研究が行われる必要がある。それにより、日本の焼畑伝承と復元文化の特徴と共に、過去の韓国における焼畑の特殊性と普遍性を把握できるだろう。

人類学者・泉靖一と濟州島

- ポストコロニアル的批判 -

인류학자 이즈미 세이치와 제주도

- 포스트 콜로니얼적 비판 -

石村智(이시무라 도모)

東京文化財研究所(동경문화재연구소)

人類学者・泉靖一と濟州島

- ポストコロニアル的批判 -

石村智(東京文化財研究所)

1. はじめに

泉靖一(1915-1970)は日本の20世紀を代表する人類学者である。その業績は、石田英一郎と共に日本最初の文化人類学の講座を東京大学に設立したことや、1958年より始めたアンデス地域での調査によりインカ文明以前のコトシュ(Kotosh)遺跡を発見したことなどが挙げられる¹⁾。しかし彼の学問人生において、その前半生における二つの調査、すなわち濟州島の調査とアイヌ民族の調査はとりわけ重要である。なぜなら前者は大日本帝国のもとで植民地支配の下にあった濟州島、後者は戦後の国民国家としての日本の中にある先住民としてのアイヌ民族を対象としている点で、共通点がみとめられるからである。すなわち、マジョリティに属する人類学者がマイノリティを調査対象にするという、ポストコロニアル的な状況が存在するのである。

そこで本論では、泉靖一による濟州島とアイヌ民族の調査を批判的にレビューし、その体験が泉靖一の後半生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たかについて論じると同時に、戦前から戦後を通じた日本の人類学の黎明期におけるポストコロニアル的状況を批判的に論じることとしたい。

2. 泉靖一の濟州島調査(1936-1937)

泉靖一は1915年に東京で生まれたが、12歳になる1927年に、父親の泉哲が京城帝国大学

1) 泉靖一の生涯については藤本英夫、『泉靖一伝：アンデスから濟州島へ』(平凡社、1994)に詳しい。

に赴任するのにあわせて京城(現在のソウル)に移った。1933年に京城帝国大学に入学した後は、登山に熱心に取り組み、朝鮮の山々を登攀した。そんな中、1935年に濟州島の漢拏山(ハルラ山)の冬山登山で遭難し、友人の一人を亡くした。この時、泉は地元のシャーマンに出会い、人類学に興味を持った。そして朝鮮のシャーマニズムを研究していた赤松智城および秋葉隆がいる京城帝国大学宗教学・社会学研究室の門を叩いた。秋葉は泉にマリノフスキーの『西太平洋の遠洋航海者』²⁾を手渡して人類学の道を示し、1936年より泉は秋葉の元で研究生活を始めた。その後、1936年から1937年にかけて濟州島で現地調査を行い、その成果を卒業論文「濟州島—その社会人類学的研究—」としてまとめた。この論文は当時の濟州島の社会の全体像を包括的に記録した本格的な民族誌であり、後に単行本『濟州島』(1966年)に所収された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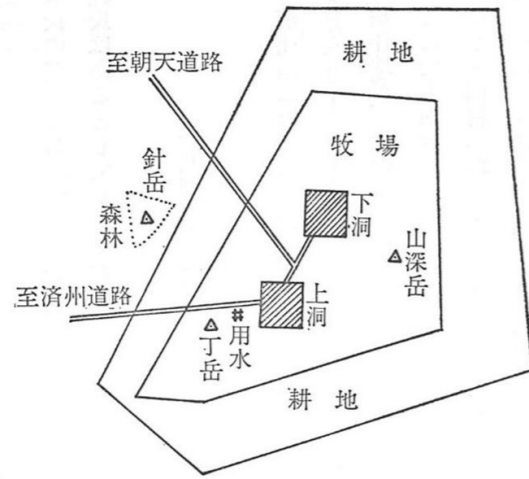
この論文で注目すべき部分は、第四章「超家族集団の研究」において、共同体を分析するためのモデルとして「碾磨集団」を措定していることである。碾磨とは人馬によって回すひき臼のことで、村落の中では小屋の中に設置されている。ひとつの村落の中には複数の碾磨小屋が存在し、例えば泉靖一が現地調査を行った橋来里には7つの碾磨小屋があり、それぞれの碾磨を数家族、多い時には20家族が共同で使用していた。泉はこの碾磨を共有する家族のまとまりをひとつの集団単位とみなし、村落の共同体は複数の碾磨集団によって構成されていると分析した。

しかし実際のところ、現地の言葉(方言)においてこの碾磨集団を表す名称は存在しない⁴⁾。つまり碾磨集団とは、泉靖一が分析のために作り出したモデルと言うことができる。すなわち碾磨集団とは、現地の人々の内在的(イーミック)な論理ではなく、人類学者としての泉靖一が理論的に作り出した外在的(エティック)な論理ということができる。これはあたかもマリノフスキーがトロブリアン諸島のクラ交易を観察し、二種類の財が円環状のネットワークに沿ってそれぞれ右回り、左回りに交換されるという「クラ・リング」のモデルを見出したことと類似している。こうした泉の分析手法は、秋葉隆を通じて知ったマリノフスキーの分析手法を参考にした可能性があるだろ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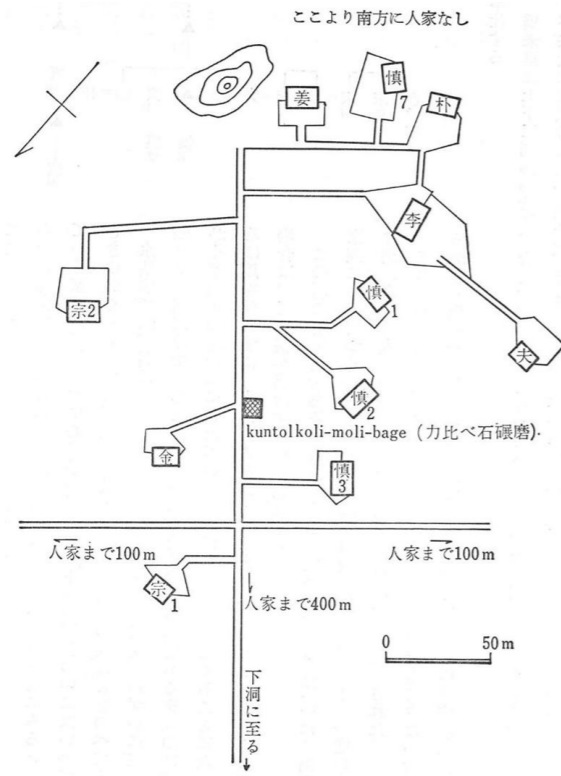
2) Malinowski, B.,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An Account of Native Enterprise and Adventure in the Archipelagoes of Melanesian New Guinea(London: Routledge, 1922)。

3) 泉靖一、『濟州島』(東京大学出版会、1966)。

4) このことは泉も気付いており言及している(泉靖一, ibid(『濟州島』1966), 162頁)。



<図 1> 橋来里の地理的な位置(泉1966)



<図 2> 橋来里における碾磨使用者の分布図(泉1966)

3. 泉靖一のアイヌ民族調査(1951-1953)

日本の敗戦とともに内地に戻った泉靖一は、1951年から3か年にわたって実施された「アイヌ民族総合調査」にメンバーの一人として参加した。この調査は複数の学者によって構成された調査団によって実施され、その中で泉靖一はリーダー的な役割を果た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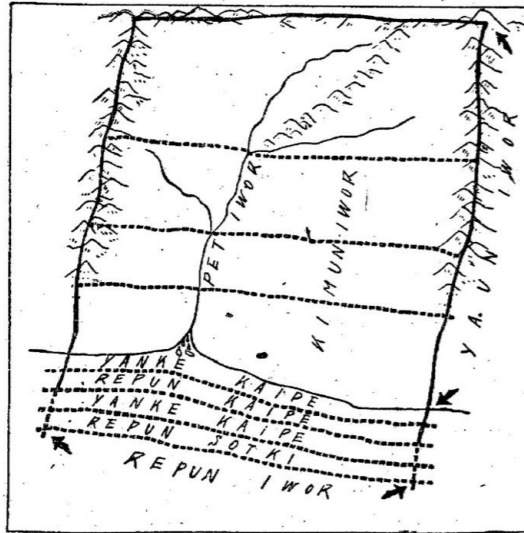
この調査において、泉靖一はアイヌ民族の共同体を分析するためのモデルとして「イオル(iwor)」というものを指定した⁵⁾。イオルとは同一河川の流域に住む人々によって占有される領域のことであり、他の流域の人々が無断に侵入することは許されないとされる。このイオルというモデルはその後のアイヌ民族の研究に大きな影響を与え、今日ではアイヌ文化にとって必要な資源を確保する場であるとともに、アイヌ文化の活動が行われる伝統的生活空間を意味するものとしても用いられている⁶⁾。

しかし近年では、イオルとは本来、狩場を意味し、アイヌ語において河川流域における全体の領域を示すものとして使われた用例はないという批判がなされるようになった⁷⁾。すなわち、イオルとはアイヌ民族のイーミックな論理ではなく、泉靖一が理論的に指定したエティックな論理であるということが出来る。

泉がアイヌ民族調査で用いた分析手法は、最初のフィールドワークである濟州島調査で使用されたものと類似している。すなわちフィールドワークによって異文化を記述するとともに、その社会構造をモデルとして理論化するアプローチである。これはマリノフスキーをはじめとするイギリスの社会人類学に典型的なアプローチであり、文化相対主義を主張し理論化に批判的なアメリカの文化人類学のアプローチとは異なるものである。このように泉の人類学研究は、濟州島の調査によって方向付けられたものであると言えるだろ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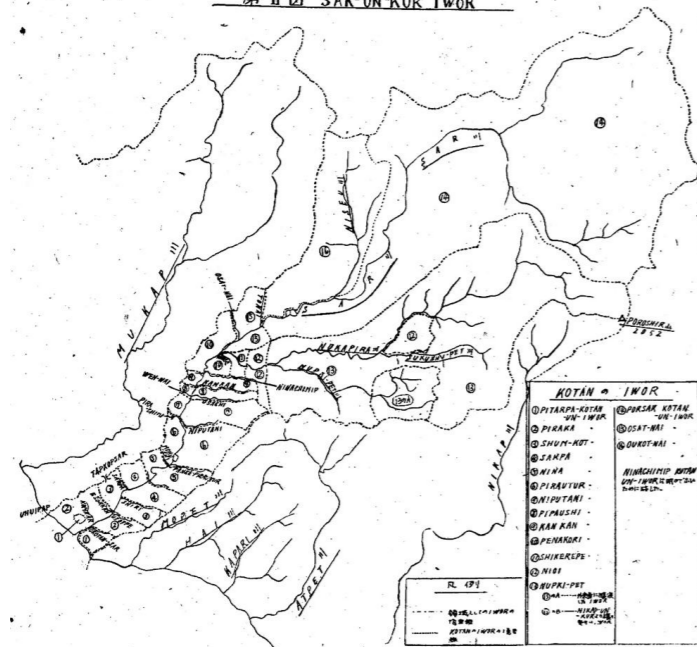
5) 泉靖一,「沙流アイヌの地縁集團におけるIWOR」『民族學研究』16(東京:日本文化人類學會, 1952), 213~229頁。
 6) 例えば2005年7月にアイヌ文化振興等施策推進会議がまとめた「アイヌの伝統的生活空間の再生に関する基本構想」によると、イオルとはアイヌの人々の伝統的な生活の場であるとともに、「この空間においては、①アイヌ文化の伝承に必要な自然素材の確保が一定のルールの下で自由に行うことができるとともに、併せて、②その空間において確保された自然素材を活用した、アイヌの人々の自然観に根差した工芸技術等の文化の伝承活動、自然と共生していたアイヌの人々の知恵を生かした文化の体験あるいは交流等の活動が行われることが考えられる」とされる。
 7) 奥田統己,「アイヌ史研究とアイヌ語:とくに「イオル」をめぐって」北海道・東北史研究会(編)『札幌シンポジウム「北からの日本史」場所請負制とアイヌ:近世蝦夷地史の構築をめざして』(北海道出版企画センター 1998), 236~261頁。

第 I 図 IWOR 概念図



<図 3> イオルの概念図(泉1952)

第 II 図 SAR-UN-KUR IWOR



<図 4> 沙流川流域のイオルの分布図(泉1952)

4. 泉靖一と日本の人類学黎明期のポストコロニアル的状况

先に指摘したように、泉靖一による濟州島の調査とアイヌ民族調査の間には、マジョリティに属する人類学者がマイノリティを調査対象にするという共通点が存在する。その上で、泉靖一がそれぞれ提示した「碾磨集団」と「イオル」のモデルにも、現地の人々のイーミックな論理ではなく外部の人類学者のエティックな論理であるという共通点がみとめられる。ここに人類学者としての泉靖一の、ポストコロニアル的状况における苦悩をみとめることができる。すなわち人類学者にとって、ある社会を分析するには現地の人々の立場やものの見方を自分のものとする当事者性を持つことを理想とする⁸⁾一方で、決して当事者そのものにはなれないというアンビバレントな状况が存在する。泉靖一のこのふたつの調査は、それが顕在化した事例であった。

そのことを端的に示すエピソードが、アイヌ民族調査が終わりに差し掛かる1953年に起こった。アイヌの老女の一人が泉靖一を詰問したのである。彼女は「自分たちのみじめな姿を調査して、お前たちはそれを金儲けの材料に使う気か」と叫んだ。後に泉靖一は、この出来事によってフィールドワーカーとしての挫折を味わったと述懐している⁹⁾。その後泉靖一は、人間を対象としたフィールドワークから、物言わぬアンデスの遺跡を対象としたフィールドワークに転向するようになるが¹⁰⁾、その背景には「人類学者/現地住民」「マジョリティ/マイノリティ」「エティック/イーミック」という二項対立の苦悩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

この苦悩は決して泉靖一個人だけの問題ではなく、日本の人類学黎明期のポストコロニアル的状况ときわめて密接に関連している。戦前の日本の人類学者は、大日本帝国の版図にあった朝鮮半島や台湾、南洋群島(ミクロネシア)、さらにはその周辺の満州や中国北東部を主要なフィールドとしていた。これはまさにクロード・レヴィ=ストロースが言うように「植民

- 8) 泉自身、「(前略)彼らには彼らの論理や思考の体系があって、それが私たちの論理や思考とかけはなれたものはないことがはっきりしてきた。彼らの立場にたてば、彼らを理解することは容易なのである」と語っている(泉靖一、「泉靖一著作集第7巻」(読売新聞社, 1972), 210頁)。
- 9) 泉靖一、「フィールドワークの記録：文化人類学の実践」(講談社現代新書, 1969), 4~5頁。
- 10) ただし国立民族学博物館所蔵の泉靖一アーカイブにおけるフィールドノートを参照すると、このエピソードが起こったのは1953年8月の十勝調査の時のことであり、この後も泉はアイヌ調査を続けているので、これだけが原因で泉がアイヌ調査をあきらめたとするのは誤りであることがすでに指摘されている(木名瀬高嗣、「アイヌ民族総合調査」と戦後日本の文化人類学：泉靖一の「挫折」をめぐる覚え書き」『神奈川大学国際常民文化研究機構年報』5(神奈川大学, 2013), 119~132頁)。

地主主義の産物」としての人類学であった¹¹⁾。敗戦によって日本の人類学者はこうしたフィールドからの撤退を余儀なくされ、彼らは新しいフィールドを求めるとともに、これまでの人類学に内在していたコロニアリズムの論理を反省的に乗り越え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た。人類学者・泉靖一の人生は、まさにこうしたポストコロニアル的状况のショーケースのひとつと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11) Levi-Strauss, C., The Scope of Anthropology(London: Jonathan Cape Ltd., 1967).

인류학자 이즈미 세이치와 제주도

- 포스트 콜로니얼적 비판 -

이시무라 도모(동경문화재연구소)

1. 시작하며

이즈미 세이치(1915~1970)는 일본의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류학자이다. 그의 업적으로는 이시다 에이치로와 함께 일본 최초의 문화인류학 강의를 도쿄대학에 설립한 것이나 1958년부터 시작한 안데스 지역에서의 조사를 통해 잉카 문명 이전의 코토슈(Kotosh) 유적을 발견한 것 등이 있다.¹⁾ 그러나 그의 학문 인생 전반기에서 특히 중요한 조사는 제주도 조사와 아이누 민족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자는 일본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제주도, 후자는 전후 국민국가로 탈바꿈한 일본에 사는 선주민으로서의 아이누 민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메이저리티에 속한 인류학자가 마이너리티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포스트 콜로니얼적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즈미 세이치가 실시한 제주도 조사와 아이누 민족 조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러한 체험이 이즈미 세이치의 후반기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함과 동시에, 전쟁을 거치며 탄생한 일본 인류학의 여명기에서 보이는 포스트 콜로니얼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2.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 조사(1936~1937)

이즈미 세이치는 1915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나, 12세가 된 1927년에 아버지 이즈미 아키라가

1) 이즈미 세이치의 생애에 대해서는 후지모토 히데오, 『이즈미 세이치전: 안데스에서 제주도로』(헤이본샤, 1994)에 상세히 나와 있다.

경성제국대학에 부임하게 되면서 경성(현재의 서울)으로 이주했다. 1933년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등산 활동에 열중하며 조선의 수많은 산을 등반했다. 그러던 중 1935년 겨울 제주도 한라산을 오르다가 조난을 당해 친구 한 명을 잃고 마는데, 이때 이즈미는 지역의 무당을 만나 인류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곧 조선의 샤머니즘을 연구하던 아카마쓰 지조와 아키바 다카시가 있는 경성제국대학 종교학 사회학 연구실의 문을 두드렸다. 아키바는 이즈미에게 말리노브스키의 『서태평양의 항해자들』²⁾을 건네며 인류학으로의 길을 제시했고, 1936년부터 이즈미는 아키바 밑에서 연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36년부터 1937년까지 제주도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졸업논문 「제주도-그 사회인류학적 연구-」로 정리했다. 이 논문은 당시 제주도 사회의 전체상을 포괄적으로 기록한 본격적인 민족지로서 후일 단행본 『제주도』(1966년)에 소장되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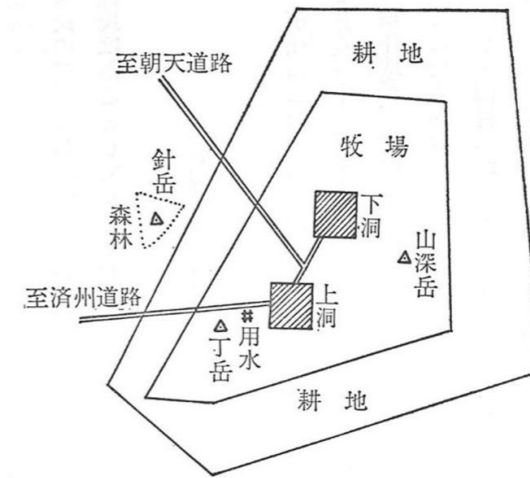
이 논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4장 '초가족집단 연구'에서 공동체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로 '연자매 집단'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자매란 사람이나 말의 힘으로 돌리는 멧돌의 일종으로 보통 마을 내 작은 초가족 안에 설치되어 있다. 한 마을에는 여러 개의 연자매간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이즈미 세이치가 현지 조사한 교래리에는 7개의 연자매간이 있었고 각 연자매는 여러 가족, 많게는 20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했다. 이즈미는 이 연자매를 공유하는 가족들을 하나의 집단 단위로 보아 마을 공동체가 여러 개의 연자매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 현지 언어(방언)에는 이 연자매 집단을 지칭하는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다.⁴⁾ 즉 연자매 집단은 이즈미 세이치가 분석을 위해 만들어 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연자매 집단은 현지인들의 내재적(에믹) 논리가 아닌, 인류학자 이즈미 세이치가 이론적으로 만들어 낸 외재적(에틱) 논리인 것이다. 이는 말리노브스키가 트로브리안드 군도의 쿨라 교역을 관찰하여 두 종류의 재화가 원형의 네트워크를 따라 각각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 회전하며 교환된다는 '쿨라 링' 모델을 발견한 것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이즈미의 분석법은 아키바 다카시를 통해 알게 된 말리노브스키의 분석 기법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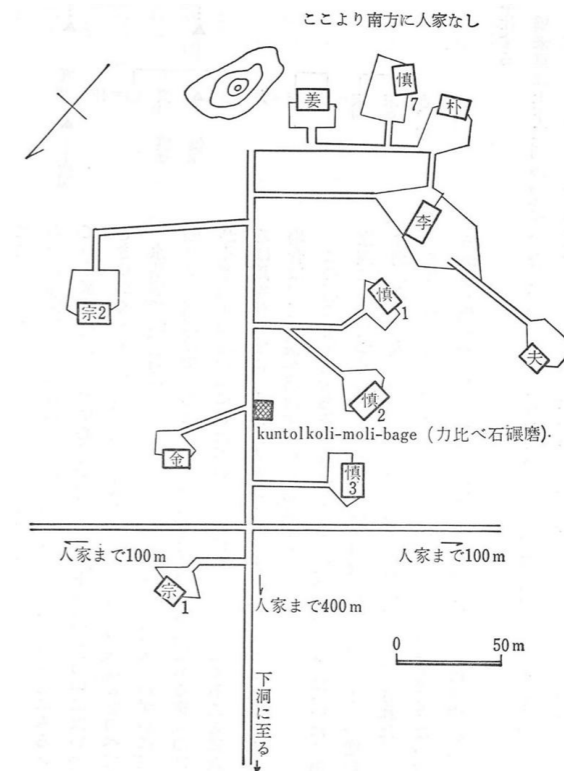
2) Malinowski, B.,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An Account of Native Enterprise and Adventure in the Archipelagoes of Melanesian New Guinea(London: Routledge, 1922).

3) 이즈미 세이치, 『제주도』(도쿄대학출판회, 1966).

4) 이 점은 이즈미도 알아차리고 언급한다(이즈미 세이치, 앞의 책(『제주도』, 1966), 162쪽.).



<그림 1> 교래리의 지리적 위치(이즈미 1966)



<그림 2> 교래리의 연자매 사용자 분포도(이즈미 1966)

3. 이즈미 세이치의 아이누 민족 조사(1951~1953)

일본의 패전과 함께 내지로 돌아온 이즈미 세이치는 1951년부터 3년에 걸쳐 실시된 '아이누 민족 종합 조사'에 멤버 중 한 명으로 참가했다. 이 조사는 여러 학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서 이즈미 세이치는 리더 역할을 맡았다.

이 조사에서 이즈미 세이치는 아이누 민족의 공동체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로 '이오르(Iwor)'를 조정했다.⁵⁾ 이오르란 동일한 하천 유역에 사는 사람들이 점유하는 영역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하천 유역 사람들의 무단 침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이오르 모델은 이후 아이누 민족 관련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쳐서 현재도 아이누 문화에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장이자, 아이누의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통적 생활 공간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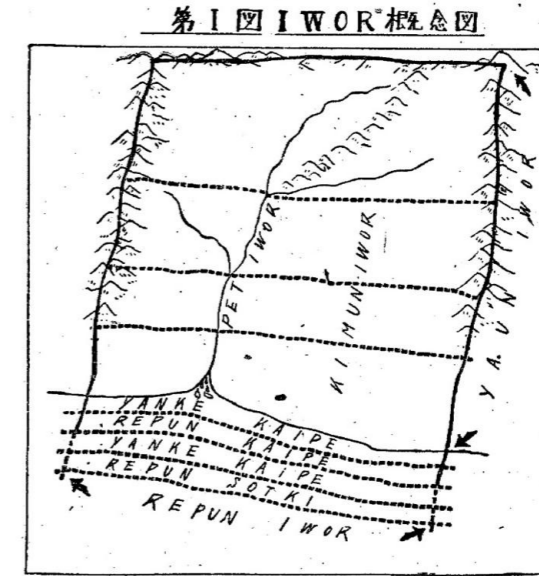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이오르의 본래 뜻은 사냥터로서 아이누어로 하천 유역의 전체 영역을 나타내는 의미로는 사용된 용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⁷⁾ 즉 이오르 역시 아이누 민족의 에믹 논리가 아닌, 이즈미 세이치가 이론적으로 조정한 에틱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즈미가 아이누 민족 조사에서 사용한 분석법은 최초의 필드워크였던 제주도 조사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즉 필드워크를 통해 다른 문화를 기술함과 동시에, 그 사회구조를 모델로 이론화하여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는 말리노브스키를 비롯한 영국의 사회인류학자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접근법으로, 문화상대주의를 주장하고 이론화에 비판적인 미국 문화인류학자들의 접근법과는 다르다. 이러한 이즈미의 인류학 연구는 제주도 조사를 통해 그 방향성이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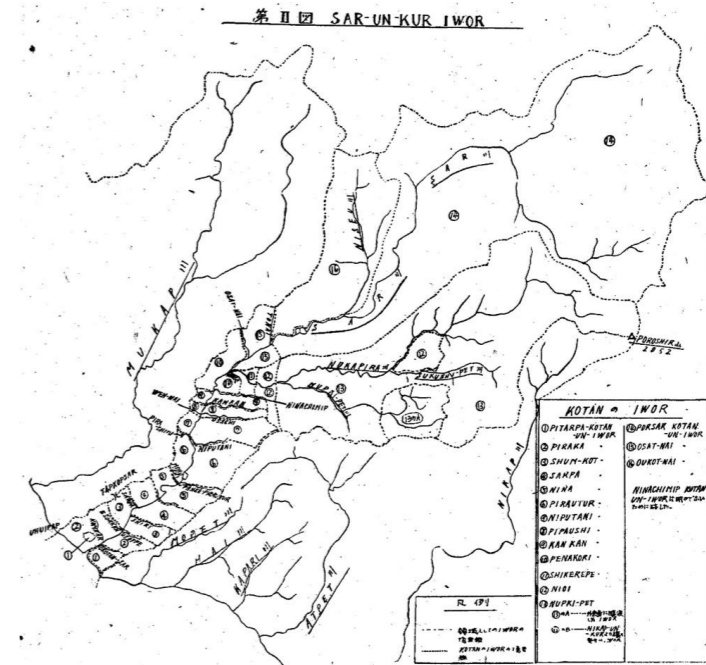
5) 이즈미 세이치, 「사루 아이누 지연집단의 IWOR」, 『민속학연구』 16(도쿄: 일본문화인류학회, 1952), 213~229쪽.

6) 예를 들어 2005년 7월에 아이누 문화 진흥 등 시책추진회의가 정리한 「아이누의 전통적 생활 공간 재생에 관한 기본 구상」에 따르면, 이오르란 아이누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활의 장임과 동시에 '이 공간에서는 ① 아이누 문화의 전승에 필요한 자연 소재의 확보가 일정한 규칙 하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울러 ② 그 공간에서 확보된 자연 소재를 활용하는 아이누 사람들의 자연관에 뿌리를 둔 공예 기술 등 문화 전승 활동, 자연과 공생하던 아이누 사람들의 지혜를 살린 문화 체험 혹은 교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7) 오쿠다 오사미, 「아이누사 연구와 아이누어: 특히 '이오르'를 둘러싸고」, 홋카이도 도호쿠사 연구회(편), 『삿포로 심포지엄 '북쪽부터의 일본사' 장소청부제와 아이누: 근세 에조치사의 구축을 지향하여』(홋카이도출판기획센터, 1998), 236~261쪽.



<그림 3> 이오르 개념도(이즈미 1952)



<그림 4> 사루가와 강 유역의 이오르 분포도(이즈미 1952)

4. 이즈미 세이치와 일본 인류학 여명기의 포스트 콜로니얼적 상황

앞서 지적했듯이 이즈미 세이치가 실시한 제주도 조사와 아이누 조사에는 메이저리티에 속하는 인류학자가 마이너리티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즈미 세이치가 각각 제시한 ‘연자매 집단’과 ‘이오르’ 모텔에도 현지 주민들의 에믹 논리가 아닌, 외부 인류학자의 에틱 논리가 적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인류학자 이즈미 세이치의 포스트 콜로니얼적 상황에 대한 고뇌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인류학자가 한 사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의 입장이나 견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당사자성의 획득이 가장 이상적⁸⁾이지만, 한편으로는 결코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상반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즈미 세이치의 두 조사는 이러한 상황이 표면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일화가 있다. 아이누 민족 조사가 끝나가던 1953년, 아이누 민족의 노파 한 명이 이즈미 세이치에게 ‘너희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조사하고 그것을 돈벌이용으로 이용할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후에 이즈미 세이치는 이 사건으로 현장을 연구하는 필드워커로서의 좌절감을 맛봤다고 술회했다.⁹⁾ 그 후 이즈미 세이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필드워크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안데스 유적 대상의 필드워크로 전향하게 된다.¹⁰⁾ 이 전향의 배경에는 ‘인류학자/현지 주민’, ‘메이저리티/마이너리티’, ‘에틱/에믹’이라는 이항 대립에 대한 고뇌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고뇌는 결코 이즈미 세이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인류학 여명기의 포스트 콜로니얼적 상황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쟁 전 일본의 인류학자들은 일본제국의 관도 안에 있었던 한반도와 대만, 남양 군도(미크로네시아), 그리고 그 주변의 만주와 중국 북동부를 주요 필드로 삼았다. 이는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식민지주의의 산물’

그 자체로서의 인류학이었다.¹¹⁾ 일본이 패전하면서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필드에서 철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필드를 추구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인류학에 내재되어 있던 콜로니얼리즘의 논리를 반성적으로 극복해 나가야만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인류학자 이즈미 세이치의 인생은 포스트 콜로니얼적 상황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이즈미 스스로도 ‘(전략)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논리나 사고체계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논리나 사고와 멀리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들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면 그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이즈미 세이치, 『이즈미 세이치 저작집 제7권』(요미우리신문사, 1972), 210쪽).

9) 이즈미 세이치, 『필드워크의 기록: 문화인류학의 실천』(고단샤 현대신서, 1969).

10) 다만 국립민족학박물관이 소장한 이즈미 세이치 아카이브의 필드 노트를 보면 이 에피소드가 발생한 것은 1953년 8월 도카치 조사 때의 일로, 이후에도 이즈미는 계속해서 아이누 조사를 이어 나갔기 때문에 이 일만이 원인이 되어 이즈미가 아이누 조사를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이미 존재한다(기나세 다카시, 『아이누 민족 종합 조사와 전후 일본의 문화인류학: 이즈미 세이치의 ‘좌절’을 둘러싼 비망록』, 『가나가와대학 국제서민문화연구기구 연보』 5(가나가와대학, 2013), 119~132쪽).

11) Levi-Strauss, C., The Scope of Anthropology(London: Jonathan Cape Ltd., 1967).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발효 후 한일 무형유산보호 노력

- 공동체 종목 및 등록무형(민속)문화재 제도를 중심으로 -

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発効後の韓日の無形遺産保護に向けた取り組み
- 共同体種目及び登録無形(民俗)文化財制度を中心に -

최숙경(崔淑慶)
국립무형유산원(國立無形遺産院)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발효 후 한일 무형유산보호 노력

- 공동체 종목 및 등록무형(민속)문화재 제도를 중심으로 -

최속경(국립무형유산원)

1. 들어가면서

- 한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무형유산 보호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기능과 예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채택되면서 무형유산의 범주가 확장되었다.
 - 무형유산의 전달 수단인 언어를 포함한 구전전통 및 표현물
 - 공연예술
 - 사회적 관습, 의례, 축제 행사
 -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 전통공예기술
- 이에 따라 각국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고 한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무형유산의 개념을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협약에서 정의한 무형유산의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20년에 걸쳐 꾸준히 변화되어 왔다.
 - 일본의 경우에는 지정 순서에 따른 개별종목 단독 등재(2008~2012년), 비지정 종목 '와쇼쿠'의 등재(2013년), 심사 제한에 따른 유사종목 통합(2014~2022년), 생활문화 범주에 포함된 '전통적 술빚기' 등재 신청(2024년 예정)을 했다.¹⁾

1) 박원모, 「유네스코 2003 협약 체제하의 일본의 무형문화유산 국제적 보호 이행을 위한 방안과 대응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중심으로-」, 『무형유산』 12(국립무형유산원, 2022).

- 최근 한국에서는 2016년 시행하게 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에서 공동체 종목에 대한 내용을 개정(2022년)하였다. 일본에서는 2021년 무형문화재 및 무형민속문화재에 대한 등록제도의 신설이 있었다.

- 일본의 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하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에서 등록된 종목을 보고 한국의 공동체 종목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한·일 무형유산 연구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11월 24일(목)~12월 12일(월), 18박 19일간 일본의 등록무형문화재 및 등록무형민속문화재의 사례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 한국의 무형유산보호 사례

- 한국의 경우에는 2015년 「무형유산법」을 제정하고 2016년 시행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몇 가지 조직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 먼저 기존에 무형유산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이 확대되었다.
 - 무형유산 관련 연구업무를 담당하던 국립문화재연구소(현 국립문화재연구원)의 무형문화재연구실은 국립무형유산원(2014. 10. 1. 개원)과 통합 운영된다.
 - 무형유산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에 국제 교류과에서 담당하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관련 업무는 세계유산팀(2015. 12. 30./ 현 세계유산정책과)이 신설되면서 이곳에서 담당하게 된다.
- 한국 내 국내법상 무형유산의 범주가 넓어지게 되었다. 기존에 기예능이 중심이었다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맞춰 무형유산을 7개로 세분화하여 이에 따라 여러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 언어표현, 구비전승,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 절기풍속,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 한편, 2015년 「무형유산법」이 제정되고 2016년부터 전통지식, 전통적 생활관습 등의 분야에 대한 무형유산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2년까지의 지정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연번	종목명	지정일	지정범주
1	아리랑	2015-09-22	전통공연·예술
2	제다	2016-07-14	전통생활관습
3	김치 담그기	2017-11-15	
4	온돌문화	2018-04-30	
5	장 담그기	2018-12-27	
6	막걸리 빚기	2021-06-15	
7	떡 만들기	2021-11-01	
8	한복생활	2022-07-20	
9	씨름	2017-01-04	
10	활쏘기	2020-07-30	
11	웃놀이	2022-11-11	
12	해녀	2017-05-01	전통지식
13	제업	2018-04-30	
14	전통어로방식·어살	2019-04-03	
15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2020-12-01	
16	갯벌어로	2021-12-20	
계	16건		

- 2015년 아리랑 지정 당시에는 <특정한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만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라고 했다. 이후 종목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공동체 종목(주체로는 전승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 2022년 「무형유산법」이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공동체 종목에 대한 것이다. 전승 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종목 지정 무형유산의 보호·육성을 활성화하고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조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 2023년 현재는 공동체 종목에 대한 조사·연구, 보호·육성 활성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의 지정 목록을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전통생활관습,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분야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일본의 무형유산보호 사례

-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사례처럼 본격적인 법률의 제정이나 관련 기관의 설립과 같은 상황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기존 일본의 무형문화재 제도를 기본으로 현실적인 상황(코로나 19사태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었다.²⁾
- 2013년 「와쇼쿠(일식)」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부터 시작된 식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생활문화를 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고조되는 가운데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무형문화재 계승에 대한 위기상황을 감안해 무형문화재 등록제도를 창설하여 폭넓고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했다. 그 배경으로 거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형문화재 등록제도 도입
 - (1) 1996년 경제개발 등에 의한 철거위기부터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교훈을 바탕으로 건조물에 대해 신설
 - ※ 붕괴 당시 비지정이었기 때문에 복구가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음.
 - (2) 2004년 멸실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미술공예품이나 기념물로 대상 확대
 - 무형문화재 보호 기운 고조
 - (1) 최근의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계승에 관한 위기의식 고조
 - (2) 2001년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정으로 생활 문화의 보급
 - (3) 200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보호 조약 발효
 - (4) 2017년 문화예술진흥기본법 개정에 따른 식문화 명기
 - ※ 식문화, 서예 등 생활문화도 포함해 보호하기 위한 기운 고조

2) 일본의 무형유산보호 사례는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 등재 자료 및 현장조사 기간에 실시한 인터뷰 자료 등을 참조했다.

-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축적

- (1) 축제나 민속예능 등 무형의 민속문화재에 대해 전국적인 종합조사 실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축적
- (2) 생활문화에 대해서도 그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실시
 - ※ 2017년 문화청 체제 강화 관련 지역문화창생본부(교토) 설치, 2020년 식문화담당 참사관 설치

- 2021년 일본 정부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결정한다. 개정안은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의 등록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한다. 2021년 6월 14일 「문부과학성고시」에 따르면, 기존 지정제도 보다 기준을 완화한 등록으로 계승 위기에 처한 마쓰리나 향토요리 등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무형문화재의 등록

- 무형문화재의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요무형문화재 이외의 무형문화재(단, 문화재보호법 제18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을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중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문화재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할 때는 해당 등록을 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해야 한다.

- 무형문화재의 등록은 예능, 공예기술, 생활문화 3개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고, 분야별 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예능관계 :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예능(단, 중요무형문화재 및 문화재보호법 제18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을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 (1) 예술상의 가치가 높은 것
- (2) 예능 사상의 의의가 있는 것
- (3) 예능의 성립 또는 변천 과정을 나타내는 것

- 공예기술관계 :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도예, 염직, 칠예, 금속공예 및 기타 공예기술(단, 중요무형문화재 및 문화재보호법 제18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을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 (1) 예술상의 가치가 높은 것
- (2) 공예 사상의 의의가 있는 것
- (3) 공예기술의 성립 또는 변천 과정을 나타내는 것

- 생활문화관계 :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생활문화(문화예술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생활문화) 중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말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단, 문화재보호법 제18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을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 (1) 예술상의 가치가 높은 것
- (2) 생활문화와 관련된 역사상의 의의가 있는 것
- (3) 생활문화의 성립 또는 변천 과정을 나타내는 것

- 등록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예능관계 :

(보유자) 등록무형문화재로 등록되는 예능을 체득하고 이에 정통한 자
(보유단체) 예능을 체득하고 이에 정통한 자가 주된 구성원으로 있는 단체

- 공예관계 :

(보유자) 등록무형문화재로 등록되는 공예기술을 체득하고 이에 정통한 자
(보유단체) 공예기술을 체득하고 이에 정통한 자가 주된 구성원으로 있는 단체

- 생활문화관계 :

(보유자) 등록무형문화재로 등록되는 생활문화를 체득하고 이에 정통한 자
(보유단체) 생활문화를 체득하고 이에 정통한 자가 주된 구성원으로 있는 단체

- 무형문화재의 등록 후 국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보존과 공개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 등록무형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직접 기록의 작성, 전승자의 양성 및 그 밖에 그 보존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국가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지방공공단체 및 그 밖에 그 보존에 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보존과 공개를 위한 지도와 조언

· 등록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에게 등록무형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 보존활용계획 인정

· 등록무형문화재 대상 사업으로는 전승자 양성, 보급·계발 사업, 조사·기록 작성이 있다.

2) 무형민속문화재의 등록

- 무형민속문화재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이외의 무형민속문화재(단, 문화재보호법 제18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을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중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문화재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있다.
 - 보존 및 활용 조치가 특히 필요한 풍속관습, 민속예능 또는 민속기술(단, 중요무형민속문화재 및 문화재보호법 제18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을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 (1) 기반적인 생활문화의 특색을 지닌 것
 - (2) 발생 또는 성립 또는 변천 과정을 나타내는 것
 - (3)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 (4) 시대의 특징을 잘 전하고 있는 것
- 등록무형민속문화재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은 없다.
- 등록 후 국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보존과 공개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 등록무형민속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무형민속문화재에 대하여 직접 기록의 작성, 그 밖에 그 보존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방공공단체 및 그 밖에 그 보존에 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보존과 공개를 위한 지도와 조언
 - 등록무형민속문화재의 기록의 소유자에게 그 기록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지방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 보존활용계획 인정
 - 등록무형민속문화재 대상 사업으로는 전승사업, 활용사업이 있다.

3) 등록무형문화재 사례

- 2022년까지 등록무형문화재는 서도(書道), 전통적 술빚기, 교토요리(京料理), 과명(菓銘)을 가진 생과자(生菓子) 4건이다.

가. 「서도(書道)」

- 모필을 이용하여 언어를 표기하는 표현 행위이며 한자, 가나, 한자 가나(假名) 혼합에 의한 표현 외에 전각(篆刻)도 포함된다. 시대에 따라 습자의 실천과 목습(目習)이라고도 불리는 뛰어난 작품의 감상 축적에 의해 널리 생활 속에 수용되어 침투해 왔다.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는 전통적인 서법이 서민층에까지 수용되었다. 이로 인해 현대의 뛰어난 서의 표현에서도 전통적으로 길러져 온 미의식을 엿볼 수 있다. 서도는 생활문화와 관련된 역사상 의의가 있는 동시에 예술상 가치가 높다.

- 「서도(書道)」의 등록요건은 아래 3가지이다.

- (1) 문방사보(붓, 먹, 베틀, 종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
- (2) 전통적인 서법에 따를 것
- (3) 다음 분류에 따른 서(書)의 표현을 할 것

※ 한자 서/ 가나 서/ 한자 가나 혼합 서/ 전각

- 「서도(書道)」의 보유단체는 일본서도문화협회(회장: 이시게 마사키치)이며, 서도의 전통적인 서법을 미래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서예 기술의 보존과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통적 서법 기술을 계승하고 계승자를 가진 서도가를 정회원으로 하여 2021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전통적인 서법 보존에 관한 것, 서도 문화 진흥을 위한 전람회, 강습회, 연구회 개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평가하며 활동하고 있다.

나. 「전통적 술빚기」

- 근대 과학이 성립 보급되기 전부터 제조자의 경험 축적에 의해 쌓아 온 수작업 기술을 가리킨다. 술은 『고사기(古事記)』 등에 등장하며³⁾ 예로부터 일본에 뿌리내려 온 식문화의 하나이다. 메이지 시대 이후 술 생산은 기계화 및 대규모화가 진행되어 왔지만, 전통적 주조에 의한 생산은 오늘날 까지 이어져 일본주, 소주, 아와모리 및 미립 등의 술 제조에 활용되어 왔다. 기술의 중심은 병행복발효⁴⁾라고 불리는 발효법을 고도로 조정함으로써 목적하는 주질을 만들어내는 데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서 원료의 사전 처리, 누룩 만들기 및 모로미(諸味) 관리가 기술의 주요 내용이 된다.

- 「전통적 술빚기」의 등록요건은 아래 3가지이다.

- (1) 원료를 술 제조에 적합한 상태로 사전 처리할 것⁵⁾
- (2) 술빚기에 적합한 입자 상태의 누룩을 만드는 것⁶⁾
- (3) 모로미를 발효시켜 목적하는 주질(酒質)로 만든 것⁷⁾

- 「전통적 술빚기」의 보유단체는 일본의 전통적 누룩균을 이용한 술빚기 기술 보존회(회장: 코니시 신우에몬)이며, 술빚기 기술의 보존, 전승 및 향상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2021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술빚기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는 계발 활동 등에 임하고 있으며, 담당자 양성 및 기술 내용과 희귀한 주조 도구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술빚기 기술의 보존 및 전승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일본 문화청 「전통적 술빚기」 관련 보도자료 재인용.

신화에 등장하는 술로서 스사노오노미코토(須佐之男の命)가 야마타(八咫)의 이무기를 쓰러뜨리기 위해 야시오리(八咫折り)의 술을 만들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3세기 말~4세기 초 오진(応神)천황 때 백제에서 건너온 도래인 스스코리(須々許理)가 술을 빚어 현상했다는 기록이 있다(西宮一民(校注)『古事記』(新潮日本古典集成 27), 新潮社, 1979年).

4) 누룩 효소로 원료인 전분을 당화하면서 효모에 의한 알코올 발효를 병행하는 발효 양식을 말하며, 고농도 알코올 발효에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포도에 포함된 당분이 그대로 발효되는 와인은 단발효, 맥아를 당화하여 맥아즙을 만들어 효모를 첨가해 알코올 발효하는 맥주는 단행복발효라고 불린다.

5) 누룩 원료의 상태를 판별하여 수작업으로 수분 조정할 것. 증강(원료를 찌는 것)을 실시할 것.

6) 누룩 원료는 쌀 또는 보리로 할 것. 누룩균은 전통적인 아스페르길루스속균(일본에서 주조용 누룩 만들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황국균, 흑국균 및 백국균이 해당한다.)을 이용할 것. 나무 뚜껑, 나무 상자 또는 이에 준한 기능을 가진 기구를 이용할 것. 누룩균의 생육 상태를 판별하여 수작업으로 제국(누룩을 만드는 것)을 관리할 것.

7) 발효는 누룩을 이용한 병행복발효에 의한 것. 물 이외의 물품을 첨가하지 않을 것. 모로미 상태를 판별하여 수작업으로 발효 관리할 것.

다. 「교토요리(京料理)」

- 교토에서 발달한 조리, 시즈라이(분위기 연출 등), 접객을 일체화하는 가운데 음식을 통한 “교토스러움. 교토다움”의 표현을 행하는 것, 교토요리의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교토는 헤이안시대 이후 정치 및 문화의 중심지의 한 부분을 점하는 것으로 일본의 식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교토요리는 생활문화에 관계된 역사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예술상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 「교토요리(京料理)」의 등록요건은 아래 5가지이다.

- (1) 음식을 통해서 “교토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손님에 대접하는 것
- (2) 다음의 두 가지 점을 포함하여 “교토스러움”을 표현하는 것
※ 교토의 전통행사, 풍속풍습 및 기후풍토를 반영한 것
※ 교토의 전통적인 미의식에 따른 절도와 품위를 보존하는 것
- (3) 요리, 시즈라이 및 접객을 통괄하고 접대의 연출을 행하는 것
- (4) 전통적인 교토요리의 특질을 보존하는 것
- (5) 요리 및 시즈라이에 담겨진 문화적 의미를 접객을 통해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

- 「교토요리(京料理)」의 전승단체는 교토요리 기술 보존회(회장: 다카하시 에이이치)이며, 교토요리의 기술보호, 계승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22년에 결성되었다. 일반사단법인 교토식문화협회의 회원 중에서 일정의 조건에 바탕한 전문가⁸⁾에게 기술 심사를 받아, 인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2022년 기준 보존회 회원은 112명이다.

라. 「과명(菓銘)을 가진 생과자(生菓子)」

- 에도 시대(17세기 말~18세기 초)의 교토의 “상과자(高級과자)”⁹⁾에 뿌리를 두고 이 시대의 과명을 붙이는 것이 정착된 것을 말한다. 과명은 고전문학에서 쓰여진 지명, 정경에서 따와서 과자에 응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와가”라는 곡에서 유래한 ‘고치(동풍)’나 ‘타츠타(용전)’가 그 일례이다. 이상과 같이 과명을 갖는 생과자는 생활문화와 관계된 역사상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예술상의 가치가 높은 것이다.

8) 꽃꽂이하는 사람들, 다도하는 사람들 등 5명으로 구성된다.

9) 가격이 비싼 수입 백설탕을 사용한 과자

- 「과명(菓銘)을 가진 생과자(生菓子)」의 등록요건은 아래 4가지이다.

- (1) 팔소 만들기에 최적한 콩 종류를 삶은 후에 껍질을 벗겨서 팔소의 입자를 꺼내, 당류를 첨가한 후에 가열하여 반죽해서 코시앙(팔소)을 제조한다.
- (2) 코시앙을 사용하여 생과자 만들기에 적합한 가공앙을 제조한다. 제조는 다음의 둘 중에 하나로 한다.
 - ※ 네리키리: 코시앙에 참마 또는 규비를 첨가한 것을 가열하여 반죽한 것
 - ※ 코나시: 코시앙에 밀가루/쌀가루 또는 양쪽을 첨가한 것을 찐 후에 반죽한 것
- (3) 가공한 앙을 사용하여 계절의 풍물이나 습속(풍습)을 손기술에 의해 표현한 것
- (4) 과명은 전통적인 이름붙인 것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과명(菓銘)을 가진 생과자(生菓子)」의 전승단체는 우수 일본과자 협회(회장: 호소다 오사무)이며, 2007년에 개시된 “선·일본과자직”에 합격한 사람들로 2017년에 결성되었다. 합격률은 약 15% (2022년 7월 기준)이며, 회원수는 98명이다. 생과자의 보급개발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 업계를 깊어질 인계 양성과 기술의 기록, 보존을 향한 활동도 예정하고 있다.

4) 등록무형민속문화재 사례

- 2022년까지 등록된 무형민속문화재는 사누끼의 간장 양조 기술, 토사부시 제조 기술 2건이다.

가. 「사누끼의 간장 양조 기술」

- 간장은 서민생활의 보급, 소비량이 확대됨과 동시에 근대 이후 기계화와 공장에서의 대규모 생산이 진행되어, 산지에서도 수공업적인 성격이 후퇴하고, 전통적인 양조기술이 사라져가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누끼 지역에서는 “무시로코우지”라고 부르는 간장 누룩(코우지) 제조가 전승되고 있고, “키오케(오크통)”를 이용한 천연양조를 계속해 오고 있는 양조장도 많이 볼 수 있는 등 일본의 간장 양조 기술 변천과 지역차를 이해하는데 주목될만하다.
- 사누끼의 간장 양조 기술은 일본 유수의 간장 산지인 사누끼 지방에 전승되어 온 간장만들기 기술이다. 사누끼의 간장 양조는 세토나이의 온난한 기후와 해양운송이 편리한 입지조건을 배경으로 히케타(히가시 카가와시), 쇼도시마(쇼도시마쵸, 토노쇼쵸) 등의 지역에서 근세이래, 활발하게 행해져 왔다.
- 간장 양조는 “1. 누룩, 2. 젖는 것, 3. 불 넣는 것(달이는 것)”이라고 말해지듯이, 누룩 만들기가 중요하고 히케타(히가시 카가와시)에서는 누룩실에서 원료를 균일하게 펼친 거적을 몇 단씩 쌓아올려서 관리와 온도조절을 반복하면서 간장 누룩을 만드는 “무시로코우지”의 기술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또한, 쇼도시마(쇼도시마쵸, 토노쇼쵸)에서는 대형의 키오케를 이용한 천연양조에 의한 간장만들기 전통이 남아

있는데, 최근에는 키오케 제조기술의 전승에도 힘쓰고 있다.

-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다.

나. 「토사부시 제조 기술」

- 토사부시는 고치현에 전승되어 온 “카레부시”라고 불리는 딱딱한 가쓰오부시를 말한다. 일본의 가쓰오부시 제조 역사는 오래 되었고, 아라부시와 하다가부시를 거쳐, 근세 후기에 토사에서 카비즈케에 의한 가쓰오부시가 성립되었다고 한다. 카비즈케는 가쓰오부시의 부패를 막고 오오사카나 에도 등의 원격지에의 유통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비린내를 없애주는 등 품질을 향상시켜 주는 방식인데 이로써 토사부시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토사부시의 제조기술은 그 후 전국각지로 전파되어 기술교류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는데 일본의 해산물 가공기술 변천을 생각할 때 중요하게 여겨진다.

- 토사부시의 제조공정은 “토사기리”라 불리는 호쾌하게 꼬리를 잡고 자르는 것을 시작으로, 자른 상태로 가마에서 삶는 “샤주크”, 작은 뼈를 골라내는 “바라누키”, 혼연실에 넣어 연기로 혼연시켜 수분을 빼는 “바이칸(배건)”, 양질의 곰팡이 균을 가쓰오부시에 뿌려서 붙이는 “카비즈케” 등이 있고, 이 “카비즈케”와 “닛칸”이라 불리는 햇볕에 말리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여 수개월에 걸쳐 완성된다.

※ ‘카비즈케’와 ‘닛칸’의 과정은 총 10회 진행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곰팡이가 4겹 정도 생긴다고 한다. 완성품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6개월이며, 다량어는 원래 크기의 1/6 정도로 줄어든다고 한다.

-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토사시에서 토사부시를 제조하는 곳은 ‘타케우치 상점’ 1곳뿐이다.

4. 나오면서

- 지금까지 한국의 공동체 종목과 일본의 무형문화재 관련 등록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 한국과 일본의 제도는 제도의 필요성에서부터 그 취지나 운용면에서도 상이했으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협약이 발효된 이래 기존의 무형문화재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보다 광범위하게 자국의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자 실시한 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한국의 지정 목록을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전통생활관습,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분야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우주 지식, 절기풍속 등 다양한 분야의 무형문화재를 조사해서 보호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 일본 무형문화재의 등록은 예능, 공예기술, 생활문화 3개 분야에 이루어지지만 현재로서는 예능, 공예기술은 없고 생활문화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로 다양한 사례와 지원 사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그간 일본 무형문화재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생활문화에 대한 보호조치는 고무적으로 여겨진다.
- 일본 등록무형문화재 및 등록무형민속문화재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공동체 종목과 유사성을 느꼈으며, 막걸리 빚기-전통적 술빚기, 장 담그기-사누끼의 간장 양조기술, 떡 만들기-과명(菓銘)을 가진 생과자(生菓子) 등은 관련 자료와 현장조사 자료가 축적된다면 비교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진 1> 부정을 막기 위해 버선과 금줄을 걸어 놓은 모습



<사진 2> 잡귀의 근접을 막기 위해 대추와 고추 등을 넣는 모습



<사진 3> 장 가르기 과정에서 향아리에서 소금물에 불은 메주 꺼내기

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発効後 の韓日の無形遺産保護に向けた取り組み

- 共同体種目及び登録無形(民俗)文化財制度を中心に -

崔淑慶(國立無形遺産院)

1.はじめに

- 韓国と日本は以前から無形遺産保護制度を運用してきた。主に技能と芸能に焦点を当てていたが、2003年にユネスコ人類無形遺産条約が採択され、無形文化遺産の範疇が以下のように拡大された。
 - 無形文化遺産の伝達手段である言語を含む口承伝統および表現物
 - 公演芸術
 - 社会的慣習, 儀礼, 祭行事
 - 自然と宇宙に関する知識と慣習
 - 伝統工芸技術
- これによって各国は無形遺産保護に向けた多様な活動を行うようになり、韓国や日本も例外ではなかった。
 - 韓国の場合は、従来の無形文化財の概念を2003年ユネスコ人類無形遺産条約で定義した無形文化遺産の概念に拡張する作業を進め、これまで20年かけて着実に変えてきた。
 - 日本の場合は、指定順による個別種目の単独登録(2008-2012年)、非指定種目「和食」の登録(2013年)、審査制限による類似種目の統合(2014-2022年)、生活文化に含まれる「伝統的酒造り」の登録申請(2024年予定)を行っている。
- 韓国では、2016年に施行された「無形文化財保全及び振興に関する法律(以下、無形文化財法)」をもとに、2022年に共同体種目の内容を改正した。日本では、2021年に無形

文化財及び無形民俗文化財における登録制度が新設された。

- 日本の無形文化財制度について漠然と理解している中で、最近日本で登録された種目をみて、韓国の共同体種目と似ていると思い、関心を持つようになった。そこで「韓日無形遺産研究交流事業」の一環として、2022年11月24日(木)～12月12日(月)の18泊19日間、日本の登録無形文化財及び登録無形民俗文化財の事例に関する現場調査を行なった。

2. 韓国における無形遺産保護の事例

- 韓国では、2015年「無形文化財法」が制定され、2016年施行された。これと関連していくつかの組織的かつ制度的な面で変化がもたらされた。
- まず、これまで無形遺産業務を担当していた関連機関が拡大された。
 - 無形遺産関連の研究業務を担当していた国立文化財研究所(現、国立文化財研究院)の無形文化財研究室が、国立無形遺産院(2014年10月1日開院)に統合・運営される。
 - 無形遺産関連の行政業務を担当していた文化財庁の無形文化財課は維持され、国際交流課の担当であったユネスコ人類無形遺産の登録関連業務は新設された世界遺産チーム(2015年12月30日/現、世界遺産課)が担当することとなる。
- 韓国の国内法上、無形文化財の範疇が拡大された。技・芸能が中心だった範疇を、ユネスコ人類無形遺産協約に合わせて、無形遺産を7つに細分化し、これに伴い多様な活動を推進することとなった。
 - 音楽、踊り、演劇、総合芸術、その他の伝統的公演・芸術など
 - 工芸、建築、美術、その他の伝統技術など
 - 民間医薬知識、生産知識、自然・宇宙知識、その他の伝統知識など
 - 言語表現、口碑伝承、その他の口伝伝統及び表現など
 - 節気風俗、衣生活、食生活、住生活、その他の伝統的な生活慣習など
 - 民間信仰儀礼、生涯儀礼、宗教儀礼、その他の社会的儀式・儀礼など
 - 伝統的な遊び・祝祭及び技芸・武芸など

- 一方、2015年「無形文化財法」が制定され、2016年から伝統知識、伝統的生活慣習などの分野について無形文化財の指定が可能になった。2022年までの指定リスト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連番	種目名	指定日	指定範疇
1	アリラン	2015-09-22	伝統公演・芸術
2	製茶	2016-07-14	伝統生活慣習
3	キムチ造り	2017-11-15	
4	オンドル文化	2018-04-30	
5	醬造り	2018-12-27	
6	マッコリ造り	2021-06-15	
7	餅作り	2021-11-01	
8	韓服生活	2022-07-20	
9	シルム	2017-01-04	
10	弓射	2020-07-30	
11	ユンノリ	2022-11-11	伝統知識
12	海女	2017-05-01	
13	製塩	2018-04-30	
14	伝統漁撈方式—漁箭	2019-04-03	
15	高麗人参の栽培と薬用文化	2020-12-01	
16	干潟漁撈	2021-12-20	
計		16件	

- 2015年、アリランの指定当時は「特定の保有者や保有団体を認めず、種目のみ指定した国家無形文化財」とした。以後、種目の管理・支援に困難な状況になり、共同体種目(主体としては伝承共同体)の必要性が提起される。
- 2022年に「無形文化財法」が改正されたが、主な内容は共同体種目に関するものである。伝承共同体に対する支援の根拠を設け、種目指定無形文化財の保護・育成を活性化し、人類無形文化遺産の保護及び活動に積極的に参加できる土台づくりのための立法措置である趣旨を明らかにした。

- 2023年現在は、共同体種目の調査・研究、保護・育成の活性化、人類無形文化遺産への登録などに向けて取り組んでいる。上記の指定目録をみると、今までは伝統生活慣習、伝統遊び・武芸、伝統知識の分野に集中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

3. 日本における無形遺産保護の事例

※ 日本の無形遺産保護の事例は、文化庁ホームページに公開された関連資料や現場調査中に実施したインタビュー資料などを参照・引用した。

- 日本の場合には、韓国の事例のように本格的な法律の制定や関連機関の設立などはみられなかった。しかし、これまでの日本の無形文化財制度を基に現実的な状況(コロナ禍など)を考慮した漸進的な変化がみえた。

- 2013年に「和食」のユネスコ人類無形遺産登録から始まった食文化への関心が増すなどにより、生活文化を文化財として登録・管理しようとする動きが高まる中、コロナ禍による無形文化財の継承が危機的な状況に面して、無形文化財の登録制度を設け、幅広く多様な無形文化財を保護しようとした。その背景として取り上げられた内容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 無形文化財の登録制度の導入

- (1) 1996年、経済開発等による撤去危機から阪神・淡路大震災の教訓を踏まえ、建造物について新設

※ 倒壊当時、非指定であったため復旧が困難な事例があった。

- (2) 2004年、滅失の可能性が高い点を考慮して、美術工芸品や記念物へと対象を拡大

- 無形文化財保護への気運の高まり

- (1) 近年の急速な少子高齢化に伴い、継承について危機感が高まる
- (2) 2001年、文化芸術振興基本法の制定による生活文化の普及
- (3) 2006年、ユネスコ人類無形遺産保護条約の発効
- (4) 2017年、文化芸術振興基本法の改正に伴う食文化の明記

※ 食文化、書道など生活文化も含めて保護への気運が高まる

- 無形文化財の調査・研究の蓄積

- (1) 祭や民俗芸能など無形の民俗文化財の全国的な総合調査を実施して保護の対象となる事例を蓄積

- (2) 生活文化についても、その実態を調査・研究

※ 2017年に文化庁地域文化創生本部(京都)を設置、2020年に食文化担当の参事官を配置

- 2021年、日本政府は「文化財保護法」改正案を決定する。改正案は無形文化財及び無形文化財の登録制度の新設を骨子とする。2021年6月14日「文部科学省告示」によると、既存指定制度より基準を緩和した登録制度をもって継承の危機に瀕している祭や郷土料理などを幅広く保護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1) 無形文化財の登録

- 無形文化財の登録基準は次のとおりである。

- 重要無形文化財以外の無形文化財(但し、文化財保護法第182条第2項に規定する指定を地方公共団体がやっているものを除く)のうち、その文化財としての価値に鑑み保存及び活用のための措置が特に必要とされるものを文化財登録原簿に登録することができる。登録をするに当たっては、当該登録をする無形文化財の保持者又は保持団体を認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無形文化財の登録は、芸能・工芸技術・生活文化の3分野で行われており、分野別の登録基準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 芸能関係：保存及び活用のための措置が特に必要な演劇、音楽、舞踊、その他の芸能(但し、重要無形文化財保護法182条第2項に規定する指定を地方公共団体がやっているものを除く)のうち、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である。

- (1) 芸術上の価値の高いもの
- (2) 芸能史上の意義を有するもの
- (3) 芸能の成立又は変遷の過程を示すもの

- 工芸技術関係：保存及び活用のための措置が特に必要な陶芸、染織、漆芸、金工、その他の工芸技術(但し、重要無形文化財及び文化財保護法第182条第2項に規定する指定を地方公共団体がやっているものを除く)のうち、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である。

- (1) 芸術上の価値の高いもの
- (2) 工芸史上の意義を有するもの
- (3) 工芸技術の成立又は変遷の過程を示すもの

- 生活文化関係：保存及び活用のための措置が特に必要な生活文化(文化芸術基本法第12条に規定する生活文化)のうち、無形の文化的所産で、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である(但し、文化財保護法第182条第2項に規定する指定を地方公共団体がやっているものを除く)。

- (1) 芸術上の価値の高いもの
- (2) 生活文化に係る歴史上の意義を有するもの
- (3) 生活文化の成立又は変遷の過程を示すもの

• 登録無形文化財の保持者及び保有団体の認定基準は次のとおりである。

- 芸能関係:

(保持者)登録無形文化財に登録される芸能を体得し、これに精通した者
(保持団体)芸能を体得し、これに精通した者が主たる構成員である団体

- 工芸技術関係:

(保持者)登録無形文化財に登録される工芸技術を体得し、これに精通した者
(保持団体)工芸技術を体得し、これに精通した者が主たる構成員である団体

- 生活文化関係:

(保持者)登録無形文化財に登録される生活文化を体得し、これに精通した者
(保持団体)生活文化を体得し、これに精通した者が主たる構成員である団体

• 無形文化財の登録後の国の役割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 保存と公開に要する経費の補助

・登録無形文化財の保存の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登録無形文化財について自ら記録の作成、伝承者の養成等の保存のため適当な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

し、国は保持者、保持団体又は地方公共団体その他その保存に当たることが適当と認められる者に対し、その保存に要する経費の一部を補助することができる。

- 保存と公開のための指導と助言

・登録無形文化財の保持者等に、登録無形文化財の保存のために必要な指導又は助言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保存活用計画の認定

・登録無形文化財の対象事業としては、伝承者養成、普及・啓発事業、調査・記録作成がある。

2) 無形の民俗文化財の登録

• 無形の民俗文化財の登録基準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重要無形民俗文化財以外の無形民俗文化財(但し、文化財保護法第182条第2項に規定する指定を地方公共団体がやっているものを除く)のうち、その文化財としての価値に鑑み保存及び活用のための措置が特に必要とされるものを文化財登録原簿に登録することができる。

・保存及び活用のための措置が特に必要な風俗慣習、民俗芸能又は民俗技術(但し、文化財保護法第182条第2項に規定する指定を地方公共団体がやっているものを除く)のうち、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である。

- (1) 基盤的な生活文化の特色を有するもの
- (2) 発生若しくは成立又は変遷過程を示すもの
- (3) 地域的特色を示すもの
- (4) 時代の特徴をよく伝えていること

• 登録無形民俗文化財は保持者及び保持団体は認めない。

• 登録無形民俗文化財の登録後の国の役割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 保存と公開に要する経費の補助

・登録無形民俗文化財の保存の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登録無形民俗文化財について自ら記録の作成その他その保存のため適当な措置を執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国は、地方公共団体その他その保存に当たることが適当と認められる者に対し、その保存に要する経費の一部を補助することができる。

- 保存と公開のための指導と助言

- ・登録無形民俗文化財の記録の所有者に対し、その記録の公開に関して必要な指導又は助言をすることができる。保存地方公共団体等に対し、その保存のため必要な指導又は助言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保存活用計画の認定

- ・登録無形民俗文化財の対象事業としては伝承事業、活用事業がある。

3) 登録無形文化財の事例

- ・2022年までに登録無形文化財は書道、伝統的酒造り、京料理、菓名をもつ生菓子(練切・こなし)の4件である。

イ. 書道

- 書道は毛筆を用いて言語を表記する表現行為であり、漢字、仮名、漢字仮名交じりによる表現のほか、篆刻も含まれる。時代が下るにつれて手習いの実践と目習いとも呼ばれる鑑賞の蓄積により、広く生活の中に受容され、浸透してきた。江戸時代になると伝統的な書法が庶民層にまで受容されるようになった。このため、現代における優れた書の表現にも伝統的に育まれてきた美意識をみてとることができる。書道は生活文化に係る歴史上の意義を有するとともに、芸術上の価値も高いものである。

- 書道の登録要件は下記の3つである。

- (1) 文房四宝(筆, 墨, 硯, 紙)の使用を原則とすること
- (2) 伝統的な書法によること
- (3) 次の分類に応じた書表現を行うこと

※ 漢字の書/ 仮名の書/ 漢字仮名交じりの書/ 篆刻

- 書道の保持団体は日本書道文化協会(会長; 井茂雅吉)で、書道の伝統的な書法を未来へと継承していくために、書道のわざの保存と向上を図る目的で、伝統的な書法の技を受け継ぎ、継承者をもつ書家を正会員として2021年に設立された団体である。伝統的な書法の保存に関すること、書道文化振興のための展覧会、講習会、研究会の開催事業等を目的として評価し活動している。

ロ. 伝統的酒造り

- 伝統的酒造りは近代科学が成立・普及する以前から造り手の経験の蓄積によって築き上げられてきた手作業のわざを指す。酒は『古事記』などに登場し、古くから日本に根差してきた食文化の一つである。明治以降、酒の生産では機械化及び大規模化が進行してきたものの、伝統的な酒造りによる生産は今日まで受け継がれており、日本酒、焼酎、泡盛及びみりん等の酒造りに活かされてきた。わざの中心は、並行複発酵と呼ばれる発酵法を高度に調整することで目的とする酒質を作り出すことにあり、その実現のために原料の前処理、こうじ造り、及びもろみ管理がわざの主要な内容となる。

- 伝統的酒造りの登録要件は下記の3つである。

- (1) 原料を酒造りに適した状態に前処理すること
- (2) 酒造りに適したバラこうじをつくること
- (3) もろみを発酵させ、目的の酒質にすること

- 伝統的酒造りの保持団体は、日本の伝統的なこうじ菌を使った酒造り技術の保存会(会長; 小西新右衛門)で、酒造りのわざの保存、伝承及び向上等を図る目的として2021年に設立された団体である。酒造りの認知度向上を図る啓発活動等に取り組んでおり、担い手の養成及びわざの内容や希少な酒造道具等の記録・保存に向けた活動を展開することで、酒造りのわざの保存及び伝承等を目指している。

ハ. 京料理

- 京料理は京都で育まれてきた調理、しつらい、接遇を一体化する中で、食を通じた「京都らしさ」の表現をおこなう、京料理のわざを包括する概念である。京都は平安時代以降、政治及び文化の中心地の一角を占めることで、日本の食文化の発展に大きく寄与してきた。これと関連して京料理は生活文化に係る歴史上の意義を有するとともに、芸術上の価値の高いものと評価された。

- 京料理の登録要件は下記の5つである。

- (1) 食を通じて「京都らしさ」を表現することで、客をもてなすこと
- (2) 次の2点を踏まえて「京都らしさ」を表現すること
 - ※ 京都の伝統行事、風俗慣習及び気候風土を反映させること
 - ※ 京都の伝統的な美意識に沿った節度と品位を保持すること

(3) 料理、しつらい及び接遇を統括し、もてなしの演出をおこなうこと

(4) 伝統的な京料理の特質を保持すること

(5) 料理及びしつらいに込めた文化的意味を接遇を通じて客に提供すること

- 京料理の保持団体は、京料理技術保存会(会長：高橋英一)で、京料理のわざの保護・継承を図ることを目的として、2022年に結成された。一般社団法人京都食文化協会の会員の中から、一定の条件に基づいた有識者によるわざの審査を受け、認定された者によって構成されている。現在、保存会の会員は112人である。

二. 菓名をもつ生菓子(練切・こなし)

- 菓名をもつ生菓子(練切・こなし)は、江戸時代(元禄期)の京都における「上菓子(高級な輸入白砂糖を用いた菓子)」にルーツをもち、この時代に菓名を付すことが定着した。菓名は、古典文学で取り上げられた地名・情景を他のものになぞらえて表現する遊びが、菓子に取り入れられたものである。たとえば、和歌に由来する「東風」や「龍田」がその一例である。以上のように、菓名もつ生菓子(練切・こなし)は、生活文化に係る歴史上の意義を有するとともに、芸術上の価値が高いものである。

- 菓名をもつ生菓子(練切・こなし)の登録要件は以下の4つである。

(1) 餡作りに最適な豆類を煮熟した後に、表皮を取り除いて餡の粒子を取り出し、糖類を加えた上で加熱し、練り上げてこし餡を製造する。

(2) こし餡を用いて生菓子作りに適した加工餡を製造する。製法は次のいずれかとする。

※ 練切：こし餡に、薯蕷又は求肥を加えたものを、加熱して練り上げる

※ こなし：こし餡に、小麦粉若しくは米粉又はその双方を加えたものを、蒸した上でこねる

(3) 加工餡を用いて季節の風物・習俗を手技により表現する

(4) 菓名は伝統的な命名に従うものとする

- 菓名をもつ生菓子(練切・こなし)の保持団体は、優秀和菓子職会(会長；細田治)で、2007年に開始された「選・和菓子職」の合格者らにより、2017年に結成された。合格率は約14%(2022年7月時点)で、会員数は98名である。生菓子の普及啓発活動を展開しており、今後は担い手の養成やわざの記録・保存に向けた活動も予定している。

4) 登録無形民俗文化財の事例

• 2022年までに登録された無形民俗文化財は、醤油醸造技術と土佐節の製造技術の2件である。

イ. 讃岐の醤油醸造技術

- 醤油は、庶民生活への普及、消費量の拡大とともに、近代以降、機械化や工場での大規模生産が進み、産地においても、手工業的な性格が後退し、伝統的な醸造技術が失われつつある。

- 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讃岐地方では「むしろ麴」と呼ばれる醤油麴の制法が伝承されており、木桶を用いた天然醸造を続けている醸元も数多く見られるなど、日本における醤油醸造の技術の変遷や地域差を理解する上で注目される。

- 讃岐の醤油醸造技術は、日本有数の醤油の産地である讃岐地方に伝承されてきた醤油づくりの技術である。讃岐における醤油の醸造は、瀬戸内の温暖な気候や恵まれた海運上の立地などを背景に、小豆島や引田などの地域で近世以来、盛んに行われてきた。

- 醤油の醸造は、「1.麴、2.糶、3.火入れ」といわれるように、麴づくりが重要であり、引田(東かがわ市)では、麴室の中で、原料を均一に広げた蕪を何段にも積み重ね、手入れや温度調節を繰り返しながら醤油麴をつくる「むしろ麴」の技術が伝承されてきている。また、小豆島(小豆島町、土庄町)では、大型の木桶を用いた天然醸造による醤油づくりの伝統がよく残されており、近年では、木桶の製造技術の伝承にも努めている。

- 保持者及び保持団体は、特に認めない。

ロ. 土佐節の製造技術

- 土佐節とは、高知県に伝承されてきた、枯れ節と呼ばれる硬質の鰹節である。日本における鰹節製造の歴史は古く、荒節や裸節を経て、近世後期に土佐でカビ付けによる鰹節が成立したとされる。カビ付けは、鰹節の腐敗を防ぎ、大坂や江戸などの遠隔地への流通を可能とするとともに、生臭みをとるなど品質を向上させ、土佐節の名を広く知らしめた。こうした土佐節の製造技術は、その後各地へ伝播し、技術交流をしながら今日に伝承されて、日本における海産物加工の技術の変遷を考える上で注目される。

- 土佐節の製造工程は、「土佐切り」と呼ばれる豪快な吊りし切りをはじめ、節状にして釜で煮る「煮熟」、小骨を取り除く「バラ抜き」、焚納屋の中に入れて煙で燻して水分を抜く「焙乾」、良性のカビ菌を鰹節に吹き付ける「カビ付け」などがあり、こ

の「カビ付け」と、「日乾」と呼ばれる天日干しの作業を交互に繰り返し行い、数か月かけて完成となる。

※「カビ付け」と「日乾」の工程は、計10回行われ、4層ほどのカビが生えるという。およそ6か月かけて、元の甕の1/6程度になった糠節が完成するという。

- 保持者及び保有団体は、特に認めない。現在、土佐節は土佐市所在の「竹内商店」のみで製造されている。

4. おわりに

- これまで韓国の共同体種目と日本の無形文化財の登録制度について述べてきた。
- 韓国と日本の制度は、制度の必要性からその趣旨や運用面においても異なる点があったが、ユネスコ人類無形遺産条約の発効以来、既存の無形文化財制度を補完しつつ、より広範囲にわたって自国の無形文化財の保護に向けて取り組んできたことは、同様であると思われる。
- 一方、韓国の指定目録においては、伝統生活慣習、伝統遊び・武芸、伝統知識の分野に集中する傾向があり、自然・宇宙知識、節気風俗など多様な分野の無形文化財を調査・保護することが課題となっている。
- 日本の無形文化財の登録は、芸能・工芸技術・生活文化の3分野で行われるが、現在は芸能と工芸技術の登録はなく、生活文化で集中的に行われている。まだ制度が始まったばかりであることから、事例や支援などの把握が困難であったが、これまで日本の無形文化財に含まれなかった生活文化について保護措置を講じることは鼓舞的な取り組みであると思われる。
- 日本の登録無形文化財及び登録無形民俗文化財に関する現場調査を準備する際に、マッコリ造りと伝統的酒造り、醬造りと讃岐の醤油醸造技術、餅作りと菓名をもつ生菓子など、韓国の共同体種目と類似していると思われた。今後、関連資料や現場調査が蓄積されていくにつれ、日韓の比較研究も進んでいくと考えられる。



<図 1> 不浄を清めるため、甕に足袋と注連縄などがかけられた様子

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の日本の 無形文化財・無形民俗文化財

코로나19 범유행 시대 일본의
무형문화재·무형민속문화재

久保田裕道・前原恵美(구보타 히로미치·마에하라 메구미)
東京文化財研究所(동경문화재연구소)



<图 2> 邪鬼が近づくことを防ぐため、甕にナツメや唐辛子などを入れる様子



<图 3> 甕から塩水に漬けた味噌玉を取り出す様子

新型コロナ禍の日本の 無形文化財・無形民俗文化財

久保田裕道・前原恵美

I. 新型コロナ禍における 日本の無形民俗文化財(久保田裕道, 東京文化財研究所)

1. はじめに

日本の文化財制度では、無形文化遺産は「無形文化財」「無形民俗文化財」「文化財保存技術」に分かれるが、本章ではそのうち「無形民俗文化財」について述べる。「無形民俗文化財」にも「風俗慣習」「民俗芸能」「民俗技術」というカテゴリーが存在するが、ここでは特に地域コミュニティとの関連が強い「民俗芸能」と「祭礼」(風俗慣習の一部)を中心にしたい。

さて、日本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Covid-19)が騒がれ始めたのは、2020年に入ってからのことである。2月に全国小中高校の臨時休校が発表され、民俗芸能や祭礼が中止を余儀なくされていった。そして4月に「緊急事態宣言」が発令されると、実施は完全に不可能となった。

以後、2020年4月からの第1波、8月の第2波、2021年1月の第3波、3月の第4波、7月の第5波、そして2022年1月からのオミクロン株による第6波、7月の第7波と感染者が増大した。その時々において国や都道府県から「緊急事態宣言」や「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といった布告が発せられ、催事の開催が制限された。またそうした制限が課されなかった時期においても、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に対する恐怖は大きく、各地で民俗芸能や祭礼を自主的に中止する傾向が強まった。実施を強行しようとしても、マスコミや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強い批判が殺到する状況にあった。こうした状況のまま、民俗芸能や祭礼は復活する契機

が得られなかったといえる。

2022年秋頃には、再開する民俗芸能や祭礼も増えだした。行政等による民俗芸能のステージ公演が再開したのもこの時期である。ただ同時に第8波といわれる流行もあって、各地の祭礼などは、規模縮小を継続する傾向も続いていた。

2023年5月、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ついて、国の感染症法上の位置づけが2類から5類に変更される。これによって行政による感染対策は原則的には行われなくなり、個人の判断に委ね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のことは民俗芸能や祭礼の再開を劇的に促進させた。4年ぶりの通常開催を果たし、制限なしの実施が各地で見られるようになった。

この稿では、そうし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流行時における日本の民俗芸能や祭礼などの無形民俗文化財が、どのような状況にあったのか、どのような対策が行われたのかを管見の範囲で報告する。

2. 無形民俗文化財の中止

2020年2月27日に全国の小中高校の臨時休校が発表されると、即座に無形民俗文化財も中止を決める。滋賀県でこの日に祭礼調査にあたっていた県の職員は、次のように述べる。「この日の餅つきが終わって私が帰った後に地域の中で協議が持たれまして、翌日からオコナイ行事は一変いたしました¹⁾」。普通に行うはずだった祭礼が、最低限の人数による宗教儀礼のみ実施され、民俗行事の部分は中止とされた。以後、宗教者による儀礼だけで、芸能などの無形民俗文化財の部分は行なわないといった省略の方法が全国的に取られることになる。

4月に入ると、夏に行われる全国の主だった祭礼は中止を決めた。「三大夏祭り」のような大規模な観光祭礼も、獅子舞のような小さな民俗芸能も、こぞって中止を決めた。この時期、ある盆踊りがどうすれば実施できるのかという提言を、ある個人がインターネットに挙げている。

① 開催期間を1日のみとする(通常は3日間)。② 県外、感染地域を訪れた演者は参加不可。③ 観覧者を入れず動画配信。④ 演者の手指消毒の徹底。⑤ 演技時のソーシャルディ

1) 矢田直樹「無形文化遺産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滋賀県の事例—」、『第十五回無形民俗文化財研究協議会報告書 新型コロナ禍の無形民俗文化財』(東京文化財研究所, 2021)

タンス確保。⑥ 唾子の飛沫感染対策。⑦ 露店は廃止せずに感染対策²⁾。検査などは未だ一般的ではなく、そのことを除けば、この対策案は慧眼であった。その後、民俗芸能を実施する際には、おおよそそのような対策が取られることとなる。

もちろん、公に示された対策もある。1949年に東京青年商工会議所として設立された現在の日本青年会議所からは、2020年9月に策定され改訂を重ねている「祭り・イベント等開催に向けた感染拡大防止ガイドライン」が出されている。そこには、「参加者が演舞等を行う際の留意点」として「運動強度が高い演舞等はできるだけ避け、それ以外の演舞等の場合は、呼吸が激しくなるため、より一層距離を空ける必要があります」とある³⁾。全国の神社の統括組織である神社本庁からは、2020年10月に「神社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ガイドライン」が出されている。そこには「神輿や山車では、事情によっては、時間や経路の短縮、又は省略等を行う」「獅子舞や神楽では、事前の稽古においても、感染症対策を十分に行う」といった記述が見られる⁴⁾。しかしいずれのガイドラインも、異口同音に制限を設けるといった内容であり、「どうすれば実施できるのか」という提言は見られなかった。

3. 無形民俗文化財の変容

神奈川県では2020年7～9月に民俗芸能保存協会が、コロナ禍の影響について各伝承団体に、アンケート調査を行った⁵⁾。保存会の稽古が完全に中断された団体が、約56%。公演・奉納を全くしなかった団体は60%に上った。継承への影響を尋ねた項目では、影響が「大にある」が45%程度、「少しある」が36%程度となっている。影響は意識されているものの、古典芸能とは異なり民俗芸能はそれが職業ではないために、例えば経済的ダメージは小さい。それゆえ中止が、深刻な危機だとはそれほど実感されない傾向ではあった。

2) まさや「様々な行事が中止になってく中で西馬音内盆踊りを続ける方法を考える」ウェブサイト2020 <https://note.com/lucy96044/n/n99da96bf9a7a>

3) 公益社団法人日本青年会議所「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ガイドライン」ウェブサイト2020 <https://www.jaycee.or.jp/2021/guideline>

4) 神社本庁「神社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ウェブサイト2020 <https://www.jinjahoncho.or.jp/3962>

5) 大谷津早苗「神奈川県民俗芸能保存協会」『民俗芸能研究』第70号（民俗芸能学会、2021）

例えば香川県で讃岐獅子舞保存会会長として「獅子舞王国さぬき」などのイベントを手がけてきた十川みつるは、香川県に約800団体存在する民俗芸能の獅子舞団体の一部に、アンケートを実施した。その結果について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⁶⁾。

今回各団体にアンケートを取ってみて気が付いたのですが、ほとんどのところが来年はなんとかなるだろうみたいな、やはりちょっと緊張感に欠けるといふか、そこまで深く今回のコロナ禍の状況を捉えてない、考えてないと言いたい方は悪いんですけども、楽観的に「来年やったらいいやん」みたいな答えのほうが多かったように思います。逆に研究者の方とお話しすると、今これはもう存続の危機やでという声までありまして、やっぱり立場や関わり方によって、すごく考える温度差があったなというのが、僕が今回思ったことです。

このアンケート実施は2020年のことであったため、その後危機感はさらに高まったであろうことは想定できる。ただ、感染拡大への危惧から実施への根強い反発もあり、2022年段階でも完全な再開に至っていたなかつたことも事実である。こうした状況が、民俗芸能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たかについては、よくよく分析を行う必要がある。単に文化財としての意義のみならず、継承が困難になった際に地域社会に与える影響という観点からも考える必要がある。

例えば2021年10月に、愛媛県西条市で秋祭りに曳く「だんじり」と呼ばれる山車を、警察に無許可で公道を運行するという事件が起きた⁷⁾。祭礼の山車であっても、公道を走る場合には警察の許可が必要になるが、それを行わなかったのである。通常の祭礼であれば当然ながら許可を取得するのだが、この年は、感染症対策として山車の運行を行わないことに決めた。しかし祭りが始まると、集まった人々から担ぎたいという声が出て、15人でわずか800メートル程の距離を担いだのだという。結果的に、責任者が書類送検されるという事件となった。法の順守は大前提だが、こうした祭りに対する人々の心理は、重視すべきである。

こうして長い期間、中止や規模縮小が続くうちに、民俗芸能や祭礼にも変化が表れ始め

6) 十川みつる「コロナ禍における讃岐の獅子舞と『獅子舞王国さぬき』」、『第15回無形民俗文化財研究協議会報告書 新型コロナ禍の無形民俗文化財』（東京文化財研究所、2021）

7) オンライン読売新聞2021年10月27日記事による。

る。2022年の夏は、感染者は増えていたものの、3年ぶりの再開が少しずつ見られた。ある民俗芸能では、関係者のみで行うので、「ご観覧は、ご遠慮いただく様お願い申し上げます」と部外者を禁じる告知があった。告知の有無に関わらず、こうした外部を排除した実施は、この時期の傾向となった。

さらにある祭礼では、製作物の規模を縮小して開催した。通常、竹と麦わらを使って大きな神輿を作るのだが、これを半分程度の大きさにした。作業人数を減らし、作業時間を短縮することで感染対策とした結果である。しかし製作に携わった青年は、「来年から、もうこの大きさでなければ作れない」と言う。年配者もそれを認めざるを得ない状況であり、感染症が、祭礼が姿を変えるきっかけともなっていた。少子高齢化や過疎化で伝承者が減少する無形民俗文化財にとって、変化は避けて通ることのできない課題である。しかしながら、感染症流行を機に多くの伝承が変容せざるを得ない状況に追い込まれることは、大きな問題といえよう。



2022年8月に再開された「かんこ踊り」

4. 継承のための取り組み

中止や変容が続く一方で、さまざまな新たな取り組みも行われた。特に関係者のみで民俗芸能を演じ、その様子を映像で発信するという試みは、さまざまな形で実施された。例えば

2020年に島根県の「石見神楽」という民俗芸能団体は、「疫病鎮静祈願神楽」を実施し、その模様をYouTubeで公開した。同じく岩手県の「北上鬼剣舞」という民俗芸能では、各地で同時刻に「疫病退散」を目的とした舞を演じ、それを後で映像配信した。さらにリモートツールを用いて自宅から「盆踊り」に参加しようという企画や、実演ができないこの時期に伝承用の教則映像を作製しようといった動きも出てきた。バーチャル観光ツアーに民俗芸能を組み入れたり、映像で遠隔地の伝承者を繋いだ交流も行われるようになっていく。

ただ、こうした無観客開催や映像配信を求める傾向の裏には、感染者の多い地域からの訪問者が増えることへの危惧もあった。過疎が進み、高齢者の多い地方村落において、感染者が多い都市部から人が大勢来ることに対して、恐怖を抱く人が多かった。例えば、その地域出身で都会で暮らす人が夏休みや正月の休みに帰省することですら、憚られたのである。それゆえ、研究者が地方に調査に行くことも憚られ、何とか調査をしてもそれを発表することもまた憚られる風潮にあった。

逆に、例えば東京で開催が予定されている民俗芸能大会に出演を依頼しても、東京には行けないと断られる事態も起きていた。2022年に入って第6波とされるオミクロン株の流行が地方の感染者数を増大させたことは、結果的に都市部との感染の格差を薄めることになり、そうした風潮が薄れたことは皮肉な結果ともいえよう。

また文化庁では2021年に前年度の補正予算で「地域無形文化遺産継承のための新しい生活様式支援事業」を立ち上げた⁸⁾。これは、① 動画作成等魅力発信支援、② 専用サイト開設支援、③ オンライン配信支援、④ リモート指導支援、⑤ アーカイブ作成支援、⑥ 相談窓口整備支援といった内容のもので、対象を文化財指定の有無に関わらず広げたところは画期的な取り組みであった。しかし行政を窓口にしたため採択は少なく、わずか17件に終わった。

さらに翌2022年、「デジタル技術を活用した伝統行事等の公開支援」が約30億円の規模で立ち上げられた⁹⁾。「相談機能を整備しながら、デジタル技術を活用するなどして公開を促進することにより活動継続を支援」という趣旨で、このときはNHKや日本テレビ、キャノンといった企業が主体となって支援事業が行われた。その結果、応募件数は増大し、採択は

8) 文化庁「令和2年度第3次補正地域文化財総合活用推進事業について」
ウェブサイト2021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_gyosei/yosan/pdf/2021122001_02.pdf

9) 文化庁「令和3年度補正予算関係資料」
ウェブサイト2022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zai/joseishien/chiiki_kasseika/r02_3jihosei_sogokatsuyo/

438件にも上っている。しかし一方で、映像を用いた公開方法や、活動継続のための支援についての方法論は、十分に議論されていなかった。さらに、こうした支援と伝承者とを仲介できる人材を育てることもまた、必要なことが判明した。

5. むすび

本章を書いている2023年夏の段階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流行は終息したわけではない。むしろ第9波といわれる流行がみられる最中である。地域によっては、この夏の民俗芸能や祭礼の実施も、見送ったところもある。しかし全国的にみれば、4年ぶりの再開を遂げたものが多いことは、統計を取ったわけではないが、明らかであろう。冒頭で述べたように、それには感染症についての法律上の位置づけが、通常のインフルエンザなどと同様の扱いに変更されたことに大きく起因していよう。結果論ではあるが、要は感染症に対する意識の変化なのである。

しかし民俗芸能や祭礼に対して芽生えた意識の変化は、今後の継承に大きな影響を与えつつある。「ようやく再開できる」とモチベーションアップにつなげたところはよいが、「規模縮小しても大丈夫じゃないか」と簡略化を推進させてしまう危惧を、大勢の関係者が抱いている。ただ仮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流行がなかったとしても、過疎化や少子高齢化によって全国の民俗芸能や祭礼が衰退に向かっていたことも事実である。そうした現状を踏まえれば、規模縮小や簡略化を継続することは、やむを得ない変化だという意見もある。

日本における民俗文化財は、指定の有無に関わらず、その実施や継承について行政が口を挟むことはない。稀に用具修理などに行政から支援が出ることはあるが、基本的には継承団体や地域が自ら人員や費用を賄い、自ら実施をする。都市部の観光化された行事を除けば、地域への経済的効果などないばかりか、負担ばかり強いられるというのが現状である。そのように民俗文化財の継承を過度な負担と見なす風潮となれば、その継承を促す意見はかき消されてしまうのであ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は、その負担と見なす風潮を後押しする理由にもなっていた。

ただ、こうした議論を行う際には、ほかの団体の状況や第三者の意見を知ることも重要である。ある地域に多数ある民俗芸能団体で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流行時に複数団体による協議会を開き、皆で情報を共有するようになった。すると「このような感染対策を行うことで演じた」といった情報を共有することになり、他の団体でも追従する例が見られた

という。そうした連合会の存在や、第三者による客観的な意見を聴く機会を作ることは、これからより一層必要とされよう。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流行は、そうした無形民俗文化財が内包する、さまざまな問題点を明らかにしていった。

II. 新型コロナ禍における日本の無形文化財 (前原恵美, 東京文化財研究所)

1. はじめに

日本で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以下、「新型コロナ」)が2020年4月から繰り返し流行し、2022年11月には第8波を数えた。日本ではいわゆるロックダウン政策は採られなかったが、政府はたびたび緊急事態宣言の発出・期間延長・区域変更、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の公示を重ねた。(【図1】参照)。これに伴い、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の基本的対処方針が48回にわたって発表され、関連する事務連絡は90回に及んだ。国レベルでの発表がこれだけあるのだから、それに応じた都道府県や関連業界がどれだけ頻繁に指針を見直し、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かは想像に難くない。2023年5月8日、新型コロナの感染症法上の位置づけが季節性インフルエンザなどと同じ「5類」に引き下げられ、日本はようやくwithコロナに向かって明確な一歩を踏み出した。

このたびの新型コロナは、実態や対処方法が明らかになるより先に感染力の強さが表面化したため、このことが人々の交流を大きく妨げた。無形文化財、特に古典芸能は、実演にしろお稽古にしろ、人と人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なしには本質的に成り立たないため、継承分断の危機に直面することになった。しかも、古典芸能に関わる人々は芸能を生業としているので、経済面での打撃も直接的に受けた。無形文化財のもう一つの柱である工芸技術も、コロナ禍の影響を受けたことは間違いないが、作品製作自体への影響は限定的で、古典芸能ほど深刻ではなかったと推測される。以下、コロナ禍の古典芸能を中心とした伝統芸能¹⁰⁾を中心に振り返る。

10) 「伝統芸能」という用語の定義は、未だ定まっていないように思う。「古典芸能」とほぼ同義で用いられ、民俗芸能(郷土芸能)と古典芸能を包含する用語として用いられ、「古典芸能」を中心とした芸能を生業とする人々(いわゆるプロフェッショナルな実演家)が支えている芸能の総称として用いられる。本稿では三番目の意味合いで「伝統芸能」の用語を用いる。

<図 1> 緊急事態宣言の発出と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の公示

No.	発出・公示内容	発出・公示年月日	解除年月日
1	第一回緊急事態宣言	2020-04-07	2020-05-25
2	第二回緊急事態宣言	2021-01-08	2021-03-21
3	第一回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	2021-04-05	2021-09-30
4	第三回緊急事態宣言	2021-04-25	2021-06-20
5	第四回緊急事態宣言	2021-07-12	2021-09-30
6	第二回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	2022-01-09	2022-03-21

2. 公演数に表れたコロナ禍の影響

東京文化財研究所では、2020年3月から2023年3月まで、インターネット上の情報から伝統芸能の上演情報、中止・延期情報を収集し、毎月公式HP上で公表してきた¹¹⁾。そこでは、① 関連事業の中止・延期／再開・開催件数〈形態別〉、② 実演の中止・延期／再開・開催件数〈月毎の推移〉、③ 実演の中止・延期／再開・開催件数〈都道府県別〉、④ ジャンルごとの実演—中止・延期／再開・開催件数、⑤ 実演の中止・延期／再開件数〈会場規模別〉、⑥ 実演の中止・延期／再開件数〈国指定重要無形文化財の割合〉として、調査概要をグラフや表とコメントで公開・更新してきた。

インターネット上の情報収集・分析・公表を始めたのには以下のような理由がある。伝統芸能の上演については、従来、月刊誌・季刊誌、場合によって一部新聞等の紙媒体への情報掲載が主流であった。しかしコロナ禍では、刻一刻と変化する感染状況や、政府等による公示に対する臨機応変な対応が求められたため、紙媒体というツールが実態に間に合わない状態になった。そのため、実演家や実演家団体、関連する劇場・ホール等は、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情報発信に大きくシフトした。こうした状況を目の当たりにして、私たちは、インターネット上で発信され、消えていく情報を収集して分析することが、コロナ禍の伝統芸能への影響を振り返るための一つの重要な手段になると考えた。ちなみに、今年3月でインターネット上の情報収集を終了したのは、新型コロナが収まるにつれて、伝統芸能の情報発信が従来の

紙媒体に回帰し、インターネット上の情報が停滞していると判断したからである。

【図 2】(末尾参照)は、2020年3月から2023年3月までに国内で開催された伝統芸能の上演件数(●)、中止・延期件数(■)の月毎の推移を、折れ線グラフで示したものである。2020年3月以前の情報は収集していないので、コロナ禍以前の件数比較ができないことは残念だ。しかし、グラフの冒頭、2020年3月から4月にかけて、中止・延期件数が爆発的に増えている理由は明らかである。2月26日に、安倍首相(当時)が全国規模のイベント開催について2週間の自粛(中止、延期、規模縮小等の対応)を求めた。さらに文化庁が文化関係団体の長などに向けた3月20日付け事務連絡「各種文化イベントの開催に関する考え方について(令和2年3月20日時点)」の中で、全国の大規模イベント等については十分に注意してリスクへの対応を行い、仮にリスクへの対応が整わない場合には中止および延期を依頼した。これらへの即座の反応が中止・延期件数の激増に表れたのだ。この時期が、日本において伝統芸能がコロナ対策を求められた実質的な出発点になった。以下、このグラフから注目される点を3つ挙げる。

最初に注目すべき時期は2020年6月から7月にかけてである(グラフの①)。この時期に、それまで急増していた中止・延期数と上演件数が交差して、コロナ禍でも伝統芸能の上演を復活させようとする傾向が明らかになった。ちなみにこの時期は、4月に日本で最初に発出された緊急事態宣言が、5月になって全面解除された時期と重なる。

その後、伝統芸能の公演は、コロナ対策を講じながらしだいに盛り返していくが、第二に注目される時期である2021年5月(グラフの②)を見ると、中止・延期件数が上演件数を上回る大きな危機にあったものの、かろうじて回避した足跡が見て取れる。当時の日本では、4月末から7月にかけて緊急事態宣言が地域を拡大・縮小しつつ継続的に公示され、伝統芸能関係者は新型コロナ流行の波への対応を迫られていた。ただしこの頃には、都道府県や各業界団体等が作成したガイドラインに則ったコロナ対策や、公私の支援が整えられつつあったため、中止・延期件数が上演件数を上回る「逆転状況」を回避することができたと考えられる。

第三の注目時期は、グラフに示した3か所の③と1か所の④である。伝統芸能の上演件数は、大まかに追えば、多少の増減を繰り返しながらも2021年以降は毎月600~700件台を緩やかに保持している(グラフの④)。しかし実は、2020年後半に最初のコロナ危機を乗り越えた時の伝統芸能の上演数は、月に900件を超えていた(グラフの③)。当時の反発力に比べると、その後の上演数はやや低迷した状況が常態化してしまっているとも捉えられ、注視が必要である。

11) <https://www.tobunken.go.jp/ich/vscovid19/influence/> 過去の情報更新も上記ページから見るができる。

3. 関係業界への影響と支援

先の見通せないコロナ禍にあって、実演家だけでなく、実演を様々な技術(いわゆる文化財保存技術。装束・衣装、鬘、楽器、大小道具製作技術など)で支える人々にも影響が及んでいった。伝統芸能を支える文化財保存技術の多くは、コロナ禍以前から需要と供給のバランスに課題を抱えていたが、それがコロナ禍で一気に顕在化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とりわけ伝統芸能界に衝撃が走ったのは、2020年



三味線の胴を製作する
株式会社「東京和楽器」代表・大瀧勝弘氏

5月、インターネット上で大手三味線メーカー「東京和楽器」が廃業危機にあるとの情報が流れた時であった。三味線製作が滞れば、伝統芸能のみならず民俗芸能や浪曲などの諸芸に至るまで、日本の芸能への影響は大変大きく、深刻な事態が近づいていた。

幸いなことに、この一件が新聞やテレビなどで取り上げられたこともあり、実演家や愛好家が、これまであまり顧みなかった伝統芸能を支える人々に関心を持ち、結果的に支援の輪が広がる契機になった。またこれ以降、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や募金を通して、個人レベルでの国境を超えた直接的な経済支援も広がった。

一方、国は「文化芸術活動への緊急総合支援パッケージ」(令和2年度第2次補正予算、560億円)でのフリーランスや小規模団体を対象に含む支援や、「コロナ禍における文化芸術活動支援」(令和3年度補正予算、556億円)で「ARTS for the future!」(交付決定7,024件/申請11,200件)、「ARTS for the future!2」(交付決定6,934件/申請8,277件)等の実演家向け支援など、文化芸術活動を「止めない」支援策を断続的に打ち出している。伝統芸能関係者も、これらの支援を活用しながら、新型コロナ対策を講じた公演や動画配信等による表現に活路を見出そうとした。

ところで、2021年に「箏製作/三味線棹・胴製作」(邦楽器製作技術保存会)、2022年に「三味線製作修理」(三味線製作修理技術保存会)が、相次いで国の選定保存技術に選定されたことは注目される。これらの選定はコロナ禍と直接連動してはいないものの、コロナ禍で表面化した「伝統芸能を支える保存技術継承への危機感」が背景にあると見ることもできる。いずれに

せよ、楽器製作技術について、個人の保持者ではなく保存団体が認定されたのは初めてのことであり、こうした技術選定・団体認定が2年続けて行われたことは、結果として国が伝統芸能にかかる保存技術の継承を重視している姿勢を広くアピールした。

4. withコロナの今後

現在、withコロナに向かって伝統芸能の公演規模・時間、人数制限は急速にbeforeコロナに戻りつつある。例えば伝統芸能の典型的な大規模興行である歌舞伎座の歌舞伎公演は、2020年3月から7月まで全面休演し、8月から座席を半以下に減らして約1時間の演目で「四部制」とし、各回で観客や出演者・舞台関係者をすべて入れ替えて公演を再開した。その後、2021年1月からは約2時間の演目による「三部制」にして、観客や出演者、舞台関係者の入れ替え回数を減らし、入れ替えに伴う負担を軽減した。さらに2022年1月からは席数制限を全座席の60%台後半、8月からは97.3%にまで緩和し、2023年6月からは最も安価な一幕見席を含めて全座席の販売に踏み切った。こうなると伝統芸能は一見、以前の状態を取り戻しつつあるように見える。

一方で、「回帰」とはいかない面もあるようだ。伝統芸能は、コロナ禍以前から愛好家(観客や実演家の素人弟子など)の年齢層が高い傾向にある。その高齢者が新型コロナに感染すると重篤化する傾向があるとされたため、従来の伝統芸能愛好家である比較的高い年齢層の人々は外出を控えた。そうした生活が2年、3年と続くうちに、高齢者は外出を控えることが常態化した。こうなると、withコロナに向かって公演や稽古が再開されても、鑑賞のために出かけたり稽古に向いたりする習慣がなくなってしまっており、かつての習慣を取り戻すことが難しくなっている。そのため、公演の座席を100%販売していても、観客数は未だに新型コロナ以前まで回復していないように見受けられるし、愛好家が稽古の成果を発表するお祝い会は再開の動きが鈍い。お祝い会は、師匠である実演家にとっても、楽器製作・修理に関わる製作者にとっても、また会場や舞台設営に関わる人々にとっても、芸能の普及・継承のみならず精神的なモチベーションと経済的安定のために大きな役割を果たすので、今後の動向に注意が必要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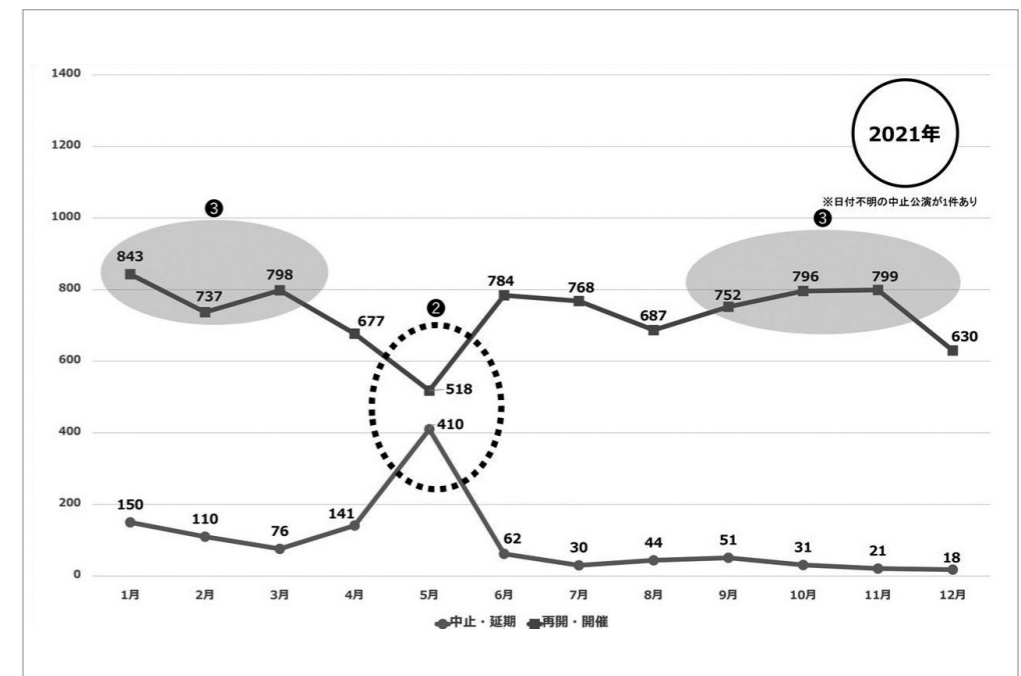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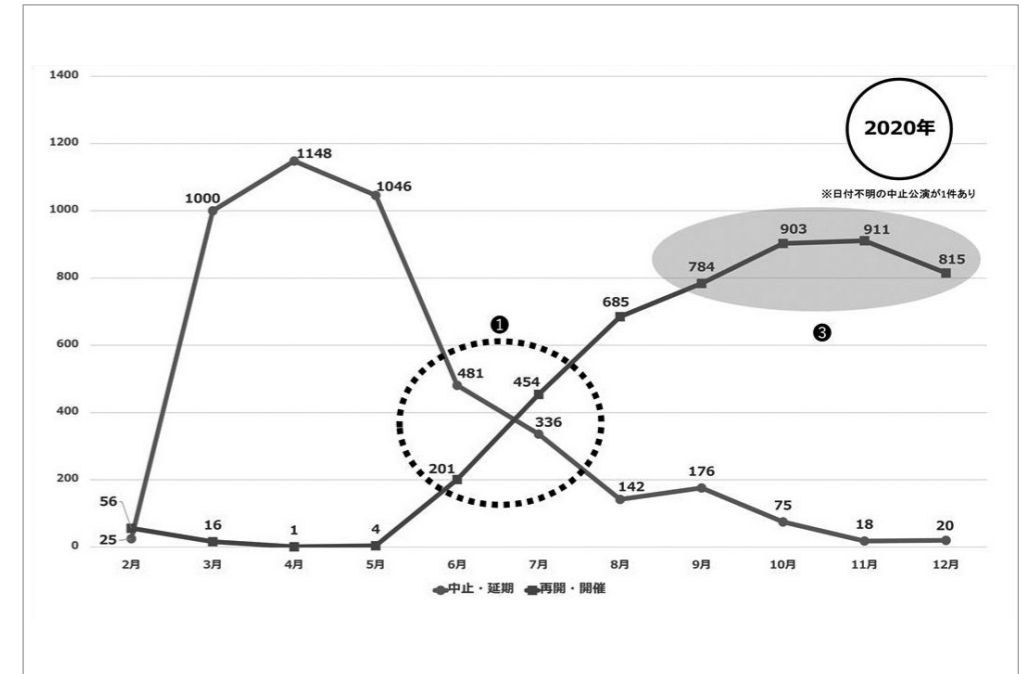
また、コロナ禍の公的支援は、人と人の接触を控える意図もあって、動画配信などの新たな表現ツールの開拓に手厚い傾向があった。しかしそれらのツールが、公的支援の終了した今、必ずしも定着してはおらず、普及・拡大の呼び水となっている兆しははっきりとは見えてこない。コロナ禍にあっては、なかなか公的資金が及ばない部分をクラウド・ファンディ

ングが補ったこともあって、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の知名度は一気に上がり、注目を浴びた。しかしコロナ禍の非常事態から抜け出しつつある今、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がどのように定着していくのか、あるいは一時的な動きに留まるのかも、不透明である。

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といえば、2023年8月、国立科学博物館が標本を収集し保管する資金を補うため、1億円を目標として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を開始した。国立の博物館が直面している本質的な危機が世間に与えた衝撃は大きく、幅広い注目を集めた。その結果、このプロジェクトは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開始から9時間で目標金額に到達し、2週間余りで7億円を超える資金が集まっている。今や新たに資金の一部を国内のほかの博物館の支援などに充てる方針が国立科学博物館から発表されて、引き続きプロジェクトの行方が関心を呼んでいる。

こうした動向を踏まえて、文化芸術活動の支援をメニュー(目的)に応じてどのような枠組みで実施していくのか。あるいは、そもそも文化芸術の享受と継承において、国や地方自治体はどのようにイニシアティブを取っていくのか。伝統芸能を含む無形の文化財保護の在り方が問い直されるのは、コロナ禍を潜り抜けたこれからであろう。同様に、コロナ禍の危機共有と支援の広がりを通して、確かに手応えのあった「伝統芸能を取り巻く環境を含めて捉える視点」を、いかに保ちつつ伝統芸能継承に繋がられるか。またその手応えを新たなネットワークとして結実させることができるか。いずれも正念場を迎えている。

<図 2> 伝統芸能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渦の影響



코로나19 범유행 시대 일본의 무형문화재·무형민속문화재

구보타 히로미치·마에하라 메구미(동경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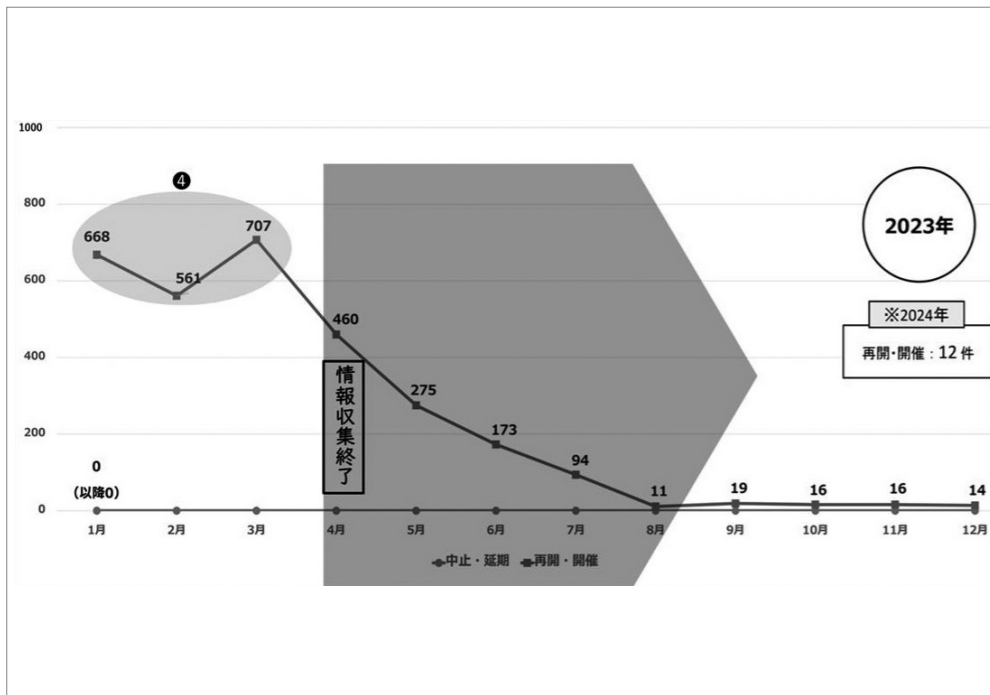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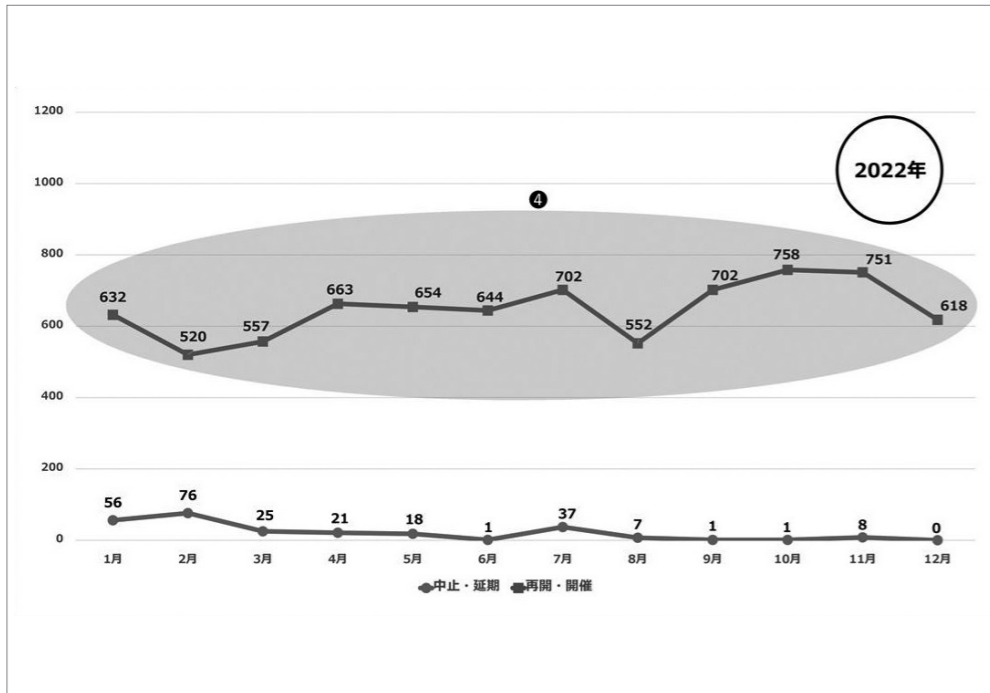
I. 코로나19 범유행 시대의 일본 무형민속문화재

1. 시작하며

일본의 문화재 제도에서 무형문화유산은 ‘무형문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 ‘문화재 보존기술’로 나뉘는데, 본고에서는 그중에서도 ‘무형민속문화재’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무형민속문화재’에도 ‘풍속관습’, ‘민속예능’, ‘민속기술’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련성이 강한 ‘민속예능’과 ‘제례’(풍속관습의 일부)를 중심으로 논하고 싶다.

코로나19가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2020년에 들어서면서부터다. 2월에는 전국 초중고교에 임시휴교령이 내려져 민속예능과 제례가 부득이하게 중지되었으며, 4월에는 긴급사태가 선포되면서 실시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졌다.

이후 2020년 4월부터 제1차 유행, 8월의 제2차 유행, 2021년 1월의 제3차 유행, 3월의 제4차 유행, 7월의 제5차 유행,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제6차 유행, 7월의 제7차 유행을 거치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때마다 국가와 도도부현은 ‘긴급사태 선포’와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발효하여 행사의 개최를 제한했다. 이러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던 시기에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공포감이 상승하여, 각지에서 민속예능과 제례를 자발적으로 중지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났다. 실시를 강행하려고 해도 마스크이나 인터넷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질 판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속예능과 제례는 결국 부활의 계기를 얻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가을 무렵에는 재개되는 민속예능과 제례의 수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행정 등에 의한 민속예능의 스테이지 공연이 재개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다만 이와 동시에 제8차 유행기를 맞닥뜨렸기 때문에 각 지역의 제례 등은 계속해서 규모를 축소해 실시하는 경향도 보였다.

2023년 5월에는 코로나19의 국가 감염증법상 등급이 2류에서 5류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은 원칙적으로 감염 대책을 실시하지 않게 되었고 개인의 판단에 맡겨졌다. 이는 민속예능과 제례의 재개를 극적으로 촉진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4년 만에 정상적인 개최가 이루어지며 각종 제한 없이 실시되는 모습을 각지에서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 범유행 시대에 일본의 민속예능과 제례 등 무형민속문화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책이 이루어졌는지를 협의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무형민속문화재의 중지

2020년 2월 27일 전국 초중고교에 임시휴교령이 내려지고 곧이어 무형민속문화재도 중지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날 시가현에서 제례 조사를 맡았던 현 직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날 떡메치기 행사가 끝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지역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오코나이 행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¹⁾ 원래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례는 최소한의 인원을 동원한 종교의례 형태로만 진행되었고 민속행사 부분은 중지되었다. 이후에는 종교인이 진행하는 의례로서 예능 등 무형민속문화재 부분은 실시하지 않고 생략하는 방식이 전국에서 채택되었다.

4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여름에 개최될 전국 주요 제례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3대 여름 축제’와 같은 대규모 관광 제례도, 사자춤과 같은 소규모 민속예능도 전부 취소되었다. 이 시기 한 네티즌은 어떻게 하면 본오도리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인터넷상에 남기기도 했다.

① 개최 기간을 하루로 제한한다(보통은 3일). ② 현(県) 외 및 감염 지역을 방문한 공연자는

1) 야다 나오키, 「무형문화유산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 시가현의 사례」, 『제15회 무형민속문화재연구협의회 보고서, 코로나19 범유행 속의 무형민속문화재』(도쿄문화재연구소, 2021).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다. ③ 관객 없이 진행하고 동영상을 배포한다. ④ 공연자는 손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⑤ 공연 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⑥ 하야시(囃子) 반주 시에는 비밀 감염 대책을 마련한다. ⑦ 노점은 문을 열 뒤, 감염 대책에 따른다.²⁾ 등의 내용이었다. 당시에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았던 검사 등과 같은 부분을 제외하면, 이 대책안은 꽤 해안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실시되는 민속예능에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대책이 취해졌다.

물론 공개적으로 발표된 대책도 있었다. 1949년 도쿄청년상공회의소로 설립된 현재의 일본청년회의소에서는 2020년 9월에 책정되어 개정을 거듭한 ‘축제 및 이벤트 등의 개최를 위한 감염 확대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참가자가 연무 등을 실시할 때의 유의점’으로 ‘운동 강도가 높은 연무 등은 가급적 피하며, 그 외 연무 등의 경우는 숨을 격하게 내쉴 위험이 있으므로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³⁾ 일본 전국의 신사를 총괄 관리하는 조직인 신사본청에서는 2020년 10월 ‘신사의 코로나19 감염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신가마(神輿)나 축제용 수레(山車)는 사정에 따라 시간과 경로를 단축하거나 생략한다.’, ‘사자춤이나 신악(神樂)의 경우, 사전 연습 과정에서도 감염 대책을 철저히 실시한다.’는 언급을 볼 수 있다.⁴⁾ 그러나 어느 가이드라인이나 이구동성으로 제한을 두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어떻게 하면 행사를 실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찾아볼 수 없었다.

3. 무형민속문화재의 변용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가나가와현의 민속예능보존협회에서는 각 전승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의 범유행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⁵⁾ 이에 따르면 보존회의 연습이 완전히 중단된 단체가 약 56%, 공연 및 봉납 행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단체는 60%나 됐다. 계승 부분에서의 영향을 물은 항목에서는 영향이 ‘크다’가 45%, ‘꽤 있다’가 36%를

2) <https://note.com/lucy96044/n/n99da96bf9a7a> “노트닷컴 <다양한 행사가 중지되는 가운데 니시모나이 본오도리를 계속해나갈 방법을 생각하다>”

3) <https://www.jaycee.or.jp/2021/guideline> “공익사단법인 일본청년회의소 <코로나19 관련 가이드라인>”

4) <https://www.jinjahoncho.or.jp/3962> “신사본청 <“신사의 코로나19 감염 대책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5) 오야쓰 사나에, 『가나가와현 민속예능보존협회』, 『민속예능연구』 제70호(민속예능학회, 2021).

나타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사실은 의식되고 있지만, 고전예능과 달리 민속예능은 그 자체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는 적은 편이었다. 그래서인지 행사 중지가 심각한 위기라고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가가와현에서 사누키사자춤보존회의 회장으로 '사자춤 왕국 사누키' 등의 이벤트를 진행해 온 소고 미쓰루는 가가와현에 약 800개 존재하는 민속예능 사자춤 단체의 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⁶⁾

이번에 각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놀란 점 중 하나는 내년에는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긴장감이 부족하다고 할까. 어쩌면 위험한 발언일지도 모르겠지만,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낙관적으로 '내년에 하면 되지 뭐'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반대로 연구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지금이 바로 존속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와서, 역시 각자의 입장이나 연관된 상황에 따라 생각의 온도 차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실시된 것은 2020년으로, 이후의 위기감은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다. 다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서 2022년에도 완전한 재개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민속예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보다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문화재로서의 의의뿐만 아니라, 계승이 어려워졌을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에히메현 사이조시에서는 가을 축제 때 사용하는 '단지리'라는 수레를 경찰에게 허가도 받지 않고 공공도로에서 운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⁷⁾ 제례용 수레라도 공공도로를 달리려면 경찰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통상적인 제례였다면 당연히 허가를 받았겠지만, 당시는 감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수레를 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해였다. 그러나 축제가 시작되자 축제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수레를 메고 싶다는 말이 나왔고, 15명이 고작 800미터 정도의 거리를 운반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6) 소고 미쓰루, 「코로나19 범유행 속의 사누키 사자춤과 '사자춤 왕국 사누키」, 『제15회 무형민속문화재연구협의회 보고서, 코로나19 범유행 속의 무형민속문화재』(도쿄문화재연구소, 2021).

7) 온라인 요미우리신문 2021년 10월 27일자 기사

책임자는 불구속 입건되었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축제 상황에서 발현되는 사람들의 심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중지 및 규모 축소가 지속되면서 민속예능과 제례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2년 여름은 확진자가 증가했음에도 3년 만에 재개의 움직임을 조금씩 볼 수 있었던 때였다. 한 민속예능에서는 관계자들만의 행사로 진행하면서 '관람은 삼가 주십시오'라고 외부인의 참여를 금지하는 고지가 붙기도 했다. 이처럼 고지 유무와 관계없이 외부인을 배제하고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이 시기의 경향이었다.

또 어떤 제례에서는 제작물의 규모를 축소해 개최하기도 했다. 보통은 대나무와 밀짚을 이용해 커다란 신가마를 만드는데, 이를 절반 정도의 크기로 축소한 것이다. 작업 인원을 줄이고 작업 시간을 단축하는 감염 대책을 내세운 결과였다. 그러나 제작에 참여한 한 청년은 '이제는 이 크기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장자들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범유행이 제례의 모습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저출산 및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 전승자가 감소하는 중인 무형민속문화재에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범유행을 계기로 수많은 전승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8월 민속예능 재개(要確認)

4. 계승을 위한 노력

행사의 중지 및 변용이 계속되는 한편,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대책도 마련되었다. 특히 관계자들만 민속예능에 참여하고 이를 영상으로 송출하려는 시도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2020년 시마네현의 ‘이와미 가구라(石見神楽)’라는 민속예능단체는 ‘역병의 진정을 기원하는 신악(神樂)’을 공연하고 그 모습을 YouTube에 공개했다. 마찬가지로 이와테현의 ‘기타카미 오니켄바이(北上鬼剣舞)’라는 민속예능에서는 지역 곳곳에서 같은 시간에 ‘역병 퇴산의 춤’을 추고 이를 후에 영상으로 배포했다. 이외에도 원격 연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택에서 ‘본오도리’에 참여하는 기획이나, 실연이 불가능한 이 시기에 전송용 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버추얼 투어(Virtual tour)에 민속예능을 접목시키거나 멀리 떨어진 전승자들을 영상으로 연결하는 교류도 이루어졌다.

다만 이러한 무관객 개최나 영상 송출 등의 방식을 요구하는 경향의 이면에는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서 온 방문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로 고령자가 거주하는 지방 시골 마을에 확진자 수가 훨씬 많은 도시의 거주자들이 몰려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지역 출신이지만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여름휴가나 설 연휴에 잠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조차 기피했다. 그래서 연구자가 조사를 위해 지방을 방문해도 이를 꺼리거나, 어떻게든 조사가 이루어졌어도 그 결과를 발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반대의 예로는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민속예능대회에 출연해 줄 것을 요청해도 도쿄에는 갈 수 없다며 거절당하는 일도 있었다. 2022년에 들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제6차 유행이 찾아오면서 지방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도시와의 확진자 격차를 줄여 위와 같은 풍조가 희석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문화청에서는 2021년에 전년도 추경예산으로 ‘지역 무형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새로운 생활양식 지원사업’을 실시했다.⁸⁾ 그 내용은 ① 동영상 제작 등 매력 알리기 지원, ② 전용 사이트 개설 지원, ③ 온라인 송출 지원, ④ 원격연결 지도 지원, ⑤ 아카이브 작성 지원, ⑥ 상담창구 정비 지원 등으로 문화재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을 창구로 이용하는 한계점으로 인해 채택 건수는 고작 17건에 그쳤다.

8)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_gyosei/yosan/pdf/2021122001_02.pdf “문화청 <2020년도 제3차 추경 지역문화재 종합활용추진사업에 대하여>”

다음 해인 2022년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통 행사 등의 공개 지원’이 약 30억엔 규모로 실시되었다.⁹⁾ ‘상담 기능의 정비 및 디지털 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공개를 촉진함으로써 활동의 지속을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이 당시에는 NHK와 니혼TV, 캐논 등 민간기업을 주체로 사업이 진행된 덕에 응모 건수가 대폭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438건이나 채택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상을 이용한 공개 방법이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과 전승자를 증개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필요성 또한 크게 대두되었다.

5. 마치며

본고를 작성하고 있는 2023년 여름 시점에도 코로나19의 유행은 종식되지 않았다. 오히려 제9차 유행이라는 또 다른 위기가 한창 지속되는 중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올여름으로 예정되었던 민속예능과 제례 행사를 다시 한번 미루기로 결정한 곳도 있다. 그러나 아직 통계로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는 4년 만에 드디어 재개를 달성해낸 곳도 많을 거라 판단된다. 이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의 감염증범상 위치가 인플루엔자 등 보통의 계절독감과 같은 단계로 변경된 것이 그 원인일 것이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결국 요점은 감염병에 대한 의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민속예능과 제례와 관련해 싹튼 의식의 변화는 앞으로의 계승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드디어 재개할 수 있다’고 동기가 부여된 점은 좋았지만, 많은 관계자들이 ‘규모를 축소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며 간략화를 추진해 버릴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 다만 설령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았더라도, 과소화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전국의 민속예능과 제례가 이미 쇠퇴로 치닫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계속해서 규모의 축소나 간략화가 추진되는 것도 불가피한 변화라는 의견이 있다.

일본의 민속문화재는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실시나 계승에 있어서 행정은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드물게 도구 수리 등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승 단체와 지역이 인원이나 비용을 조달해 스스로 실시한다. 도시 지역의 관광화 된 행사를 제외하면, 지역에서의 경제적 효과 등은 기대할 수 없고 부담만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이렇게 민속문화재의

9)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zai/joseishien/chiiki_kasseika/r02_3jihosei_sogokatsuyo/ “문화청 <2021년도 추경예산 관련 자료>”

계승을 과도한 부담으로 여기는 풍조가 계속되다가는 계승을 활성화시키자는 의견은 지워지고 말 것이다. 코로나19의 범유행은 이처럼 계승을 부담으로 간주하는 풍조를 뒷받침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의 상황이나 제삼자의 의견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한 지역에 다수가 존재하는 민속예능 단체에서는 코로나19의 범유행 당시 여러 단체로 이루어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성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감염대책을 실시함으로써 공연할 수 있었다’는 정보가 공유되어 다른 단체에서 추종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연합회의 존재나 제삼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결국 코로나19의 범유행은 무형민속문화재가 내포한 다양한 문제점을 한층 더 명확하게 내보였다고 할 수 있다.

II. 코로나19 범유행 시대 일본의 무형문화재

1. 시작하며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2020년 4월부터 반복적으로 유행하다가 2022년 11월에 제8차 유행기를 맞았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록다운이라는 봉쇄 정책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긴급사태선언 발령, 기간 연장, 구역 변경,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공시 등을 거듭했다. (<표1> 참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 방침이 48회에 걸쳐 발표되었으며 관련 사무 연락도 90회에 달했다. 국가 차원의 발표가 이 정도였으니, 그에 따라 도도부현이나 관련 업계가 얼마나 자주 방침을 고치고 대응해야 했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2023년 5월 8일, 코로나19를 감염증법상 계절독감과 같은 ‘5류’로 하향 조정하면서 ‘with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코로나19는 그 실태나 대처 방법이 밝혀지기 전부터 이미 전염력의 강도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교류를 특히 크게 저해했다. 무형문화재, 그중에서도 특히 고전예능은 실연이든 연습이든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계승이 단절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게다가 예능을 생업으로 삼는 고전예능 관련업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타격도 입었다. 무형문화재의 또 다른 기동인 공예기술 분야도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테지만, 작품 제작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어서 고전예능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에서는 코로나19 범유행 시대를 고전예능을 중심으로 한 전통예능¹⁰⁾을 중심으로 되돌아보고자 한다.

<표 1> 긴급사태선언 발령과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공시

연번	발령 및 공시내용	발령 및 공시연월일	해제연월일
1	제1회 긴급사태선언	2020-04-07	2020-05-25
2	제2회 긴급사태선언	2021-01-08	2021-03-21
3	제1회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2021-04-05	2021-09-30
4	제3회 긴급사태선언	2021-04-25	2021-06-20
5	제4회 긴급사태선언	2021-07-12	2021-09-30
6	제2회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2022-01-09	2022-03-21

2. 공연 횟수에 나타난 코로나19 범유행의 영향

동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인터넷상에서 전통예능의 상연 정보와 중지 및 연기 정보를 수집하여 매달 공식 홈페이지에 공표해왔다.¹¹⁾ 그리고 ① 관련 사업의 중지 및 연기/재개 및 개최 건수 <형태별>, ② 실연의 중지 및 연기/재개 및 개최 건수 <월별 추이>, ③ 실연의 중지 및 연기/재개 및 개최 건수 <도도부현별>, ④ 장르별 - 중지 및 연기/재개 및 개최 건수, ⑤ 실연의 중지 및 연기/재개 및 개최 건수 <행사장 규모별>, ⑥ 실연의 중지 및 연기/재개 및 개최 건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비율>을 바탕으로 조사 개요를 그래프와 표, 코멘트 등으로 공개하고 갱신했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의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공개하기 시작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전통예능과 관련된 상연 정보는 이전에는 월간지나 계간지,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신문 등의 종이 매체에 게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면서부터는

10) ‘전통예능’이라는 용어는 아직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은 듯하다. ‘고전예능’과 거의 같은 의미 또는 민속예능(향토예능)과 고전예능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고전예능’을 중심으로 예능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른바 프로 실연가)이 뒷받침하는 예능의 총칭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세번째 의미로 ‘전통예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11) 과거 코로나19 관련 자료도 동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유산부 웹사이트(<https://www.tobunken.go.jp/ich/vscovid19/influen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염 상황이나 정부 등이 발표하는 공시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종이 매체라는 도구로는 더 이상 빠르게 실태를 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실연가와 실연가 단체, 관련 극장이나 홀 등은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으로 크게 이동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전달되고 사라지는 정보를 수집해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 범유행이 전통예능에 끼친 영향을 되돌아보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덧붙이자면,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인터넷상의 정보 수집을 종료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전통예능 관련 정보의 전달도 이전의 종이 매체로 회귀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정보가 정체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프>(말미 참조)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일본 국내에서 개최된 전통예능의 상연 건수(●)와 중지 및 연기 건수(■)의 월별 추이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020년 3월 이전의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 범유행 이전의 건수와 비교하지 못한다는 점은 아쉽다. 그러나 그래프의 첫머리에서 2020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중지 및 연기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명확하다. 2월 26일 당시 아베 총리가 전국 규모의 이벤트 개최를 2주간 자숙(중지, 연기, 규모 축소 등)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게다가 문화청도 3월 20일 문화 관련 단체의 기관장들에게 사무 연락을 통해 「각종 문화 이벤트 개최와 관련한 의견에 대하여(2020년 3월 20일 시점)」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전국적인 규모의 대형 이벤트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리스크 대응 방침을 세울 것, 그리고 만약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면 이벤트를 중지 또는 연기할 것을 의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중지 및 연기 건수의 급증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그래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의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시기는 2020년 6월부터 7월이다(그래프의 ❶). 이 시기에는 그동안 급증했던 중지 및 연기 건수와 상연 건수가 교차하면서 코로나19 범유행 사태 속에서도 전통예능의 상연을 부활시키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참고로 이 시기는 지난 4월 일본에서 최초로 발령된 긴급사태선언이 5월에 들어서면서 전면 해제된 시기와도 겹친다.

이후 전통예능 공연은 코로나19 대책을 강구하면서 점차 회복세로 돌아선다. 그러나 두번째로 주목해야 할 시기인 2021년 5월(그래프의 ❷)을 보면, 중지 및 연기 건수가 상연 건수를 웃도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가 가까스로 회피한 듯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4월 말부터 7월까지 지역을 확대 또는 축소를 반복하는 긴급사태선언이 지속적으로 발령되면서, 전통예능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다만 이 무렵에는 도도부현이나 각 업계 단체 등이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코로나19 대책이 마련되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이 정비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중지 및 연기 건수가 상연 건수를 웃도는 ‘역전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음 세번째로 주목할 만한 시기는 그래프에 표시된 3곳의 ❸과 2곳의 ❹이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예능의 상연 건수는 크고 작은 증감을 반복하다가도 2021년 이후에는 매달 600~700건대를 완만하게 유지한다(그래프의 ❹). 그러나 실제로는, 2020년 후반기에 처음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넘겼을 당시에 도 전통예능의 상연 건수는 월 900건을 초과했었다(그래프의 ❸). 당시의 반발력과 비교하면 그 후의 상연 건수는 다소 부진한 상태가 상시화되어 버렸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관련업계에 미친 영향과 지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코로나19 범유행 시대에는 실연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른바 문화재 보존 기술, 복장 및 의상, 가발, 악기, 대소도구 제작 기술 등)로 실연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쳤다. 전통예능을 지탱하는 문화재 보존 기술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이전부터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서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19 범유행으로 단번에 가시화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통예능계에 충격을 던진 것은 2020년 5월 인터넷상에 대형 샤미센 제조사인 ‘도쿄일본악기’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을 때였다. 샤미센 제작이 중단되면 전통예능뿐만 아니라 민속예능과 로우쿄쿠(浪曲) 등 여러 예능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예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샤미센의 몸통을 제작하는
오타키 가쓰히로(주식회사 도쿄일본악기 대표)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이야기가 신문이나 TV 등에서 다뤄지면서 실연가와 애호가들이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전통예능을 지탱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모아졌고, 결과적으로는 지원의 고리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 이후 크라우드 펀딩이나 모금 등 개인 차원에서도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한편 국가는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긴급 종합 지원 패키지’(2020년도 제2차 추경예산, 560억엔)의 지원 대상에 프리랜서와 소규모 단체를 포함시켰고 ‘코로나19 범유행 시대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2021년도 추경예산, 556억엔)을 통해 ‘ARTS for the future!’(교부 결정 7,024건/신청 11,200건), ‘ARTS for the future! 2’(교부 결정 6,934건/신청 8,277건) 등 실연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 등 문화 예술 활동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책을 간헐적으로 내놓았다. 전통예능 관계자들 역시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염 방지 대책을 강구한 공연이나 동영상 전송 등 표현적인 부분에서 활로를 찾고자 노력했다.

그 와중에 2021년 ‘고토(箏) 제작/샤미센 목 및 몸통 제작’(일본악기제작기술보존회)과 2022년 ‘샤미센 제작 수리’(샤미센제작수리기술보존회)가 잇달아 국가의 선정보존기술로 선정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의 선정은 코로나19의 범유행과 직접 연동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로 가시화된 ‘전통예능을 뒷받침하는 보존 기술의 계승에 대한 위기감’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어쨌든 악기 제작 기술로서 개인 보유자가 아닌 보존 단체가 인정된 것은 이때가 최초로, 이러한 기술 선정 및 단체 인정이 2년 연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전통예능과 관련된 보존 기술의 계승을 중시한다는 취지를 널리 알린 것이었다.

4. ‘with 코로나’ 이후

현재 ‘with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전통예능의 공연 규모 및 시간, 인원수 제한 등은 급속히 ‘before 코로나’로 되돌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전통예능의 대표 격인 가부키 극장에서의 가부키 공연은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전면 휴연 상태였지만, 8월부터 좌석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약 1시간 분량의 공연을 진행하는 ‘4부제’를 실시하여 각 회마다 관객과 출연자 및 무대 관계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공연을 재개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약 2시간 분량의 공연을 진행하는 ‘3부제’로 전환하여 교체 횟수와 그로 인한 부담을 경감했으며 2022년 1월부터는 좌석 수 제한을 전 좌석의 60%대 후반으로, 8월부터는 97.3%까지 완화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6월부터는 가장 저렴한 단막 관람석(一幕見席)을 포함한 전 좌석의 판매를 단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전통예능은 얼핏 예전의 상태를 되찾아 간 것처럼 보인다.

반면 ‘회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면도 있다. 전통예능은 코로나19 범유행 이전부터 애호가(관객이나 실연가의 아마추어 제자 등)의 연령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고령자가 감염되면 특히 빠르게 증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예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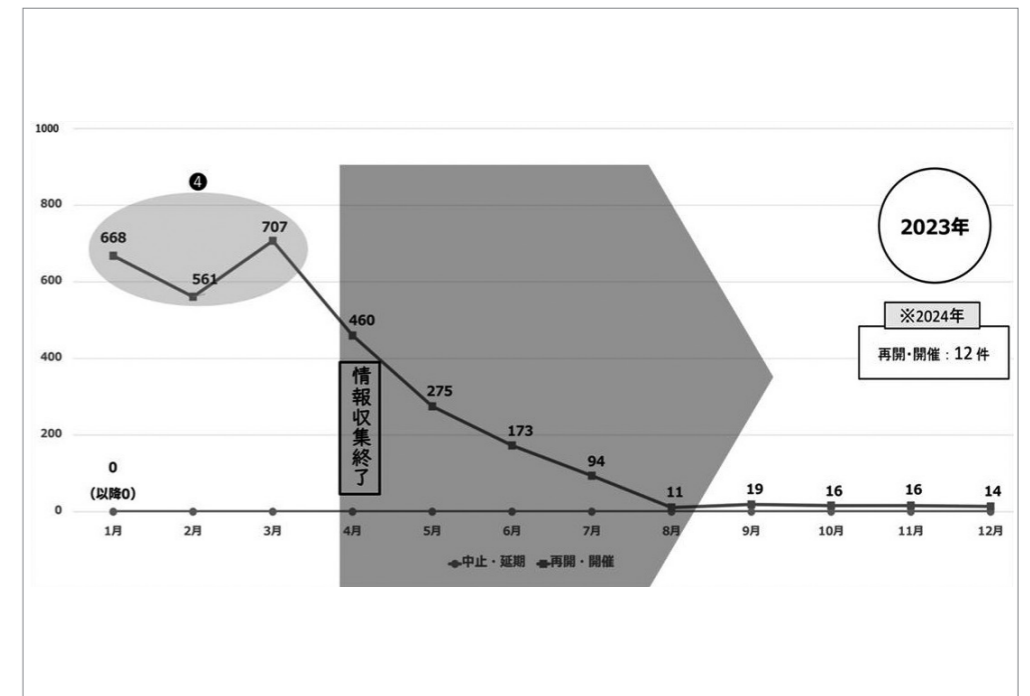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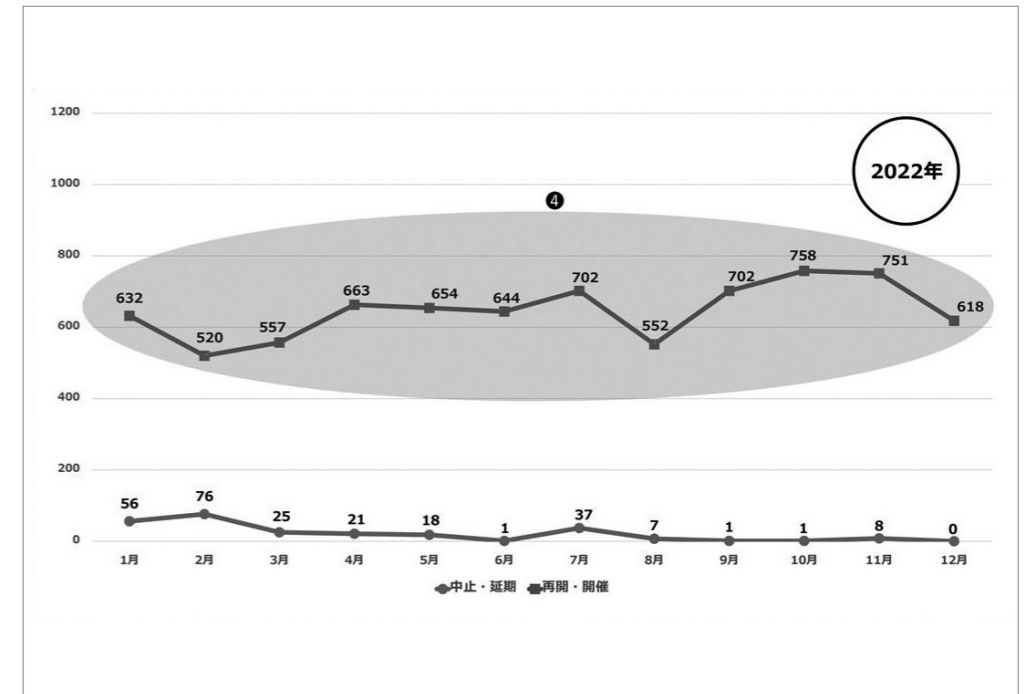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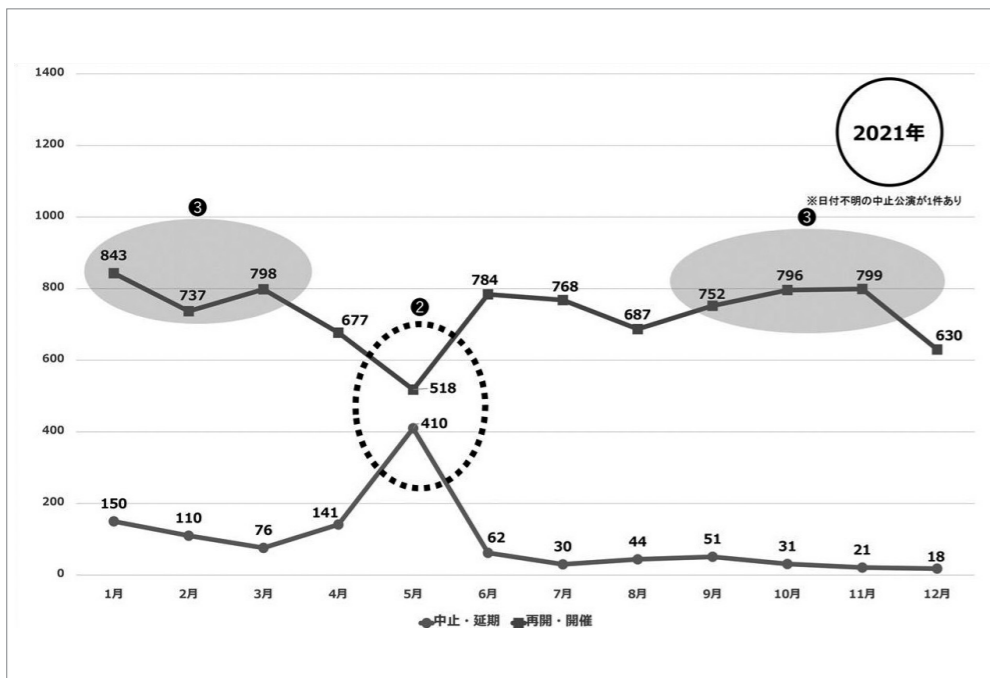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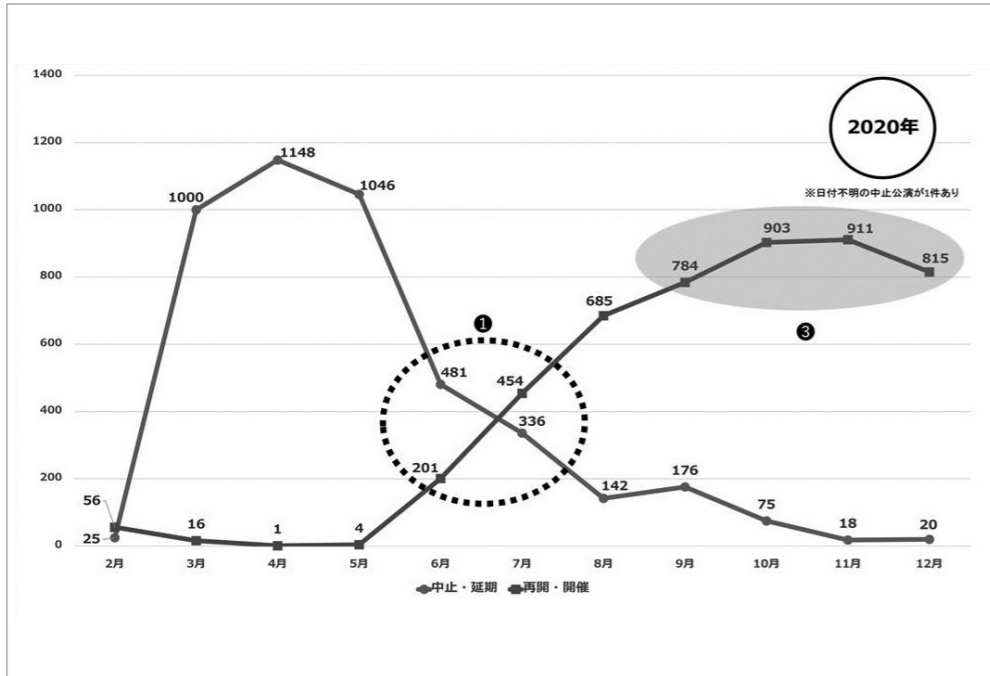
애호가였던 비교적 높은 연령층의 사람들은 최대한 외출을 삼갔고 그러한 상황이 2년, 3년이나 계속되는 동안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평범한 상태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결국 with 코로나로 공연이나 연습이 재개되어도 감상하러 외출하거나 연습을 나가는 일이 줄어서 예전의 습관을 다시 되찾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래서 공연 좌석을 100%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관객 수는 코로나19 범유행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호가들이 연습의 성과를 발표하는 발표회(お祝い会)는 더욱 재개의 움직임이 더디다. 발표회는 스승인 실연가에게도, 악기 제작이나 수리와 관련된 제작자에게도, 그리고 공연장이나 무대 설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예능의 보급 및 계승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동기부여와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동향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범유행에 대한 공적 지원에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자제하자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어서 동영상 전송 등 새로운 송출 방법을 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송출 방법에 대한 공적 지원이 종료된 지금, 확실히 정착되었다거나 보급 및 확대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범유행 시대에는 공적 자금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크라우드 펀딩이 메우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로 인해 크라우드 펀딩의 지명도가 단숨에 상승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지금, 크라우드 펀딩은 앞으로 어떻게 정착해 나갈지, 혹은 일시적인 움직임에 그칠지도 불투명하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2023년 8월 국립과학박물관은 표본을 수집하고 보관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1억엔을 목표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국립박물관이 직면한 본질적인 위기가 세간에도 큰 충격을 안기며 폭 넓은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이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 지 9시간 만에 목표 금액에 도달했고, 2주여 만에 7억엔이 넘는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를 일본 내 다른 박물관을 지원하는 데 충당한다는 방침이 새로 국립과학박물관에서 발표되면서 프로젝트의 향방은 계속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 활동의 지원은 메뉴(목적)에 따라 어떠한 틀에서 실시해 나가야 할까? 혹은 문화 예술의 향유와 계승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할까? 전통예능을 포함한 무형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때는 코로나19 범유행 시대를 빠져나온 지금부터일 것이다. 동시에 코로나19 범유행 시대의 위기 공유와 지원의 확대를 통해 확실한 반응을 이끌어냈던 ‘전통예능을 둘러싼 환경을 포함해 파악하는 시점’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전통예능의 계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또 그 반응을 어떻게 새로운 네트워크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 모두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프> 코로나19 범유행이 전통예능계에 끼친 영향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무형유산 관련 대응과 변화

新型コロナによる韓国無形遺産に関する対応と変化

강경혜·류한선(姜敬惠·柳漢仙)
국립무형유산원(國立無形遺産院)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무형유산 관련 대응과 변화

강경혜·류한선(국립무형유산원)

1. 들어가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휩쓸어 소위 ‘코로나19 팬데믹’을 불러왔다. 한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이 도입되기 전까지 감염확산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 각종 공적·사적 모임을 단계별로 허용 또는 불허하였다. 이 글은 2020년 초부터 2022년 4월까지 국가적 방역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한국의 상황과, 한국의 국가무형유산 그리고 무형유산 전승현장의 대응과 변화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글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짧게 살펴보고, 코로나19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관리하는 문화재청과 보유자·보유단체를 비롯한 전승자들이 어떤 대응을 하고, 전승현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의 현장상황과 그 자료수집에 따른 현장조사의 어려움을 기술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되었고, 이후 WHO(세계보건 기구)는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였다. 모든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갔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¹⁾’를 시행하고,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 교육, 문화, 경제, 각종 시설 등에 대한 행동지침을 내렸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의 2월부터 9월까지의 국민 대다수가 직장파 생필품 구입, 병원 등 최소한

1)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것이다.

생계유지의 활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회적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착되자 교육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사적·공적 모임 등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허용 정도를 정했고, 학교 등은 대부분 원격수업체제로 전환되고, 실내행사 50인 이상 불허, 국공립시설 운영도 잠정적으로 중단·재개를 반복했다. 가족모임, 사적모임 허용인원 수도 단계별로 4~12명으로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단체활동, 동호회 모임을 비롯한 많은 사회적 모임이 축소 운영되었다. 하지만 2021년 여름부터 점차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감염병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2022년 4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었고, 마스크 착용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였다. 한국은 2022년 9월 실외마스크를, 2023년 3월 실내 마스크까지 착용해제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게 되었다.²⁾

2.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관련 대응과 변화

코로나19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전승환경 및 전승자들의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전수교육 및 이수심사, 공개행사 등의 공연·전시 활동 등이 중단되거나 축소·연기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적응하기 위하여 전승활동은 다양한 방식 즉, 공연·전시의 무관중 온라인 생중계, 최소인원의 관람 등으로 변화하였으며, 전수교육은 대면이 불가할 경우는 비대면 교육 방법이나, 온라인 회의 시스템 등을 이용하였다.

1) 전수교육과 전승자 배출

코로나19는 한국의 국가무형유산 개인종목 보유자 120명, 71곳의 보유단체, 이수자 총 7,000여 명 및 다수의 전수자의 전승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2020년 초부터 문화재청(전승자들을 관리하고 전승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인 무형문화재과·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은 전수교육 등 전승활동에 따른 감염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승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신속하게 전달하였다.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보유자·보유단체에 보낸 코로나19 관련 공문만 하더라도 총 24건(무형문화재과 10건, 전승지원과 14건)에 달할 정도였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전수교육 등의 전승활동의 대응과 변화를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수교육과 전승자(이수자) 배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가. 전수교육

무형유산의 특성상 전수교육은 기본적으로 전승자간 대면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전수교육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중단되거나,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전승자 모두 전수교육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³⁾ 전수교육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는 2020년 2월(모든 전수교육 및 전수교육관 활동이 최소화되거나 잠정적으로 중단된 시기)을 제외하고는 3월부터 전수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지침을 보냈다.⁴⁾ '비대면 전수교육'이란 보유자·전승교육사·보유단체가 커리큘럼에 맞게 과제를 제시하면, 이수자나 전수자들이 과제를 습득하고, 숙련하여 동영상이나 온라인(ZOOM) 등으로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모든 보유자·보유단체가 그러한 방식으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았다. 보유자·보유단체는 방역 지침 허용 한도 내에서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대면 혹은 비대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수교육을 유지해나갔다. 전승자들의 전수교육 실태는 2020년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문화재청이 보유자·보유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전후 전승활동 실시현황, 달라진 점, 건의사항 등'의 설문조사에서 잘 파악된다.⁵⁾

조사결과를 보면, 당시 전수교육의 횟수는 2019년도에 비해 절반 이상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전수교육방식도 비대면(2019년 대비, 1%→19%) 교육 또는 양자를 병행하는 교육(3%→32%)으로 변화하였으나, 대면교육을 유지하는 곳이 절반 가까이 되었다. 주로 10명 이상보다는 5명 이내(40%)의 소규모로 교육하고 있었다. 비대면 교육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승자들은 여전히 대면교육을 선호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기능(공예)분야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기능분야의 82%는 코로나19가 종결된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전수교육을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예능분야에서도 54%가 의향은 있으나, 40%는 대면교육을 희망했다.

3) 문화재청은 신협중앙회와 협약을 맺어(2020. 11. 17.) 전수교육관 69개소에 안면인식 체온측정장치의 설치를 지원하였다. 「코로나 19 관련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방역장비 설치 계획 알림」(2020. 12. 21.)

4)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에서는 이를 위하여 두 차례(3월과 8월)에 걸쳐 비대면 전수교육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수교육 관련 협조사항 알림」(2020. 3. 1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전수교육 협조사항 및 전수교육실적 제출 요청」(2020. 8. 25.)

5) 본 설문조사에서는 당시 보유자의 77%(83명), 보유단체의 91%(64곳)가 참여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전승활동 현황 조사 협조 요청」(2020. 8. 6.)

6) 전년도 같은 기간(1~7월) 대비 전수교육 실시횟수가 전년도 15회 미만이 19%였는데 비해, 2020년에는 47%로 증가하였고, 45회 이상 실시는 42%에서 21%로 감소하였다.

비대면 전수교육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는 '영상만으로는 실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하기 어렵다.', '전승자가 고령이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 '작업 환경이 갖춰진 공방에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즉, 공예기술, 전통예술 등에서 대면접촉을 하지 않고서는 습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전승자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2021년도에도 정기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75.9%(44곳)가 대면교육을 선택하였고, 대면·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는 곳은 24.1%(14곳)였으며, 비대면으로만 교육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⁷⁾ 많은 곳에서 비대면 교육방법을 장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대면을 통한 전수교육으로 대부분 복귀하였다. 2022년부터는 전수교육의 방식(비대면과 대면 여부)은 전수교육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전수교육은 이전의 방식으로 복귀하였다.⁸⁾

나. 이수심사 운영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은 보유자·보유단체에게 3년 이상 전수교육 받은 자에 한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매해 40~50종목에서 이수자를 배출한다. 하지만 이수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심사대상자, 심사자(5인), 영상촬영자, 관계자 등 최소 10명 이상 참석해야하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이수심사 운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020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시행계획에서 당해연도 심사대상이 판소리 등 44종목 52건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등의 사유로 15건이 연기되고, 32건이 계획대로 시행되었다. 심사가 연기된 다음 시행되지 않은 경우도 5건이 있었다. 코로나19의 확산 시기에 계획된 이수심사는 개최불가하여 연기된 것이다. 상황은 2021년부터는 나아지기 시작하여 2020년 코로나19로 연기된 종목⁹⁾을 포함하여 당초 종묘제례악 등 51종목 56건 이수심사를 계획하였고, 대부분 계획대로 시행되었다. 시행 47건, 미시행 6건이며, 연기한 종목은 3건에 불과하였다. 연기 사유는 코로나19 확산 상황(2건), 응시자의 개인사정(1건)이었다.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침변화가 매우 역동적이어서 연기되는 종목이 많았으나, 2021년에는 계획대로 원활하게

7)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문서

8) 「국가무형문화재 2021년 전수교육 실적보고서 및 2022년도 전수교육 계획서 제출 독려 안내」(2022. 1. 25.)

9) 2021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시행계획 공고(2021. 1. 28.)

운영되었다. 두 해 모두, 이수심사 또한 비대면 심사는 하지 않았고, 대면심사가 가능한 시기에 진행하였다.

2) '공개행사' 등 공연·전시 활동

코로나19에 따라 보유자·보유단체의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이 중단·연기 조치가 내려진 분야가 바로 공연·전시 등 대국민 행사였다. 전승자가 기획하는 행사는 보통 전년도에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과 개최일정이 대부분 확정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수록 어려움이 컸다. 또한 전승자들의 생업과 직결되는 분야이기도 해서 그만큼의 고충이 따랐다. 이번 절에서는 문화재청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행사인 공개행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은 매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에게 무형유산의 보전·전승 활성화를 위해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기획행사, 찾아가는 행사), 무형문화재 징검다리 교실, 인류무형문화유산 행사, 예능종목(탈춤, 농악, 이북5도 무형문화재) 및 국악 경연대회(관소리, 가야금 등) 등이다.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의 코로나19 대응기간 동안 공연 등의 전승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연기 지침이 내려진 것은 2차례로 2020년 2월 23일부터 2020년 5월 19일,¹⁰⁾ 그리고 2020년 5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였다.¹¹⁾ 이 시기 방역계획서를 미리 제출할 경우는 허용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였다.¹²⁾ 그 외 일정 기간 동안 띄어맞기, 관람객수 제한 등을 통해 행사개최를 허용하였다.¹³⁾ 하지만 세시의례 기간에 진행되는 사회적 의식 등의 행사나, 지자체의 기관과 연계하거나 합동으로 하는 행사는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행사일을 며칠 앞두고 방역지침이 강화되어 확정된 행사일정이 중단되는 일도 많았다. 따라서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에서는 2020년 8월 중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모든 활동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모든 행사를 무관객 행사로 변경하도록 했다. 즉, 2020년 8월 16일부터 공연은 무관객으로 진행하고, 공연 영상물은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경보 상황에 따른 협조 및 당부사항」(2020. 2. 27.)

11)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행사 운영 재개 알림」(2020. 7. 22.)

12)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지역 국고보조사업 전승활동 행사 운영 방안 알림」(2020. 5. 29.)

13) 「코로나19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전승활동 행사 지침 알림」(2020. 5. 7.) 월별 공개행사 실시 현황은 1월 3건, 2·3월 1건, 4월 0건, 5월 3건, 6월 16건, 7월 13건, 8월 19건, 9월 36건, 10월 51건, 11월 24건, 12월 2건이다.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20년 공개행사 총 178건 중 137건이 무관중으로 진행하였고, 32건이 최소 인원수의 관람, 취소는 9건이었다. 영상촬영에도 어려움은 있었다. 대부분의 보유자·보유단체가 영상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영상의 퀄리티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영상은 예능종목에 한하여 공개행사 모니터링 사업에서 제작 지원하였다.¹⁴⁾ 기능종목의 경우는 보통 합동으로 공개행사를 진행하였으나, 모객이 어려워 취소하였다. 2021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다소 완화되어 총 183건 중 유관중 98건, 무관중 81건, 취소 4건¹⁵⁾으로 무관중 비중이 예년에 비해 매우 감소하였다. 2022년에는 예전의 상황을 완전히 회복하여 공개행사는 총 190건 중 188건 실시(취소 2건), 그 중 1건만 무관중으로 실시하였다.¹⁶⁾

연도	종목명(보유자·보유단체)	내용
2020	은산별신제 (은산별신제보존회)	공개행사는 약식 진행함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광주칠석고싸움놀이보존회)	공개행사 일정을 연기하다가 취소하였으며, 체험교육도 모두 취소함
	강릉단오제 (강릉단오제보존회)	공개행사를 무관중으로 실시하고, 해당 영상에 연구자 해설을 첨가하여 누리집에 공개함
2021	소반장 (보유자 추용호)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방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음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	매년 삼일민속문화향상회 주관의 3.1 민속문화제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공개행사를 개최했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명예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이수자 18명, 전수자 4명, 인턴 2명, 주민 등 99명만이 참가해 연행함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광주칠석고싸움놀이보존회)	코로나19로 2020년 공개행사는 취소되었으며, 2021년에도 몇 차례 일정변경을 한 뒤에 개최함(매월 1회 전승교육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나 2021년은 코로나19로 1회밖에 진행하지 못함)

14)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및 모니터링 사업 실적보고서」 문서

15)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및 모니터링 사업 실적보고서」 문서

16)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문서

3. 코로나19에 따른 무형유산 조사현장 현황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2016.3월)으로 무형유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017년부터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를 전국적으로 추진해왔다.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는 무형유산의 전승현황과 가치를 파악하고자, 목록수집, 현장조사, 심화연구의 세단계로 진행되며, 주로 현재적 전승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에서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는 현장조사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다.

1) 농경·어로 관련 현장조사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2020년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농경·어로 분야(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참여연구진이 현장에서 조사대상자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농촌의 마을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인터뷰 약속도 잡기 어려웠다. 인터뷰 약속을 잡아도, 실내에서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에 집중할 수 있었던 코로나19 소강기간이 6월경이었는데, 이 기간은 해당 지역에 장마, 태풍 등의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현장조사가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사업기간이 2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연구진은 별도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연구진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연구 인원을 늘리고, 조사항목을 배분하여, 코로나19가 소강되는 시기에 단기간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자료가 아니더라도 기존 연구성과나 면담자료를 입수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민간신앙 관련 현장조사

2021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의 현장조사 대상은 서울·경기, 강원, 충남, 충북 지역의 민간신앙이었다. 2020년 농경·어로 분야의 현장조사는 주민들의 생업기술 위주의 조사였기 때문에, 그나마 전승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동계 위주의 사회적 의식 분야의 활동은 그렇지 않았다. 동계는 마을을 지켜주는 동신에게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기원하는 제의로서¹⁷⁾

17) <https://encykorea.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일반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모여 행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많은 마을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해당연도만 취소하거나 아예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개 소수 인원 참가, 절차 생략 등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거나 제의 후에는 음복이나 마을잔치 등의 부대행사는 생략하였다. 오히려 코로나19 등의 전염병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려면 동계를 잘 지내야한다고 생각하는 마을도 있었다.

명칭	코로나19 관련 내용
서울 마포나루굿	• 2020-2021년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
경기 용인 초부리 산지사(산제사)	• 2020-2021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내지 못함
경기 안산 팔곡동 당산제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지내지 않았으며, 2021년에는 주민들만 참석하여 조용히 지냄 (마을잔치는 생략함)
서울 녹천 도당제	• 2020년 코로나19로 지내지 않았으나, 2021년에도 지내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소규모로 지냄
서울 답십리동 도당제(장령당제)	• 2020년 코로나19로 굿은 생략하고, 유교식 제사만 지냄 • 2021년 공식적으로 도당제를 지내지 못하고 마을 주민 몇 명만 모여 간단히 준비한 제물만 올려 제사를 지냄
경기 의왕 왕곡동 산신제	• 2020-2021년 모두 마을회관에서 약식으로 산신제를 지냄
강원 홍천 도관1리 무후제	•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최소 인원이 모여 제사를 지냄 • 2021년도에는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는 음복자리도 일찍 마무리함
충북 단양 향산리 서낭제	• 2020-2021년은 제를 지냈으나, 코로나19로 음복은 생략함
충북 충주 화천리 산신제와 동신제	•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제는 지냈으나, 동네잔치는 생략함
서울 전농동 부군당제	•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유지하려고 함
경기 안산 장상동 산치성(산제사)	• 2020-2021년 모두 산치성(산제사)을 지냄
충남 예산 조곡1리 산신제	• 2020-2021년 코로나19이지만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며 산신제를 지냄

이러한 양상은 일부 연구자의 논문에서도 살필 수 있다. 박종익(2021)은 내포지역 벚가릿대 [禾竿] 관련 연구에서 2020~2021년 코로나19 창궐로 벚가릿대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2019년에는 30여 곳의 마을이 벚가릿대를 전승했으나 이후 대부분 중단했으며, 2020년 6곳, 2021년 8곳만 시행했다. 당시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마을회관을 잠정폐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집회나 민속행사 또한 취소하라는 지침의 영향이 컸다. 마을 또한 행사를 지자체나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치르기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부 공동체는 풍농과 마을의 안녕을 축원하는 벅가릿대 행사를 추진하되, 행사 후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척사 대회나 집단회식(동네잔치)만 취소하기도 했는데, 연구자는 당시 마을 주민들이 행사는 추진하면서도 방역지침은 따르는 모습에서, 마을의 전통 고수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혜로운 면모를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¹⁸⁾

4. 맺음말

코로나19의 기간 동안 국가무형유산은 문화재보호법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된 이후,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다. 무형유산이 세대를 이어가며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고,¹⁹⁾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전승되는 인적 전승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본래의 전승형태에서 다소 달라진 교육방법으로 전승을 지속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수교육은 비대면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공연은 무관중 또는 인원제한, 띄어앉기 등을 준수하였다. 마을의 제의문화도 중단·축소되었다. 하지만, 전승의 형태에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전승 자체가 중단된 곳은 거의 없었으며, 코로나19가 소멸되기 시작한 2021년도 말부터는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 비대면 온라인 학습방법 보다는 대면교육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무형유산의 전승방법에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면교육이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재청이 지원한 전수교육, 공개행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코로나19 대응을 살펴본 것이기에 그 이외의 활동 영역(지자체, 보유자·보유단체 자체활동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코로나19 시기 입회, 탈퇴 등의 전수자 변동 사항까지 파악이 되어야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추후를 기약하고자 한다.

18) 박종익, 「내포지역 벅가릿대 민속의 현장 연구 -벅가릿대 세우기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42(광주: 남도민속학회, 2021).

19) <https://www.nihc.go.kr/index.9is?contentUId=ff8080816f40a80f016f7eace88f0d6b&subPath=국립무형유산원-소개-인사말>

新型コロナによる 韓国無形遺産に関する対応と変化

姜敬惠·柳漢仙(國立無形遺産院)

1.はじめに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以下「新型コロナ」)は、新種の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呼吸器感染症であり、2020年から2022年にかけて韓国や日本をはじめ全世界に拡大して、いわゆる「新型コロナパンデミック」を招いた。韓国は、新型コロナ予防のためのワクチンが導入されるまで、感染拡大防止のために徹底した「社会的な対人距離の確保」を実施し、各種の公的・私的な集まりを段階別に許可または不許可とした。本稿は、2020年の初めから2022年4月にかけて国家防疫指針に従い徹底した対策をとった韓国の状況と、韓国の国家無形文化財や無形遺産の伝承現場における対応と変化に関する記録である。はじめに、韓国における新型コロナの状況を簡単に整理し、新型コロナにおいて国家無形文化財を管理する文化財庁や保持者・保持団体をはじめとする伝承者がどのように対応し、伝承状況がどのように変化したのか、また共同体における伝承無形遺産の現場の状況や資料収集に伴う現場調査の問題点について説明する。

韓国では2020年1月20日、新型コロナの陽性者が初めて報告され、その後、WHO(世界保健機関)は新型コロナの大流行(pandemic)を宣言した。状況は深刻さを極めていた。政府は、新型コロナの拡大防止のために「社会的な対人距離の確保」¹⁾を実施し、感染症拡大の程度に応じて教育、文化、経済、各種施設などに対する段階別の行動指針を定めた。新型コロナの発生初期であった2020年の2月から9月までは、大多数の国民が仕事や生活必需品の購

1) 「社会的な対人距離の確保」とは、地域社会における感染を防止するために実施された政府からの勧告であり、新型コロナの拡大を防ぐために対人距離を維持する感染管理措置またはキャンペーンを指している。

入、病院など最小限の生計維持活動を除き、ほとんどの社会活動の中断を余儀なくされた。「社会的な対人距離の確保」が定着する中で、教育施設、スポーツ施設、遊興施設、私的・公的な集まりなどについては段階別に許可の程度が定められ、学校などは大半がリモート授業体制へと移行された。また、50人以上の室内行事は許可されず、国公立施設の運営も暫定的に中断・再開を繰り返した。家族や私的な集まりの許可人数も4~12人までと段階的に制限が加えられ、団体活動や同好会など多くの社会的な集まりは縮小して運営された。しかし、2021年夏から徐々にワクチン接種率が上昇し、感染症の拡大傾向が落ち着きを見せたことで、2022年4月から「社会的な対人距離の確保」が全面解除され、マスクの着用などを除いて新型コロナ前の日常にほぼ回帰した。韓国では2022年9月に屋外でのマスク着用義務が、また2023年3月に室内でのマスク着用義務が解除され、新型コロナの大流行は収束に向かった²⁾。

2. 新型コロナによる国家無形遺産に関する対応と変化

新型コロナによって、国家無形文化財の伝承状況および伝承者の活動にも多くの変化が生じた。国家防疫指針によって伝授教育および履修審査、公開行事などの公演・展示活動などが中断、縮小・延期された。しかし、新型コロナの状況に適応するため、伝承活動は様々な方式—公演・展示の無観客オンライン生中継、最少人数による観覧など—へと変化し、伝授教育では、対面が不可能な場合に非対面教育方式やオンライン会議システムなどを利用した。

1) 伝授教育と伝承者の輩出

新型コロナは、韓国の国家無形文化財の個人種目保持者120人、71の保持団体、履修者計7,000人余りおよび多数の被伝授者への伝承活動に直接の影響を与えた。2020年の初めから文化財庁(伝承者を管理して伝承活動を支援する部署である無形文化財課・国立無形遺産院 伝承支援課)は、伝授教育などの伝承活動に伴う感染拡大を未然に防止し、伝承者の混乱を最小限に抑えるため、新型コロナへの対応指針を迅速に定めた。2020年2月から11月までに保持者・保持団体に送付した新型コロナ関連の公文書だけでも、計24件(無形文化財課10件、伝承

2) 感染リスクの高い施設のうち、入所施設、医療機関、薬局(大型施設内にある、ドアやガラスで仕切られていない薬局は義務免除)では、室内でのマスク着用の義務が継続される。

支援課14件)に達した。伝授教育など伝承活動における新型コロナ関連の対応や変化については、保持者・保持団体の伝授教育と伝承者(履修者)の輩出などを中心に考察する。

A. 伝授教育

無形遺産の性質上、基本的に伝授教育は伝承者により対面での指導がなされる。しかし、伝授教育も「社会的な対人距離の確保」による中断や限定的な許可により、文化財庁や伝承者は伝授教育の方法を様々な角度から模索した³⁾。伝授教育を管理している国立無形遺産院伝承支援課は、2020年2月(すべての伝授教育および伝授教育館の活動が縮小または暫定的に中断された時期)を除いて、3月から伝授教育を非対面で実施するよう指針を送付した⁴⁾。「非対面伝承教育」とは、保持者・伝承教育士・保持団体がカリキュラムに合わせて提示した課題を、履修者や被伝授者が習得して熟達し、動画やオンライン(ZOOM)などで映像や写真などを送信する方式である。しかし、すべての保持者・保持団体がこの方式を導入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かった。保持者・保持団体は、防疫指針で許可された範囲内での少人数を対象とした教育の実施や対面や非対面を並行する方式で伝授教育を継続していった。伝承者の伝授教育の実態は、2020年8月6日から8月27日まで文化財庁が保持者・保持団体を対象として実施した(2020年1月から7月までの)「新型コロナ前後の伝承活動の実施状況、変化した点、提案事項など」のアンケート調査を通じて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⁵⁾。

調査結果によれば、当時の伝授教育の回数は、2019年度に比べて半分以上の大幅な減少がみられた⁶⁾。伝授教育の方式も、非対面(2019年比、1%→19%)または対面と非対面の並行(3%→32%)へと変化したが、対面教育を継続する所が半数近くに上った。主に10人以上ではなく、5人以内(40%)の少人数で教育が行われていた。非対面教育が勧められ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

3) 文化財庁は、信用協同組合中央会と協約を結び(2020.11.17.)、69か所の伝授教育館で顔認証型の体温測定装置の設置を支援した。「新型コロナに伴う無形文化財伝授教育館への防疫システム設置計画のお知らせ」(2020.12.21.)

4) 国立無形遺産院 伝承支援課では、2回(3月と8月)にわたって非対面による伝授教育を要請する公文書を発送した。「新型コロナの拡大に伴う伝授教育に関する協力事項のお知らせ」(2020.3.18.)、「社会的な対人距離の確保第2段階への引き上げに伴う伝授教育に関する協力事項および伝授教育実績提出のお願い」(2020.8.25.)

5) 本アンケート調査には、当時の保持者の77%(83人)、保持団体の91%(64か所)が参加した。「新型コロナに伴う伝承活動の現状調査に関する協力お願い」(2020.8.6.)

6) 前年度の同期間(1~7月)と比較した伝授教育の実施回数は、前年度は15回未満が19%だったのに対して、2020年には47%へと増加し、45回以上の実施は42%から21%へと減少した。

ならず、伝承者たちは依然として対面教育を希望した。特に、このような傾向は技能(工芸)分野でより多くみられた。技能分野の82%で、新型コロナの終息後は非対面で伝授教育を行う意向がないと回答した。芸能分野でも、54%が意向はあるものの40%は対面教育を希望した。非対面の伝授教育を選択しない理由としては、「映像だけでは実力を確認しづらい」、「細かい部分まで指導できない」、「伝承者が高齢でデジタル環境に慣れていない」、「作業環境が整った工房が使えない」などと述べた。つまり、工芸技術や伝統芸術などは対面指導でなければ習得が難しい部分があると伝承者は回答した。

2021年度の定期調査の結果報告によれば、75.9%(44か所)が対面教育を選択し、対面・非対面教育を並行したのは24.1%(14か所)で、非対面のみで教育を行った所は1か所もなかった⁷⁾。多くで非対面の教育方式が定着したにもかかわらず、新型コロナの終息後、そのほとんどは対面による伝授教育に戻った。2022年からは、伝授教育の方式(非対面または対面)を伝授教育の主体が自主的に決定することになり、伝授教育は以前の方式へと戻っていった⁸⁾。

4. 履修審査の運営

文化財庁(国立無形遺産院)は、保持者・保持団体が3年以上の伝授教育を受けた者に限り、一定の審査を経て履修証を発行しており、毎年40～50種目で履修者を輩出している。しかし、履修審査には審査対象者、審査者(5人)、映像撮影者、関係者など少なくとも10人以上が参加する必要があるため、新型コロナは履修審査の運営に多くの影響を与えた。2020年の国家無形文化財の履修審査実施計画において、当該年度の審査対象はパンソリ(歌い手と鼓手の2人による口承文芸)など44種目52件だったが、新型コロナの拡大などの理由により15件が延期され、32件が計画どおり実施された。審査が延期され、実施されなかったものも5件存在した。新型コロナの拡大中に計画された履修審査は、開催できずに延期された。2021年からは状況が改善し、2020年に新型コロナによって延期された種目⁹⁾を含め、宗廟祭礼楽など51種目56件の履修審査が計画され、ほとんどが計画どおりに実施された。実施は47件、未実施は6件であり、延期された種目は3件にとどまった。延期理由は、新型コロナの拡大(2件)、受

7) 「2022年 国家無形文化財の定期調査結果」文書

8) 「国家無形文化財2021年伝授教育実績報告書および2022年度伝授教育計画書の提出奨励案内」

9) 2021年度 国家無形文化財履修審査実施計画公告

験者の個人的な事情(1件)だった。2020年は新型コロナに伴う指針の変更が頻繁に行われた関係で、延期される種目が多かったが、2021年には計画どおり円滑に運営された。両年とも、履修審査においても非対面審査は行われず、対面審査が可能な時期に実施された。

2) 「公開行事」など公演・展示活動

保持者・保持団体の活動のうち、新型コロナによって最も多く中断・延期措置がとられた分野は、公演・展示などの国民向け行事であった。伝承者が企画する行事は通常、前年度に計画が策定され、予算や開催日程が確定する機会が多いため、新型コロナの継続により状況は困難を極めた。また、伝承者の生業と直結する状況は伝承者たちを悩ませた。本節では、文化財庁から国費の支援を受けて推進する行事である公開行事を中心に考察する。

文化財庁(国立無形遺産院)は毎年、国家無形文化財の保持者・保持団体に対し、無形遺産の保全・伝承活性化のため、行事にかかる費用を支援している。主な行事としては、国家無形文化財の公開行事、伝承者主管の伝承活動(企画行事、訪問行事)、無形文化財架け橋教室、人類無形文化遺産行事、芸能種目(タルチュム(仮面劇)、農楽(農村で行われる楽舞)、以北五道(北朝鮮)無形文化財)および国楽競演大会(パンソリ、伽耶琴など)などがある。2020年から2022年4月までのコロナ禍中に、2020年2月23日から2020年5月19日¹⁰⁾、2020年5月29日から7月19日までの2回、公演などの伝承活動の全面的な中断・延期措置がとられた¹¹⁾。この時期には、防疫計画書を事前に提出することで開催が許可されていたが、やむを得ない場合に限られていた¹²⁾。それ以外の期間中は、間隔を空けた座席配置、観覧客数の制限などを行うことで行事の開催が許可された¹³⁾。しかし、歳時儀礼の期間に行われる社会的儀式などの行事や、自治体の機関と連携して行う行事や合同で行う行事は中止されることもあった。また、行事の数日前に防疫指針が強化され、確定していた行事日程が中断されることも多かった。したがって、文化財庁(国立無形遺産院伝承支援課)では2020年8月中旬の新型コロナの再

10)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危機警報引き上げに伴う協力および注意事項」(2020.2.27.)

11) 「新型コロナ関連の首都圏所在の公共施設・行事運営再開のお知らせ」(2020.7.22.)

12) 「新型コロナ関連の首都圏地域における国庫補助事業伝承活動行事運営方案のお知らせ」(2020.5.29.)

13) 「新型コロナ関連の『生活における対人距離の確保』施行に伴う国庫補助事業伝承活動行事指針のお知らせ」(2020.5.7.) 公開行事の月別実施状況は、1月3件、2-3月1件、4月0件、5月3件、6月16件、7月13件、8月19件、9月36件、10月51件、11月24件、12月2件である。

拡大によって、すべての活動に対する中断措置がとられたのに伴い、すべての行事を無観客に変更することとした。それで2020年8月16日から公演は無観客で行われ、公演の映像が国立無形遺産院ホームページと国家無形文化財伝承支援統合プラットフォームを通じて国民に公開されることになった。

その結果、2020年に開催された計178件の公開行事のうち137件が無観客で行われ、最少人数による観覧が32件、中止は9件だった。映像撮影も容易ではなかった。ほとんどの保持者・保持団体が映像装置を備えておらず、映像のクオリティも考慮する必要があったため、映像は芸能種目に限って公開行事モニタリング事業により制作が支援された¹⁴⁾。技能種目の場合は通常、合同で公開行事を開催していたが、集客が難しく中止された。2021年にはこのような状況がやや緩和され、計183件のうち、有観客98件、無観客81件、中止4件¹⁵⁾と、無観客の割合がそれまでに比べて大幅に減少した。2022年には以前の状況まで完全に回復し、計190件の公開行事のうち188件が実施(中止2件)され、そのうち1件のみ無観客で実施された¹⁶⁾。

年度	種目名(保持者・保持団体)	内容
2020	恩山別神祭 (恩山別神祭保存会)	公開行事は略式で開催
	光州漆石コッサウムノリ (光州漆石コッサウムノリ保存会)	公開行事は延期の末に中止、体験教育もすべて中止
	江陵端午祭 (江陵端午祭保存会)	公開行事を無観客で実施、当該映像に研究者による解説を追加してホームページに公開
2021	小盤匠 (保持者チュ・ヨンホ)	一般人を対象に工房で行われる行事は、新型コロナのため中断
	小盤匠 (保持者チュ・ヨンホ)	毎年、三一民俗文化向上会の主管による3.1民俗文化祭のプログラムの1つとして公開行事を開催していたが、2021年は新型コロナのため参加人数が制限され、名誉保持者と伝承教育士、履修者18人、被伝授者4人、インターン2人、住民など99人のみが参加
	光州漆石コッサウムノリ (光州漆石コッサウムノリ保存会)	新型コロナにより2020年の公開行事は中止、2021年は数回の日程変更後に開催(毎月1回、伝承教育士が集まって会議を行うが、2021年は新型コロナで1回のみ開催)

14) 「2020年国家無形文化財公開行事支援およびモニタリング事業実績報告書」文書

15) 「2021年国家無形文化財公開行事支援およびモニタリング事業実績報告書」文書

16) 「2022年国家無形文化財公開行事支援事業実績報告書」文書

3. 新型コロナによる無形遺産の調査現場の現状

文化財庁(国立無形遺産院)は、「無形文化財の保全および振興に関する法律」の施行(2016年3月)による無形遺産の範囲拡大に伴い、2017年から<韓国無形遺産総合調査>を全国で推進してきた。<韓国無形遺産総合調査>は、無形遺産の伝承状況と価値を把握するために目録収集、現場調査、研究の深化の3段階で進められ、主に現在の伝承状況を把握するため直接、現場でデータを収集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この点で、新型コロナは現場調査事業の推進に多大な支障をもたらした。

1) 農耕・漁労に関する現場調査

2020年2月から始まった2020年度の韓国無形遺産総合調査農耕・漁労分野(ソウル、仁川および京畿道)事業における最も大きな問題は、参加する研究陣が現場で調査対象者に会う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った。特に農村部では、外部からの人の立ち入りを好まず、インタビューの約束を取り付けることも簡単ではなかった。インタビューの約束ができて、室内で話をすることは歓迎されなかった。また、新型コロナが落ち着きを見せた6月頃に集中して現場調査を実施することができたが、この期間は当該地域で梅雨、台風などによる水害が発生して現場調査はより困難を極めた。しかし、事業期間が2月から12月までと定められているため、研究陣は別途の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だった。研究陣は新型コロナの長期化に伴い、研究人員を増やして調査項目を配分し、新型コロナが落ち着く時期に短期間で調査を終えられるようにした。国立無形遺産院は、この事業に参加した研究者の状況を考慮し、現在の資料ではなくても、既存の研究成果や面談資料を入手して最大限活用できるようにした。

2) 民間信仰に関する現場調査

2021年の韓国無形遺産総合調査の現場調査は、ソウル、京畿道、江原道、忠清南道、忠清北道地域の民間信仰に関するものだった。2020年の農耕・漁労分野の現場調査は、住民が生業としている技術を中心とした調査だったため、ある程度は伝承が継続されていたが、洞祭を中心とした社会的儀式分野の活動は難局に立たされていた。洞祭とは、地域を守ってくれる洞神に対して地域住民が共同で祈願する祭儀であり¹⁷⁾、一般的に地域住民が集まって行

17) 「韓国民族文化大百科辞典」

われるため、新型コロナによる直接の影響を受けた。多くの地域で新型コロナへの対応として、当該年度の中止や完全に中断するケースもあった。多くの場合、少人数の参加や手順の省略などにより縮小して開催され、祭儀後の直会や地域の宴会などの付帯行事は省略された。しかし、新型コロナなどの伝染病から地域を守るには、むしろ洞祭をきちんと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地域もあった。

名称	新型コロナ関連対応
ソウル市 麻浦ナルクッ	・ 2020～2021年は新型コロナのため行事は中止
京畿道 龍仁市 草扶里 サンジサ(山祭祀)	・ 2020～2021年は新型コロナの流行により実施できず
京畿道 安山市 八谷洞 堂山祭	・ 2020年は新型コロナのため実施せず、2021年は住民のみの参加で肅々と執り行う(地域の宴会は省略)
ソウル市 鹿川 都堂祭	・ 2020年は新型コロナのため実施しなかったが、2021年は執り行わない訳にはいかないと いう意見があり小規模で実施
ソウル市 踏十里洞 都堂祭(掌令堂祭)	・ 2020年は新型コロナのためクッ(シャーマニズムの儀式)は省略し、儒教式の祭祀のみ実施 ・ 2021年は公式には都堂祭を実施できず、数人の地域住民のみが集まって簡単に準備した 供物を捧げて祭祀を実施
京畿道 義王 旺谷洞山神祭	・ 2020～2021年は新型コロナのため最少人数が集まって祭祀を実施 ・ 2021年度は参加者全員が参加する直会も早めに終了
江原道 洪川 道寛1里無後祭	・ 2020～2021年は新型コロナのため最少人数が集まって祭祀を実施 ・ 2021年度は参加者全員が参加する直会も早めに終了
忠清北道 丹陽 香山里 城隍祭	・ 2020～2021年は祭祀を実施したが、新型コロナのため直会は省略
忠清北道 忠州 花泉里 山神祭と洞神祭	・ 2020～2021年は新型コロナのため祭祀のみで地域の宴会は省略
ソウル市 典農洞府君堂祭	・ 2020～2021年ともに山致誠(山祭祀)を実施
京畿道 安山 章上洞 山致誠(山祭祀)	・ 2020～2021年ともに山致誠(山祭祀)を実施
忠清南道 礼山 鳥谷1里 山神祭	・ 2020～2021年は新型コロナの中、防疫指針を最大限に遵守して山神祭を実施

このような動向は、一部の研究者の論文でも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パク・ジョンイク(2021年)は、内浦地域のナッカリデ(禾竿)に関する研究において、2020～2021年のコロナ禍で禾竿の伝承が断絶される危機に直面したと述べている。2019年には30か所余りの地域で禾竿の伝承が行われていたが、そのほとんどが中断され2020年は6か所、2021年は8か所のみで

行われた。当時、感染症の感染拡大防止のため地域会館が暫定的に閉鎖されたことや住民が参加する集会や民俗行事も中止する旨の指針が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地域もまた、行事を自治体や関係機関の支援を受けて行っていたため、中止せざるを得なかった。しかし、一部の共同体では豊作や地域の平和を祈願する禾竿行事を推進したが、行事の後で多数の人が集まるユンノリ(すごろく)大会や会食(地域の宴会)のみ中止したケースもあった。当時、研究者は地域住民が行事を推進しつつも防疫指針に従い、懸命に地域の伝統の保護しようとする様子について報告している¹⁸⁾。

4. まとめ

コロナ禍で国家無形文化財は、文化財保護法により法的保護を受けてから初めて、未曾有の事態に見舞われた。無形遺産は世代を超え時代に合わせて変化する「生きた文化遺産」¹⁹⁾であり、人と人が出会って伝承される人的伝承遺産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新型コロナの「社会的な対人距離の確保」のため、本来の伝承形態からやや変化した教育方法により伝承が継続された。上記のように、コロナ禍における伝授教育は非対面教育が主流となり、公演は無観客または人数制限、間隔を空けた座席配置などを遵守して行われた。地域の祭儀文化も中断・縮小された。しかし、伝承の形にやや変化があったものの、伝承自体が中断された所はほとんどなく、新型コロナが収束し始めた2021年度末からは以前の姿を取り戻した。非対面のオンライン学習よりも対面教育を望む声が多かったことから、無形遺産の伝承方法において、直接顔を合わせて行われる対面教育が重要であることが分かる。

本研究は、文化財庁が支援した伝授教育、公開行事などの資料をもとに、2020年から2022年までの新型コロナへの対応を調査したものであり、それ以外の活動領域(自治体、保持者・保持団体の自主活動など)については追加の研究が必要である。加えて、新型コロナの時期における入会、脱退など被伝授者の変動事項を把握することで、新型コロナが及ぼした影響を総体的に確認できると考えられる。その点に対する研究については、後日を期すこととしたい。

18) パク・ジョンイク、「内浦地域における禾竿民俗の現場研究 - 禾竿の継続と変化を中心に -」、『南道民俗研究42』、2021。

19) 「国立無形遺産院 - 紹介 - ご挨拶」

한·일 무형문화유산 연구 Ⅲ 韓日無形文化遺產研究

企劃 大韓民國文化財庁
國立無形遺產院(大韓民國)
獨立行政法人國立文化財機構
東京文化財研究所(日本)

總括 梁鎭潮(調查研究記錄課 課長)

編集 方劭蓮(學藝研究官)
姜敬惠·孫賢基(學藝研究士)

校訂 柳漢仙(研究員)

發行日 2023年 11月 28日

發行 國立無形遺產院 調查研究記錄科
〒55101 全羅北道 全州市 完山區 棲鶴路 95
TEL 063-280-1400 <http://www.nihc.go.kr>

발행번호 11-1550246-000115-01

I S B N 978-89-299-3000-4 93600

저작권자 © 2023 국립무형유산원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by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ll rights reserved including
the rights of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 in any form Printed in Korea

Paper	표지 : 매직롬마(220g) 면지 : 스타라이트(120g) 내지 : 뉴플러스(100g)	Color	표지 / C : 3%, M : 5%, Y : 30% 형암, 먹박 내지 / K : 100%, 블랙 : Brown(C : 43%, M : 53%, Y : 88%)
-------	--	-------	--

